

자유통일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국가상 포럼
[사] 역사연구원 제12차 학술세미나

독립 - 민주화 - 통일 운동과 지향한 국가사회상

- 일시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406호(충무로역 7번출구)



- 함께 하는 곳 : 공주대 한국역사교육연구소, 국사교과서연구소, 낙성대경제연구소, 리박스쿨,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이승만학당, 청계역사연구소, 청구역사연구소,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변, 헌변, 물망초,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역연) 등

<모시는 말씀>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과거사 정리는 정부 정책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지나온 과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허물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없애면 됩니다.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역사를 외면하면 역사도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일제 하 독립운동에서 선열들의 길은 달랐고, 대한민국 수립 후 민주화운동의 길은 달랐으며, 분단 후 줄곧 꿈꾼 통일운동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은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이 달랐습니다. 이것들을 정치적·학술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역사는 뒤틀리게 됩니다.

얼마 전 홍범도의 유해를 국내로 반입해온 것이나,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은 어떤 국가사회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요? 김일성 추종자 윤이상을 추모하는 음악제를, 중공군의 진군가를 지은 정율성을 왜 이 땅에서 기리는가요? 예술은 국경이 없어도 예술가는 국적이 있습니다. 제주4.3남로당 반란을 두고 꿈을 먼저 꾸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꾸은 꿈은 무엇인가요?

종교는 믿은 후 알고, 학문은 알아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학술활동을 통해 역사적 진실, 실체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를 분간하지 않으면 후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다음세대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아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면 그 나라는 쇠퇴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국회가 법으로 역사를 차단해두면 정부가 하는 일은 뒤틀릴 것이고, 장차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들의 후손들은 더더욱 원통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로서 인간을 한낱 물질, 고깃덩어리로 보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떠올려보면 5.18 당시 필자가 참가했던 데모대의 시위 구호나 노래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였습니다. 무신론자인 그들에게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이 주도되어 만든 관련법은 4.3은 제주의 법원과 행정관서가, 5.18은 광주의 법원과 행정관서가 위법 여부와 유공 여부를 가리도록 해두었습니다. 6.25에서 민간인 학살도 군경에 의한 죽임만을 보상·배상하도록 법이 편파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적군이 아니라 아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자만 늘어나고 있다. 헛소문이길 바라지만 4.3은 초기 1700명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을 늘리니 오늘날 140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3-4인이 결탁하여 인우보증으로 범법자는 무죄가 되고, 급기야는 국가유공자가 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이 나라의 돈을 타내서야 쓰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법과 정부가 잘못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나라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는 쇠퇴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보상을 한다면, 당연히 유공자 여부는 중앙정부(보훈처, 6월부터 보훈부)의 임무여야 합니다. 보훈부는 먼저 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직접 실시하여 나라의 정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병원, 대전형무소 등 공산군에 의한 학살은 급기야 군경에 의한 것으로 둔갑할 것입니다. 동학봉기도 구국운동으로 배·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 왜곡은 계속될 것입니다. 입법독재 야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남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뒤틀리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일은 권선징악이 최우선입니다. 죄를 지어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거짓을 일삼게 되고, 우리나라는 부정직과 거짓,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쇠망'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길이 달랐던 독립운동, 결이 다른 민주화운동, 꿈이 다른 통일운동이 지향한 국가사회상을 갈래 구분하는 학술대회(4.28. 오후2시~, 한반도선진화재단)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정직해지고, 정부는 시비와 정오, 진위를 잘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나라에서 굳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자는 직과 간첩 5만 명, 자생간첩 15만 명,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국내 중국국적 조선족 70만 명과 그 주변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구한말과 6.25사변 이후 세계최빈국이었던가 산업화로 중진국이 되었고, 지능정보화로 드디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각종 자유와 경제적 평등 및 삶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 아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박

정희 모델은 여러 개도국의 국가발전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일파로 독재자로만 가르치는가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독재자-희생자,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에 가두는 사람은 누군가요?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천 샵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 천리만 운동’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유교적 신분사회, 농업사회인 조선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수 없듯이, 한 나라가 이념과 체제를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북한식 이념과 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정말로 잘 선택한 복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장차 북한 주민들에게도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굳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에 실패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식 세습독재 공산국가, 중국식 공산당 일당지배국가, 러시아식 독재국가, 식민지에서 해방되고도 과거로 돌아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서는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구 폭동, 제주4.3남로당반란, 여수14연대반란, 6.25 남침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공산독재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이 실패라면 그런 실패는 백번해도 좋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북한 중 어느 체제가 더 민족정통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두고 북한이 그러하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민족사적 정통성’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가려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첫째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인류문명사적 발전에 맞게 나라가 다스려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 평등, 인권, 법치, 풍요, 박애 등에 기초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건국 직후 이미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그 땅에 사는 국민들에게 자유, 안전, 풍요, 행복 등을 주는 정치경제체제여야 합니다. 명분상으로만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실제로는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북한에 무슨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정통성이라면 속된 말로 ‘개에게나 쥐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중립국에 사는 코리안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라고 할 때 더 많이 선택받는 나라가 더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 있는 100명의 코리안이 남북 중 국적을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까요? 6.25때 포로들 중 중립국을 택했던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으로 환국하지 않았던가요?

살만한 나라, 더 매력적인,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할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기 전에도 분단과 전쟁기에 피란민은 대한민국을 택했고, 심지어 한국 내 주사파나 김일성주의자들도 북에 이주할 생각은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있다는 데서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과서를 쓰는 집필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정체성을 뚜렷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혼동과 혼란은 걷힐 것입니다. 완벽한 이상사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소아의 이익을 버리고 대한민국에의 애국심만 충만해도 많은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북한 주민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자유 민주 통일을 이룩합시다.

2023년 4월 28일(금)
자유통일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사)역사연구원 함께 모심

(사)역사연구원 제12차 학술세미나
<자유통일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교육과학분과 > “국가상 포럼”

■ 주제 : 독립 - 민주화 - 통일운동과 지향한 국가사회상

■ 일시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406호(충무로역 7번출구)

1:30~2:00	등 록	
	환영사	김진홍 목사님, (사)역사연구원 이사장
2:00~2:10	축 사	내빈축사
	사회 :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수, 역사연구원장)
2:10~2:40	발제 1	길이 달랐던 일제하 독립운동의 국가사회상 갈래 구분 김용삼(팬앤마이크 대기자)
2:40~2:50	토론 1	김병현(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2:50~3:20	발제 2	결이 달랐던 민주화운동의 국가사회상 갈래 구분 이강호(국가전략포럼 대표)
3:20~3:30	토론 2	유광호(자유민주연구학회장)
3:30~3:40	중간휴식	사진 촬영
3:40~4:10	발제 3	꿈이 다른 통일운동이 지향하는 국가사회상 갈래 구분 조용기(한반도선진화재단)
4:10~4:20	토론 3	서명구(전 대통령비서관)
4:20~5:00	종합토론	참석자 질의 및 응답 등

<발제 1>

독립운동의 핵심 본질 이해하기

위정척사·쇄국·소중화 vs 개방·교류·통상 세력의 대결

김 용 삼(펜앤드마이크 대기자)

- I -

한국 사회를 관통한 사상적 흐름

구한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질풍노도가 몰려올 무렵, 한반도에는 두 가지 사상적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주자성리학의 고수를 통한 조선왕조의 유지, 즉 폐쇄·쇄국·위정척사의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개혁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과 ‘개인의 자유’의 확보, 즉 근대화의 길이었다.

이 두 가치관은 1876년 개항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 한국인을 두 세력으로 갈라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 대립하게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우익과 좌익,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보수와 수구, 자유통상 대 자력갱생, 개인의 자유와 파쇼적 전체주의,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친미·친일과 친중·친북이라는 레토릭의 핵심 본질은 근대화와 쇄국의 가치관 충돌의 연장이다.

<표 1> 개항 후 한국 사회를 관통한 사상적 흐름

위정척사·쇄국 세력	개혁·개방·개화 근대화 세력
외국인 배척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화·개방
주자성리학 고수	서양 종교(천주교, 기독교) 수용
반상의 신분제 계급 사회 고수	계급 타파, 만민 평등
쇄국, 위정척사, 자급자족	개혁, 개방, 세계와 교류 통상
의병 봉기	교육, 해외 유학, 실력양성
만주, 연해주에서 무장투쟁 독립 추구	국내, 미주 중심 외교 독립 추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주의 수용
대륙 문화 지향	해양 문화 지향
중국, 소련 추종	일본, 만주국, 미국 추종
38선 이북에 모여 북한 성립	38선 이남에 모여 대한민국 건국

폐쇄·고립·쇄국을 통한 봉건 질서의 존속을 추구한 주자성리학자들은 조선의 양반 관료나, 곧 양반 관료가 될 선비·유생 세력이 주축이었다. 그들은 왕조가 망할 때까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방불케 하는 반상(班常)의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나라를 잃은 우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두고 세 갈래로 갈렸다.

첫째는 **외교 독립론**이다.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쳐 그들 힘으로 일본을 압박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법론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승만·이동녕을 필두로 한 기호파가 주력했던 독립운동 방략이다.

둘째는 힘은 없지만, 맨주먹으로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전쟁론**이다. 이동휘를 필두로 한 서북파가 주로 이 노선의 실행자들이었다.

셋째, 일제와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하니 우선 실력부터 쌓자는 **실력양성론**이다. 교육을 통해 내실을 기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창호를 좌장으로 한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그룹(서도파)이 이 노선의 주류를 이루었다. 인천 김성수 등 국내의 인재 양성론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 한국인들을 가장 매료시킨 방법론은 독립전쟁론이다. 독립전쟁론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한말 주자성리학자들이 위정척사 깃발을 내걸고 일으킨 의병 봉기가 나타난다. 구한말 항일 의병 가운데 가장 성세를 떨친 의병장은 유인석이다. 규모나 전력, 참여 세력, 전투 양상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을미의병을 대표하는 연합 의진(義陣)으로 꼽힌다.¹⁾

- II -

1. 주자성리학자들의 항일운동, 그 지향점은?

유인석은 화서학과에 속했는데, 그 원류는 김상헌의 척화론과 송시열의 소중화론이다. 화서학과는 철저히 **주리론(主理論)**적, 중국 중심적, 유교문화 중심적 시각에서 중화 문화의 전통 가치와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서양적인 모든 수단을 배척하려 했다.²⁾ 주리론은 필연적으로 물질을 낮춰보고 순수한 이념의 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이존기비(理尊氣卑)의 경향을 갖게 된다.³⁾

유인석의 직계 스승이 “주자의 말이 아니면 감히 듣지 않을 것이며, 주자의 지(旨)가 아니면 감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외친 정통 주자성리학자 이항로다. 그 계보를 이은 유인

1) 오영섭, 「을미 유인석 의병 결성과 활동」, 『의암학연구』 제7호, 2009, 135~158.

2) 오영섭,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사유 구조와 서양 인식: 화서학과의 경우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통권 30호, 2013, 109~144쪽.

3)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아카넷, 2019, 147쪽.

석의 정치사상은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으로 요약된다. 주자학 중심의 중화(中華)를 수호하고, 누린내 진동하는 야만의 족속 일본(倭)과 서양(洋)을 오랑캐(夷)로 배척하는 사상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개항의 길로 나가자 유인석은 동료인 김평묵·유중교 등과 함께 “한번 외국에 나라의 문을 열면 그것은 대란의 길”이라는 절화소(絶和疏)를 지어 올려 개항을 열렬히 반대했다. 유인석은 일본과의 개항 및 수호 통상은 문을 열고 도적을 받아들이어 천하 망국의 근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수구인과 같이 행동했다라면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았을 것⁴⁾이라고 외쳤다.

유인석은 상투를 인류와 짐승을 구분하는 징표로 보았다. 따라서 단발령이란 “인간이 짐승으로 변해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자 “소중화 문명을 짐승의 처지로 전락시키는 장례식”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유인석은 단발령에 극렬 저항했다. 유인석과 동문수학한 **최익현**도 “차라리 목을 끊고 죽을지언정 머리를 깎고 살 수는 없다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⁵⁾고 절규했다.

유인석은 1896년 3월 16일, 제천에서 호좌창의진(湖左倡義陣)을 선포하고 총대장에 올랐다. 그가 의병 봉기를 한 이유는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이란 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격문에서 유인석은 조선을 ‘소중화 예의의 나라’로 규정한 후 국모를 시해하고 의복과 상투를 파괴하여 소중화 문명을 짐승 수준으로 타락시킨 일본과, 이에 앞장선 친일 개화파를 응징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의병 봉기의 목적은 국모를 시해하고 의복과 상투를 파괴하여 소중화 문명을 짐승 수준으로 타락시킨 자들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을 뿐, 나라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즉 주자성리학의 도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봉기 목적이 이러했으니 의병 투쟁 과정에서 황당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방 수령, 관찰사 등 왕조의 관리들을 목을 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발령을 강제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과 조선 관군 연합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신분이 미천한 포수 출신 선봉장 **김백선**이 양반에게 항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인석은 상놈 주제에 양반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김백선을 체포하여 의병들 지켜보는 앞에서 목을 쳤다. 김백선은 경기도 일대에서 명성을 날리던 포수였다. 용맹한 선봉장을 어이없는 죄로 목을 치자 의병 진에 참여했던 동료 포수들은 “양반끼리 잘해 보라”며 이탈함으로써 유인석 의병부대는 와해되고 만다.

2. 주자성리학의 道를 지키기 위한 투쟁

4) 유인석 지음·서준교 외 역, 『의암 유인석의 사상: 우주문답』, 종로서적, 1984, 158쪽.

5) 최익현, 『면암집』, 『유소(遺疏)』, 민족문화추진회, 1984, 240쪽.

유인석과 비슷하게 유생으로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 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이다. 1907년 9월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항의하여 **13도 창의군이** 봉기했다. 각 도 의병장들이 수도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휘하 병력을 이끌고 경기도 양주로 집결했다. 의병운동 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1만여 의병의 지휘관이 이인영이었다.

13도 창의군이 수도 서울 진공을 위해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망우리까지 진군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의병대장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한다. 부음을 접한 이인영은 “나라에 불충함이 부모에 불효함이 되고, 부모에 불효함이 나라에 불충함이 된다. 그 도(道)는 하나이며 둘이 아닌즉, 나는 국풍(國風)을 지켜 3년 상을 치러 효도를 마친 후 재기하겠다”라며 의병진 해산을 명한다.

그 길로 낙향한 이인영은 문경 본가에서 부친의 3년 상을 치른다. 이후 충청도 황간에 숨어 지내던 이인영은 1909년 6월 7일 체포되어 일본 헌병의 취조를 당했다. 이때 일본군 한국주차헌병대 대위 무라이 인켄(村井因憲)과 일문일답을 나눈 내용이 사료로 남아 있다.⁶⁾

무라이 인켄(村井因憲) : 왜 아버지 부고를 접하고 만사를 내던져버리고 귀향하였는가? 유자(儒者)로서 동양 도덕과 당신 행위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인영 :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는 재회할 수 없지만, 임금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금수와 같으며 금수는 폐하의 신하일 수 없다. 불충에 해당한다.

무라이 인켄 : 3년 상중에 한국이 멸망에 이르렀다면 어떠하였겠는가?

이인영 :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의병 봉기를 통해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부친상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이인영은 1909년 9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유생들의 의병운동, 독립투쟁은 이른바 **유교 민족주의 투쟁**이었다. 의병 전선에서 유학을 반대하면 그가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불문하고 처단했다.⁷⁾ 그들의 의식과 논리는 조선이 성리학을 보존하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그러한 조선을 침략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⁸⁾

명분론이 압도하는 주자학적 민족주의론은 이(理·도덕)와 기(氣·물질)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理)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로 추앙하는 화서학파로 전승되어

6) 『통감부문서』 8권, 1909년 6월 30일, 일본군 헌병대본부 이인영 1·2차 조서.

7) 조동길, 『한국 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105쪽.

8) 조동길, 앞의 책, 173쪽.

의병운동가, 일제 시기 독립운동가, 해방 이후 민주화 운동권, NL(민족민주)계, PD(민중민주)계 등 학생 운동권으로 전승되었다.

3. 독립운동 투신한 유림의 사상적 종착역은 아나키즘·공산주의

한국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이회영**이다. 이회영은 선조 시절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10대손으로, 조선 시대 삼한 거족의 명문대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양반 가문이 나라가 망하자 집안 노비를 모두 해방하고 가산을 정리하여 40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⁹⁾

이회영 일가는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에 집결, 신한촌 건설에 나섰다. 서간도에 창건한 최초의 해외 독립운동기지인 **신흥강습소**(후에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가문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회영 일가 외에도 안동 출신 유림인 김대락·이상룡·김동삼 가문, 선산의 허위 가문 등이 남만주 개척 사업에 헌신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1920년대 들어 상하이 임시정부의 노선 갈등이 시작되면서 신채호·김창숙·이회영 등 임시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베이징(北京)에 집결했다. **임시정부 반대 세력**은 대부분 뼈대 있는 유림 출신이었다. **신채호**만 해도 20여 세에 성균관 박사를 지낸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던 수재였다. 고종 황제에 충성을 바쳤던 유림 출신들이 보기에 상하이 임시정부는 비록 임시이기는 하나 황실을 부정하고 공화제를 채택했으니 이것은 영락없는 역적 집단이었다.

임시정부를 부정한 세력들은 임시정부 거점인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에서 아나키즘, 공산주의 등 신사상을 수용한다. 대한제국 폐망 후 중국으로 망명한 신채호는 베이징대에서 리스썩(李石會), 우즈후이(吳稚暉), 리다지오(李大釗) 등 아나키스트·사회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혁명적 아나키스트의 길을 걷는다. 아나키스트의 테러활동이나 테러 예찬론을 접한 한국인들은 신채호와 이회영을 중심으로 테러를 국권회복운동의 새로운 수단으로 채택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신채호는 “파괴가 곧 건설”이라는 바쿠닌의 주장에 근거하여 일제를 파괴하는 것이 한국의 독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채호는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민족 대신 민중으로, 영웅 사관에서 민중사관으로, 민족 자강론에서 민중 혁명론으로** 바뀌게 된다.¹⁰⁾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테러활동은 1919년 11월 10일 길림성에서 의열단이 결성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간도·연해주에 공산주의가 퍼지면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사

9) 김병기, 『신흥무관학교-100년 만의 만남』, 국가보훈처, 2011, 23쪽.

10) 주효뢰(周曉蕾), 『식민지 조선 지식인, 혼돈의 중국으로 가다-1920년대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에 대한 사상적 고찰』, 소명출판, 2020, 370·374~375쪽.

회주의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아나키즘)의 세례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공산주의자나 아나키즘의 거물 중 유럽의 본고장 안동 출신이 많다는 사실이다. 1925년 창설된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 비서 김재봉, 1925~1926년 고려공산청년회 책임 비서 및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권오설이 대표적 인물이다.

1999년 당시 독립유공자 포상 총인원 8,698명 중 경북 출신 인사가 1,404명, 그중 안동 지방 출신 독립유공자는 2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¹¹⁾ 안동지역에서 의병항쟁과 구국 계몽운동을 거쳐 1910년대 초 남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숫자는 100여 세대를 헤아렸다. 안동대 김희곤 교수는 이 무렵 안동 출신 망명·이주 인사가 거의 1,500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

명문가 출신 양반 유럽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여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주자성리학의 원리가 사(私)를 죄악시하고 공(公)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했기 때문이다. 또 모든 토지는 국왕 소유라는 토지 왕토 사상에 젖어 재산의 사적 소유나, 사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보다 공동체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친숙했기 때문이다.

4. 공산주의와 손잡은 이동휘

3·1운동을 계획한 지도부의 기본 전략은 비폭력·무저항, 국제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통한 외교 독립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일본의 강경 진압, 파리강화회의에서 열강국의 무관심으로 실패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5대 승전국으로서 미·영·불·이탈리아와 함께 최고 위원회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여 파리강화회의를 좌우했다. 일본은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 한국이 독립하려면 일본을 무력으로 타도하고 한반도에서 퇴출시킨 다음 주권을 되찾을 수밖에 없었다.

3·1운동 실패를 경험한 조선의 지도층은 우리 힘으로 세계 5대 열강, 3대 군사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을 꺾고 독립을 쟁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연대·동맹에 눈을 뜬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손을 내밀어줄 ‘열강’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어갈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던 한국인들은 이 과정에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사고체계인 사회주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¹³⁾ 한국이 기댈 곳은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돕겠다고 선언한 소비에트 러시아뿐이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눈을 뜬 이동휘를 비롯한 한인사회당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 독립

11)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24쪽.

12) 장세윤, 『중국 동북 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 명지사, 2005, 102쪽.

13)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23쪽.

전쟁을 수행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무장 투쟁론이 대세를 이룬 것은 1919년 11월, 한인사회당 총의장 이동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부터다.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아직 부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정의 임시 리더는 이동휘였다. 이동휘는 **코민테른**으로부터 임정 요원 포섭 지령을 받고 상하이에 파견된 알렉세이 포타포프(Aleksei Potapov)와 접촉했다.

포타포프는 극동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인 빨치산 부대를 동원하여 러시아 적군과 힘을 합쳐 시베리아를 점령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주면 자신이 레닌과 임시정부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은 임정은 1920년 1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다.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조차 못 내는 실정의 임정이 무슨 돈으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겠는가. 임정의 군대 조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동휘는 코민테른에 손을 내밀었다. 이동휘는 모스크바에 특사를 파견하여 코민테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을 지원받았다. 이동휘는 이 자금을 임정에는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자신이 조직한 한인사회당 및 공산당 강화작업, 임정 공산화 작업에 투자했다. 이것이 코민테른 자금 사건이다.

임정은 1921년 1월 23일 이동휘와 김립의 정부 자금 횡령 사실을 고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궁지에 몰린 이동휘는 자금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임정 총리직을 사퇴했다. 임정은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을 축출하고 코민테른 자금 운송책 한형권·김립에 대한 사살령을 내렸다. 임정 경무국장 김구는 자객 오면직·노종균을 동원하여 1922년 2월 11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자 베이(閘北) 거리에서 김립을 사살했다.

5. 러시아와 공수동맹 체결의 후폭풍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코민테른이 이동휘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의 여파로 적백(赤白)내전이 발발하자 자본주의 국가들은 러시아 혁명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그들은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병하여 소비에트 적군과 싸우는 러시아 백군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자 볼셰비키 정권은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인 무장 부대의 지원이 절실했다.

그들은 한인 무장 부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동휘 설득에 나섰다. 자신들을 도와 러시아 백군 및 그들을 지원하는 일본군과 싸워주면 소비에트 정부는 내전이 끝난 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밀 협상 끝에 레닌은 이동휘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 임정 간에 ‘대일한로공수동맹(對日韓露攻守同盟)’을 체결했다.

비밀 협약 관련 사항은 일본의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보도(1920년 10월 10일 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1.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노농(勞農) 정부는 모름지기 한국을 원조하고, 이 주의를 세계에 선전할 것.
2. 러시아 노농 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찬성하고, 그것을 원조하여 동양에 영원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기할 것.
3.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나의 독립군대를 설치하여 시베리아 지방에 주둔하고, 러시아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것. 만일 시베리아에 침략한 일본과 개전할 때에는 한국 군대는 당연히 러시아를 원조할 것.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대는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노농 정부는 당연히 탄약, 탄환, 기타의 군기를 공급하고, 또 강병을 응원할 것.

이 협약은 쌍방 간의 공수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일방적인 관계만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산주의를 수용해야 하며, 한국의 무장 독립군은 주둔지를 시베리아로 한정하고, 러시아 적군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협약의 실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은 양국이 이 공수동맹을 비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임정 의정원 기록에는 이를 비준한 근거나 기록은 없다. 때문에 이것은 임정과 러시아 간에 내용을 검토한 단계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¹⁵⁾

하지만 코민테른 자금을 수령한 후 이동휘와 한인사회당은 일관되고 집요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동휘는 이승만의 친미 외교 독립노선을 비판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손잡고 한인사회당 계열은 임정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¹⁶⁾

이동휘는 “대한이라는 낡은 이름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라고 제안했으며, 태극기를 폐지하고 푸른 천에 세 개의 붉은 별이 있는 국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⁷⁾ 또 임정을 혁명위원회로 개편하고, 시베리아로 옮기려 했다. 이런 급진적 주장은 임정 내 민족주의 세력인 이동녕·신규식·이시영·안창호 등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하려 했으나 부결되자 임정을 떠났다.

14) 신호승,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와 간도 침략」, 『만주 연구』 제26집, 2018, 188쪽.

15) 신호승, 앞의 논문(2018), 187쪽.

16) 박종효, 『러시아 연방의 고려인 역사』, 도서출판 선인, 2018, 290~291쪽.

17) 마쓰베이 켄고·피에비치 김 지음, 이준형 옮김, 『일제하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106쪽.

6. 자유시 참변의 근본 원인

한편에선 간도·연해주의 한인 무장 부대를 시베리아 영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없이 부대를 이동시킬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동회와 한인사회당은 “간도와 연해주의 한인 무장 부대를 통합하여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한인 무장 부대의 집결지는 ‘자유시’로 선포된 아무르주의 스보보드니(알렉세예프스크)로 정해졌다.

이동회와 한인사회당은 간도·연해주 무장 부대에 “항일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극동 공화국 영내의 해방된 자유시로 집결하라. 모두 모여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면 소비에트 정부가 무기와 보급을 책임진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동회는 간도의 독립군 부대들이 밀산을 거쳐 시베리아 이만(현재의 달래네친스키)으로 이동할 때 긴급구호금 2만 원을 보내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¹⁸⁾

“한인 무장 부대의 대통합”이라는 이동회의 선전에 호응하여 한국인 무장 부대가 속속 자유시로 모여들었다. 1921년 초 연해주와 간도의 한인 무장 부대는 대부분 밀산을 거쳐 이만에 집결한 후 시베리아 횡단열차 편으로 자유시로 이동했다. 이것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 임정, 이동회의 한인사회당 사이에 모종의 비밀 동맹(혹은 협약, 조약)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아무르주의 자유시로 집결한 한인 무장 부대 만주에서 아무르주로 건너간 독립군이 1,850여 명, 연해주에서 아무르주로 이동한 빨치산 부대가 1,650여 명, 총 3,500여 명이었다. 이들은 이동회의 한인사회당과 레닌 정부가 체결한 비밀 동맹에 대해 알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은 일본군에 저항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이념적·사상적 분포가 다양했다.



(‘자유시 참변’ 인터넷 공개 이미지 자료에서 인용)

18) 김준엽·김창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제1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253쪽.

이동휘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 체결한 공수동맹에 의하면 통합된 한인 무장 부대는 ‘시베리아 지방에 주둔하고, 러시아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밀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한인 독립군 부대를 **적군 산하에 예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사단(事端)이 벌어졌다. 자유시에 도착한 한인 무장 부대 중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은 러시아 적군 산하로의 예속에 저항감이 없었다.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은 강력 저항**했다. 러시아 적군과 한 편이 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한인 무장 부대가 적군 산하로의 예속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유시 참변이 폭발한다.

자유시 참변으로 한인 무장 부대 1,500여 명은 사살당하거나 제야강에 빠져 죽거나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보내졌다.

자유시 참변에서 한인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가담했던 인물 중 대표자는 홍범도·최진동·안무와 이회영 가문이 만주에 설립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다.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들은 홍범도 부대가 제공한 무기로 무장하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바 있다. 이후 홍범도·김좌진 부대를 따라 밀산으로 이동했고, 이만을 거쳐 자유시로 들어갔다가 ‘자유시 참변’ 당시 러시아 적군 편에 서는 주역이 된다. 무슨 까닭인지 신흥무관학교 출신과 지청천(이청천)이 자유시 참변 당시 한국 무장 부대를 몰살하는 가해자 편에 섰던 흑역사도 독립운동사에서는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

이로써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이 레닌 정부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대가로 약속한 만주·연해주 일대의 한인 무장 부대를 소비에트 러시아를 추종하는 적군에 예속시키는 작업은 완벽하게 이행되었다.

7. 적군에 예속됐던 한인 부대 해산당해

러시아 적군 산하로의 편입을 찬성한 2,000여 명은 이르쿠츠크로 보내져 러시아 적군 산하의 고려혁명군에 소속되었다. **러시아 적군 편에 서서 한인 독립군 몰살에 가담했던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 이르쿠츠크의 고려혁명군 제1대대장을 역임했다.

코민테른은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제1회 극동 제(諸)민족대회(극동인민대표대회)를 열었다. 홍범도는 제1회 극동 제민족대회에 참여하는 한인 대표 56명의 일원으로 선출되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대회가 끝난 2월 초 한인 무장세력(고려혁명군) 대표 자격으로 레닌·트로츠키와 면담했다. 레닌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위로했으며, 홍범도에게 혁명정권에 협조해줘 감사의 표시로 금화 100루블, 군복 한 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로 주었다. 면담이 끝난 후 홍범도는 레닌·트로츠키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¹⁹⁾

소련공산당은 2,000명으로 구성되었던 고려혁명군 여단은 1922년 4월 13일, 연대로 재

19) 장세윤,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역사공간, 2017, 221~223쪽.

편하면서 병력수를 1,000명 이하로 축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인 병사 절반 이상을 제대시켜 연해주로 돌려보냈다. 1922년 11월 2일 적백내전이 종결되자 그로부터 10일 후인 11월 12일, 소련 당국은 “러시아공화국 영내에 주둔한 한인 부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라면서 고려혁명군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졸지에 군대가 해산당한 후 홍범도는 1923년 8월 이만 근처의 까잔린 구역(사인발)의 황무지 수백 헥타르를 지급받았다. 여기에 집단농장을 세우고 동료 빨치산들과 함께 4년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양봉을 했으나 실패했다. 1927년 10월, **홍범도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었는데, 그의 당증 번호는 578492번이었다.

1937년 9월 초 홍범도는 스탈린의 명에 의해 연해주 수청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시르다리야강 근처, 아 튀크 촌 사막지대로 강제 이주당했다. 1938년 4월, 생활환경이 좀 나은 크즐오르다로 이주한다. 크즐오르다 조선극장 수위장에 임명된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는 1943년 10월 25일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²⁰⁾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홍범도의 유해를 봉환했다. 홍범도는 소련 국적(혹은 카자흐스탄 국적)과 소련공산당 당원 신분이었을 것이 분명하니 그의 유해를 봉환해 오기 위해서는 홍범도의 소련(혹은 카자흐스탄) 국적과 공산당원 문제를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

적백내전이 종료된 후 소련공산당 및 코민테른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혹은 반(半)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은 군사력을 동원한 **무장투쟁 방식이 아닌, 정치투쟁으로 전환**했다. 즉 대중 속에 파고들어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식민지 노동대중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전 민중적 봉기를 일으켜 제국주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방법론이었다.

1919년 레닌은 만국의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코민테른을 조직했다. 코민테른의 공작에 의해 1920년 인도네시아·이란에 공산당이 창당되었고, 1921년 중국, 1922년 일본에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1924년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성립된 것도 국제공산주의 운동 방향 전환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코민테른은 연해주의 한인들에게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고,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족해방투쟁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노선을 따랐다. 1921년 자유시 참변, 1922년 한인 빨치산 부대 해산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추진했던 독립전쟁론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백군과 처절한 내전을 치르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고 열강에 포위된 소련은 동아시아의 강적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기 시작했다. 1924년 소련은 코민테른 민족부 극동총국 코르뷰로의 후신인 오르그뷰로(조직국)마저 해체했다. 1925년 1월 소련은 일본과 러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상대 국가의 치안을 해치는 행동을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20) 장세윤,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232~240쪽 참조.

이로써 소련령에서 일본에 적대하는 행동을 하던 한국 독립군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다.

8. 암살·테러가 유일한 독립운동 수단

독립운동을 추진할 인력이나 조직, 자금도 없는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살·테러활동이었다. 일본 식민 통치 시절 한국인들은 일본·한국·중국에서 일본 군대와 정부 요원을 겨냥한 암살·테러라는 특수한 항쟁방식을 100여 차례 시도했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조소앙은 이를 ‘국부(國父) 파괴 방침’이라 칭했다.

한국처럼 **암살·테러**를 주요 투쟁방식으로 채택한 나라는 흔치 않다. 중국의 유교 사상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널리 퍼졌고, 그중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사생취의(舍生取義)’ 사상이 한민족의 주요한 도덕 기준과 가치관이 되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김원봉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의열단**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혈지사를 규합하여 적의 군주 이하 각 대관(大官)과 일체의 관공리를 암살하자. 적의 일체 시설물을 파괴하자. 동포들의 애국심을 환기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여 일대 민중적 폭력을 일으키도록 하자. 끊임없는 폭력만이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²¹⁾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스템에 근본적인 타격을 가하여 조국 독립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몇 사람이 권총 몇 방 쏘아 적의 지도자나 지휘관을 사살함으로써 조국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난폭한 제국주의 질서를 너그러운 낭만주의로 품어 안는 견해다.

대중의 힘을 조직하지 않고 몇몇 용사들의 결사적인 행동만으로 정권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블랑키 주의(Blanquism, 극좌 모험주의)다. 암살, 파괴 위주의 폭력 투쟁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대가는 너무 적었다. 그것은 조선 민중들의 가슴을 한순간 후련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방투쟁에 펼쳐 일어나도록 하지는 못했다. 의열단 단원 가운데서도 기존의 암살과 파괴 위주의 폭력 투쟁에 회의 를 느끼고 대오를 이탈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²²⁾

장제스(蔣介石)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은 1932년 12월, 김구와의 회담에서 암살·테러에 젖어 있는 **김구**에게 뼈 있는 충고를 내놓는다. “특공을 통해 천황을 암살하면 다른 천황이 또 나올 것이고, 대장을 죽이면 다른 대장이 또 나올 것”이니, 독립전쟁을 목표로 한다면 임정은 우선 무관을 양성하여 정식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제안이었다.²³⁾

21)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 샘, 2000, 31쪽.

22) 김호웅·김해양 편저, 『김학철 평전』, 실천문화사, 2015, 105쪽.

23) 유철강(劉軼強),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는 다른 시각」,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리처 편·김승일 역, 『중국 항일전쟁과 한국 독립운동』, 시대의 창, 2005, 66쪽.

중국의 한국사 연구학자 시위안화(石源華)는 한국 독립운동 과정에서 암살은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런 투쟁은 지지받기 힘들었다고 비판한다.

암살·테러는 국가를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할 수 없고, 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은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애국인사들은 별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수단을 통해 민족의 반일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천하를 놀라게 할 정도의 정치적 영향을 주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시위안화는 이것이 한국인들이 암살·테러에 매달린 이유였다고 분석한다.²⁴⁾

9. 만주사변 이후 만주에서 동족상잔

1931년 9월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으로부터 만주를 분리시킨 후 괴뢰국가 **만주국**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자 만주 일대의 중국인들이 광범위한 항일투쟁에 나서면서 만주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일본에 협력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만주 일대에서 반만항일(反滿抗日) 투쟁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자 일제는 만주국 군대를 창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 확충을 위해 1933년 4월, 2년제 봉천군관학교를 설립하고 한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되자 일제하의 식민지 조선 땅에서 태어나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젊은 인재들이 신천지로 떠오른 만주국에서 장교가 되기 위해 만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만주군관학교·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만주군의 일원이 되어 일본의 만주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과 싸웠다.

중국인 지주들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하던 재만 한인들 입장에서 볼 때 만주국을 설립한 일본은 일종의 해방자였다. 게다가 배타적인 한족 우월주의로 똘똘 뭉친 중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은 만주에서 오족협화를 표방하고 그동안 중국인에게 차별당하고 설움 받던 이민족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다. 만주국은 한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능력 있으면 고급 관료로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당시 만주 일대에는 생존을 위해 압록강·두만강을 건넌 한인 70만~80만 명이 중국인 지주의 땅을 빌려 소작으로 연명했다. 만주 거주 한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유랑민 신세에다가, 중국인 지주들의 가혹한 수탈과 횡포로 입에 풀칠이나 하는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 일대에 공산주의 물결이 휘몰아쳤다. “혁명을 일으켜 지주 땅을 빼앗아 무상 분배하자”, “간악한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고 기층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은 중국인 지주들에게 억눌려 살던 한인들을 **사회주의·공산**

24) 이거란(李巨瀾), 「한국 독립운동 중 암살 활동에 대한 시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리처 편·김승일 역, 앞의 책, 136쪽.

주의 물결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일본 측 통계에 의하면 재만 한인의 85%가 공산주의자였다.²⁵⁾ 그들은 중국공산당과 손잡고 침략자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후에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한다.

중국공산당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자신들이 조직한 빨치산 부대로 흡수하여 만주를 침략한 일본 관동군·만주군과의 투쟁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다른 편에서는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를 졸업한 한인들이 일본군·만주군의 일원이 되어 빨치산을 섬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주사변을 분기점으로 재만 한인들은 그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든 일본에 협조하거나(親日), 일본과 맞서거나(抗日) 양자택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생존을 위해 중국공산당이냐, 일·만 제국주의냐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직면한 것이다.

10. 동북항일연군과 간도특설대의 대결

만주로 건너간 한인 청년 중 한쪽은 **중국공산당**의 일원이 되어 일본·만주국을 타도하기 위해 **빨치산 활동**에 투신했다. 다른 쪽은 **일본·만주국의 일원**이 되어 중국공산당이 조직한 빨치산을 섬멸하기 위해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고 싸웠다. 젊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나라(중국 대 일본)와 이데올로기(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로 갈라져 적대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근대사가 민족 구성원에게 덧씌운 역사의 뼈아픈 원죄다.

중국공산당은 수 천 년을 이민족과 부대끼며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에 익숙해 있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그들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자신들 산하의 빨치산 부대(동북항일연군)로 끌어들었다. 그들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항일 무장투쟁의 혁혁한 전사”니 “강철의 국제 대오”니 하면서 부추겼다. 그들은 “중국 해방이 끝난 후 조선 해방을 돕겠다.”라고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일본군·만주군과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만들었다.

일본이 토벌 과정에서 빨치산을 체포해 보니 대부분이 만주로 이주해 온 한인이었다. **중국공산당이 재만 한인을 빨치산으로 동원하여 일본군·만주군 공격에 앞장서도록 이이제이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일본이 아니었다. 그들도 중국공산당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기 위해 1939년 3월 **간도특설대**를 창설했다. 간도특설대는 하사관을 포함한 사병 전원이 한인이었고, 장교는 한인과 일본인이 절반 정도 섞인 한인 위주의 부대였다.

일본은 한인 위주로 조직된 간도특설대를 동원하여 조직원의 대부분이 한인으로 구성된 빨치산 토벌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만주 땅에서 중국공산당 편에 선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일본·만주국 편에 선 한인들 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격돌이 벌어졌다. 중국과 일본이 벌이는 싸움에 한인들이 희생 제물로 동원된 것이다.

양쪽 모두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에 총부리를 겨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편에

25)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 역사비평사, 2014, 295쪽.

섰던 자들에겐 ‘항일 무장투쟁’이란 가짜 월계관을 씌워 영웅으로 예우하고, 반대편에 섰던 자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딱지를 붙여 매도한다. 일본군·만주군 편에 섰던 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면, 중국공산당 쪽에 섰던 동북항일연군 빨치산들은 친중파 민족 반역자로 치탄받아 마땅하다. 친중은 무죄요, 친일은 유죄라는 주장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기준인가?

좌익세력과 북한은 김성주(후에 김일성)이 중국공산당과 손잡은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하여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김성주가 동북항일연군 소속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북항일연군이 어떤 성격의 부대였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하는 점이 중요 포인트가 된다.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지침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반만 항일(反滿抗日) 동북 실지(東北失地)의 회복, 중화(中華) 조국의 옹호.
- ②일적(日賊) 주구의 재산 몰수.
- ③민중과 연합하여 항일구중국(抗日救中国)²⁶⁾

이 자료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김성주가 소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동북 실지(즉 만주)를 회복하고, 중화 조국(즉 중국)을 옹호하며, 일본을 따르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민중과 힘을 합쳐 중국을 구하기 위해 일본과 투쟁했다는 뜻이다. 과연 이런 부대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주와 중국, 소련령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운동가는 중국·소련 국적을 취득했고,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과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해보아야 할 점은 중국·소련 국적을 취득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입장에서 일제와 싸운 것이 과연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는가, 아니면 무산자들의 계급 해방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애오라지 ‘일제’와 투쟁했다고 알려지기만 하면 모두를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로 추앙하고, 국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국민 세금으로 그 후손들에게 공로금 명목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11. 곧 소멸될 국가를 위해 독립투쟁?

제1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 발달과 복지정책 시행으로 유럽에서

26) 만주국 군정부 고문부 편, 『만주 공산 비적의 연구』,新京(新京) 군정부, 1937, 434~435. 이명영, 『김일성열전』, 208~209쪽에서 재인용.

사회주의 혁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에 추월당한 소련 입장에서 볼 때 ‘세계 공산화’라는 거창한 구호는 일장춘몽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조국이며 총사령부이자 지도부인 소련을 옹호하는 ‘소련 방위론’으로 변질되었다. 소련도 서구 제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뜻이다.

세계혁명을 지도하기 위해 창설된 코민테른은 소련 옹호를 위한 총참모부로 성격이 바뀌었고, 세계혁명 구호도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조국이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기지인 소련을 옹호하라”라는 이기주의적 구호로 변질된 사실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1920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레닌은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닌이 말한 피압박 약소 민족 해방은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조선의 독립과는 달랐다. 레닌은 계급을 해방을 말했지, 부르주아 국가의 독립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²⁷⁾

한국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어떤 열강도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주지 않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는 지나치게 안이했고, 일방적이었다. 소비에트 정부가 내걸었던 ‘약소 민족 해방’ 구호는 그들의 외교정책의 여러 전술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란 사실을 이해할 만한 학식이나 지력도 부족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공산당은 모든 국가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존재이므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한다고 믿었다.²⁸⁾ 때문에 곧 공산혁명을 통해 소멸될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당은 식민치하의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의 독립보다는 계급 해방에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일제 치하에서 공산당 및 사회주의 세력, 좌익진영이 치열한 독립투쟁을 벌였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그들은 계급·혁명 의식의 고양을 위한 독서회 사건, 소작쟁의와 공장에서의 노동쟁의 등에 주력했을 뿐이다. 1925년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공산당이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었고, 그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강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한다.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이 그러함과 마찬가지로 그 한 지부로서 폭력혁명에 의거하여

27) 이지수, 「전쟁의 기원: 역사적인 접근」, 김영호 외 지음, 『푸틴의 야망과 좌절』, (주)글통, 2022, 26쪽.

28) 이승만은 『태평양 잡지』 1923년 3월호에 실은 「공산당의 당부당」이란 논설에서 공산주의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간파했다.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조선 문제로서는 공산당 지도 아래에 노동자, 농민의 결합에 의하여 공동전선을 전개하고, 일본제국의 통치를 변혁하여 그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려는 데 있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들인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민족문제의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부로 된다. 조선에서의 혁명적 의의는 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민족운동을 원조함은 물론, 전술로서 민족주의적 단체와 제휴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배우고 있다. 노동운동으로, 소작쟁의로 파고들어 간다. 학교의 맹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조직에서는 각 방면의 야채이카(세포)를 부식하고, 모든 표현 단체에 프락치를 만든다.”

조선공산당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즉 공산당 일당독재)를 위해 노동운동, 소작쟁의, 학교 맹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 목표가 조선의 독립·해방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일까?

- III -

1. 교류와 통상의 가치를 발견한 이승만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수감되어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다. 당시 기독교는 근대 문명 그 자체였다. 구한말 조선에 진출한 선교사들은 진보, 개화, 과학, 개방, 자유, 인권의 상징이었다. 한국 근대화의 기저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근대 교육의 출발은 1884년 입국한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철두철미한 칼뱅주의적 청교도 정신을 한국에 이식시켰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조선에서 노예제도, 여성에 대한 억압은 물론 음주, 흡연, 도박, 축첩 등의 악습 퇴출에 앞장섰다. 또 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문맹에서 깨어나도록 했다.

이승만은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근대적 인간**’으로 재탄생했다. 그에게 기독교는 유교(주자성리학)를 대체하여 조선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예수교를 받드는 나라들이 문명 부강 태평 안락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독교를 통해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비밀리에 저술한 『독립정신』을 비롯하여 1913년 하와이에서 출간한 『한국교회 필박』에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서양 열강들과 동등한 문명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한 데 이어 하와이에 서 『한국교회 필박』을 집필했으며, 프린스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언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을 펴냈다. 평생 본인이 집필한 저서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바로 통상과 선교였다.**

이승만의 첫 번째 저서 『독립정신』은 서양의 선진문명을 배워 부국강병을 이룩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승만은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 탄생되었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일어난 프랑스혁명 정신이 현대 민주주의와 계몽주의가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으로 보았고, 그것이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서 대미를 장식하기를 바랐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반면,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는 전제군주국가라면서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양 문물을 하루속히 받아들여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외국과 통상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고 외쳤다.

이승만은 이 책에서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완고한 성리학적 담론과 쇄국(鎖國) 사상이 지배하던 당대 분위기와 비교하면 가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이다. 이 6대 강령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이승만이 꿈꾸던 나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첫째,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개방하고 교류 통상해야 한다면서 개방과 교류, 통상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다.

둘째, 새 법(즉 근대국가의 기본 원리인 경쟁)을 통해 몸과 집안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경쟁이야말로 발전의 동력이다. 외국과 경쟁하려면 신학문과 신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중·일·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외교를 잘해야 하며, 외교를 통해 독립을 얻어야 한다.

넷째, 국권(즉 나라의 주권)을 중히 여겨야 한다. 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이 없는 나라다.

다섯째, 의리(즉 나라에 대한 국민의 공적 의무)를 중히 여겨야 한다. 공공의 이익, 공동체와 나라의 소중함을 깨우쳐야 한다.

여섯째,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라나 개인이나 모든 기초는 자유다. 이 자유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소중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천부의 인권이다.

이승만이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외친 독립정신 6대 강령은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이 되었다. **개방과 교류, 통상, 경쟁, 외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키워드로 한국은 선진국에 오르는 데 성공한 것이다.²⁹⁾

2. 미국 내에 강력한 인맥 형성

이승만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태평양잡지』를 발간했는데, 이 잡지를 통해 20세기를 “태평양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한국이 대륙의 중화 유교 문명권에서 이탈하여 구미 기독교 문명권, 즉 해양 문명권으로의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 이승만은 무기를 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무장투쟁이 아니라, 선교와 통상이야말로 ‘피 흘리지 않는 무기’라고 보았다.

이승만은 미국 유학 과정에서 독립 이후 미국의 역사는 모든 나라가 식민제도를 청산하고 자유롭고 우호적으로 통상하는 제도를 범지구적으로 구축해 가는 역사라는 점을 발견했다. 애덤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민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식민지를 해방시켜 통상으로 얻는 이익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동포는 전장(戰場)에서 무기로 승패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상으로 상호 이익을 얻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믿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과거에 독립을 승인한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미국의 외교 원리를 추적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자유 통상망으로 묶으려 했다. 그래야만 평화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이 2차 세계대전 후 유엔 창설과 IMF-GATT 체제 출범으로 현실화되었고, 그 후 세계무역기구(WTO)의 태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세상의 절반이 민주주의이고 나머지 반이 전체주의로 있는 한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문호개방 원칙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을 일으켜 대동아공영권을 이루려 했다. 즉 일본이 중국을 독식하여 각국과의 통상을 봉쇄하고 일본 단독으로 단물을 빨겠다는 심산이었다.

미국의 문호개방, 통상 유지 전략에 일본이 도전했으니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필연적이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책이 이승만이 쓴 『일본내막기』(1941년

29) 이승만 연구의 권위자인 유영익 교수는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비전』(2019: 271-294)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이 품었던 건국의 비전은 신생 한국을 ‘①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 국가(기독교 국가 건설), ②동양의 모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자유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 ③반공의 보루(반공 노선의 확립), ④평등한 사회 실현, ⑤교육수준이 높고 부강한 나라(교육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문명 부강국 건설)’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즉 그의 건국 비전은 한반도에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양의 일등 국가와 동등한, 개명·부강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8월 1일 출간)다. 이승만의 예언은 1941년 12월 7일 일본 함재기가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투사로서의 활동은 1905년 조정 대신 민영환과 한규설의 밀사로 선정되어 미국으로 건너감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미국 유학을 통해 서양사(특히 미국사), 정치학, 외교학, 국제법 등 근대적 학문에 통달한 국제 통상 및 국제법 전문가로 변모했다. 미국의 고위 관료나 외교관 등 지도층 인사들은 이승만과 대화 과정에서 그의 탁월한 지성에 압도되었으며, 미국인보다 미국의 정치와 역사를 더 잘 아는 이승만에게 경의를 표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세 명문대학에서 수학하며 이승만은 ‘세계인’에 걸맞는 학맥(學脈)과 인맥(人脈)을 형성하게 된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비롯하여 존 포스터 델레스 미 국무장관,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워싱턴 D. C의 커버넌트 장로교회 담임목사로서 미국 외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보유한 루이스 햄린 목사, 록펠러와 함께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한 세계적인 거부(巨富) 루이스 세브란스, 노벨평화상 수상자 존 모트 YMCA 국제위원장 등 그의 미국 내 인맥은 그 면면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고, 직업군도 목사에서부터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외교관, 학자, 스포츠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었다.

이러한 미국 내 인맥들의 지지와 후원을 바탕으로 이승만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한미협회(The Korean American Council),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 등을 조직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 IV -

결론 : 무엇을 위한 항일투쟁이었는지를 묻고 따져야 할 때

이승만의 일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많은 한국인이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공산주의의 위험성과 몰락을 예언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은 청년 시절부터 러시아와 그 후예인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과 세계 정복 음모를 꿰뚫어 보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경계심은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였다.

그 결과 김일성이 세운 북한과 이승만이 세운 북한은 문명사적으로 결정적인 단층이 형성되었다. 김일성의 북한은 대륙과의 동맹, 이승만의 대한민국은 해양과의 동맹을 추구한 결과 천지개벽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김일성이 세계사의 비주류 세력인 소련·중국공산당과 대륙 동맹을 맺은 것은 실패한 조선 외교의 복제판이다. 반면에 이승만은 세계사 주류 세력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통해

해양 동맹을 체결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토대로 한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를 받는 문명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표 2> 북한과 대한민국의 세계관 비교

북한(김일성)	대한민국(이승만)
폐쇄·고립·대륙지향	개방·통상·해양 지향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중심 자본주의
종교탄압, 사이비 주체교	종교자유, 기독교 지향
소련·중국·북한 3중 국적, 3중 당적	무국적, 한국 국적 끝까지 유지
허구의 항일투쟁	국제사회, 강대국을 움직이는 외교 독립운동
중학교 중퇴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자력갱생, 교류 단절	무역, 세계시장, 인적교류
주민 등쳐먹는 마적대형 유격대 국가	문명개화, 부국강병,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항일·반미 빼면 쓰러지는 나라	국리민복의 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밝힌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현행 헌법 서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셨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중략) 김일성 동지께서는...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독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었다. (중략)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 방법을 확립하시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숭고한 인덕정치

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한 마디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일투쟁을 했음을 그들 헌법 전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이 만병통치약처럼 통용되고 있는 시대에 독립운동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부터 의미심장하게 따져야 할 주제다. 개항 이래 이 땅에서는 쇄국·고립·위정척사·소중화 수호 세력과 개항·개국·개방·통상 세력의 대결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패러다임은 현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체제전쟁으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진행 중이다.

〈토론 1〉

발제문 1에 관한 토론

김병현(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번 발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독립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발표라고 생각한다.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하나의 발표문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분야를 천착한 바 없이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만 보아오던 토론자로서는 발표 내용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하기에는 역부족을 느낀다. 이에 발표문 중 일부에 대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1. 주자성리학자들의 항일운동

위정척사파로 대변되는 유인석, 최익현 등의 항일의병운동은 유교 민족주의 투쟁이며, 그들의 정치사상은 주자학 중심의 중화(中華)를 수호하고, 일본(倭)과 서양을 오랑캐(夷)로 배척하는 주리론적 존화양이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 따라 유인석은 ‘문을 열고 도적을 받아들이어 천하 망국의 근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며 일본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으며,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갚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인고”라며 단발령을 반대하였다. “내 목은 벨 수 있어도 내 머리털은 벨 수 없다”며 단발령을 극렬 반대한 최익현도 유인석과 함께 정통 주자성리학자인 이항로의 제자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항일운동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 수호가 아니라 주자성리학의 道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또, 유인석은 신분이 미천한 김백선이 양반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병들이 보는 앞에서 불경죄를 물어 목을 친 일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에게서도 확인된다. 이인영은 1907년 9월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항의,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위해 휘하 병력을 이끌고 경기도 양주로 집결하였으나 자신의 부친상을 이유로 의병 해산을 명하고 낙향해버렸다. 역시 유교적 전통 질서 지키기에 충실한 경우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항일 투쟁만을 부각하고 있다.

“의병 지도자들은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추대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가국 외교 사절에 통문을 보내 의병 부대를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

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전력에 밀려 패퇴하였다.”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133쪽>

2. 이동회와 자유시 참변

발표문에는 자유시 참변에 대해 사회주의 이동회를 비롯한 한인사회당이 독립전쟁을 위해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돕겠다고 나선 소비에트 러시아뿐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의 후원을 받고자 했으며, 코민테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코민테른의 목적은 적백(赤白) 내전에 한인 무장 부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으며 거액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 임정 간에 ‘대일한로 공수동맹’을 체결했다.

이후 이동회와 한인사회당은 간도·연해주에 있는 무장 부대에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면 소비에트 정부가 무기와 보급을 책임진다.”고 선전하면서 자유시로 집결할 것을 독려했고, 이러한 이동회의 독려에 호응하여 한국인 무장 부대가 속속 자유시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동회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 체결한 공수동맹에 의하면 통합된 한인 무장 부대는 ‘러시아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밀약이 되어 있어서 한인 독립군 부대는 사실상 적군 산하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이동회의 사회주의 계열과 성격이 다른 민족주의 계열은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러시아 적군과 한 편이 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한인 무장 부대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다.

그런데, 자유시 참변에서 한인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가담했던 인물 중 대표자는 홍범도·최진동·안무와 이회영 가문이 만주에 설립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독립운동사에서 빠져있다는 것도 의외이다.

자유시 참변의 계기에 대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대부분 ‘지휘권 다툼’ 또는 ‘주도권 다툼’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일본군을 무찌른 독립군 주력 부대 4,000여 명은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곳에서 서일을 총재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한 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적군의 지원을 믿고 시베리아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인 공산주의자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다.** 결국 적군은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 부대를 공격하여 강제로 무장해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었다.” <미래엔 고등학교 한국사, 179쪽>

3. 암살·테러가 유일한 독립운동 수단

독립운동을 추진할 인력이나 조직, 자금도 없는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살·테러 활동이었으며 대표적 단체가 의열단이었다. 김원봉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의열단은 “끊임없는 폭력만이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암살·테러가 조국독립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암살·테러의 명분조차도 과연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김구 등이 실행한 암살·테러의 명분이 과연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에 딱 떨어지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1919년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수류탄을 투척했다가 애꿎은 기자들을 사망하게 한 강우규의 최후 진술에서도 읽을 수 있다.

“내가 좀 할 말이 있소. 먼저 나는 일본 천황폐하의 성덕을 좀 말하고자 하오. 작년 6월에 세계가 평화 된 이후에 나는 신문에서 이러한 말을 읽어 보았소. 일본천황께서 ‘세계 평화 같이 일반 신민은 인도와 정의로써 모든 일을 대하며 더구나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든지 노력하라’ 하신 칙명을 읽어본 후 나는 일본 천황폐하의 성덕에 감읍하였소. 그러나 재등(齋藤:사이토)이는 저의 나라의 황명(皇命)을 거역한 역적이요, 동양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며 인도·정의를 무시하는 자이므로 나는 죽이려 한 것이요.” <강우규 최후 진술, 1920. 4. 16. 동아일보>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 암살하고자 했던 명분은 ‘동양평화를 중시한 일본 천황의 성덕을 지키고자 함에 있을 뿐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우규를 소개하는 모든 자료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사이토 총독을 처단한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지거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암살의 목적이 독립운동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4. 동북항일연군과 간도특설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중국공산당은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자신들 산하의 빨치산 부대(동북항일연군)로 끌어들여 “항일 무장투쟁의 혁혁한 전사”니 “강철의 국제 대오”니 부추기고 “중국 해방이 끝난 후 조선 해방을 돕겠다.”고 유혹하여 일본군·만주군과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만들었다. 일본이 토벌 과정에서 빨치산을 체포해 보니 대부분이 만주로 이주해 온 한인이었다. 중국공산당이 재만 한인을 빨치산으로 동원하여 일본군·만주군 공격에 앞장서도록 동원한 것이다. 이이제이 수법이다.

이에 맞서 일본도 1939년 3월 간도특설대를 창설하여 빨치산 토벌에 나섰다. 간도특설대는 하사관을 포함한 사병 전원이 한인이었고, 장교는 한인과 일본인이 절반 정도 섞인 한인 위주의 부대였다. 한쪽은 중국공산당, 한쪽은 일본 편에 서서 같은 한인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양쪽 모두 외세를 등에 업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음에도 한쪽은 항일 연합전선을 구축한 독립운동으로, 다른 한쪽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민족의 반역자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현행 교과서에서도 확인이 된다.

“동북 항일 연군 안에는 한국인 중심의 유격대도 있었다. 그들은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지원 아래 함경도 보천보의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급격하였다. 또한 퇴각 과정에서 추격하는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해냄애듀 고등학교 한국사, 219쪽>

한편 2021년 7월 10일 작고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장군에 대해 일제 시기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죄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간도특설대’는 ‘독립군 토벌부대’로 낙인이 찍혀있다.

5. 건국대통령 이승만

앞서 언급한 여러 케이스의 항일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은 결국 이승만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불과 4쪽 내외 분량의 짧은 글이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부류의 항일 의병 운동이나 독립운동가와는 극적으로 대비된다.

『독립정신』, 『한국교회 필박』 등의 저서와 당시 국내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그리고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언한 『일본 내막기』 등의 저서와 미국 유학을 통해 서양사(특히 미국사), 정치학, 외교학, 국제법 등 근대적 학문에 통달한 일 등이 이승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미증유의 학문적 역량이다.

또, 국제 통상 및 국제법 전문가로 미국의 고위 관료나 외교관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갖고,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친우회, 한미협회,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친한회 등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등의 활동은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대단한 자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100년도 전에 외친 독립정신 6대 강령은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6대 강령에 나오는 개방과 교류, 통상, 경쟁, 외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국은 선진국에 오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는 위대한 인물 이승만에 대해 대단히 인색하다. 홍범도나 전봉준은 커녕 위안부보다 그 서술 분량이 적다. 이승만의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임시정부나 대한민국 건국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여러 인물 중의 하나일 뿐이며, 싹터라도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편집하였다.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정리 교실 다음은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자.

조봉암

직선제

장면 내각

4·19 혁명

내각 책임제

1.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 (으)로 선출하는 발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 ㉡ 은/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큰 지지를 얻었지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처형당하였다.
3.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 이/가 일어나자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4.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세워진 과도 정부는 ㉣ 와/과 양원제 국회를 채택한 개헌을 단행하였다.
5.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 시행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 이/가 구성되었다.

▲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264쪽.

이승만에 대해서는 장기집권, 3.15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붕괴를 내세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2 다음 인물의 행적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가)



이승만

(나)



이동휘

(다)



김마리아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총리로, 이후 고려 공산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다.

㉢ 한국을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둘 것을 윌슨에게 제안하였다.

▲ 해냄에듀 고등학교 한국사, 177쪽.

이동휘를 임시정부 초대 총리로 소개했다면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것이 공평하다.



새 국가 건설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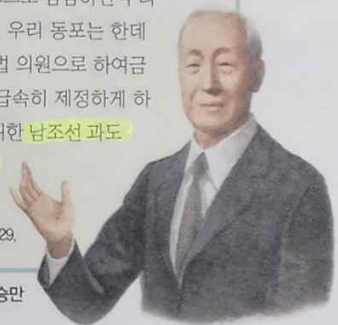
▶ 관련 내용 235~240쪽

나와 나의 동료는 오직 완전히 통일된 자
족의 민주 국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생을
마칠 결심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가림 없
이 심부름을 시켜 주시기 간절
히 바랍니다. 완전히 독립
자주하는 통일된 신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 분투합시다.
- 자유신문, 1945. 11. 24.



김구

나는 좌우 합작의 성공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정책이 공산주의와 합
작을 단념하였으므로 캄캄하던 우리
의 길은 열렸다. 우리 동포는 한데
뭉치어 임시 입법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거 법안을 급속히 제정하게 하
여 남북통일을 위한 남조선 과도
정권을 수립해
야 한다.
- 동아일보, 1947. 4. 29.



이승만

단독 정부가 출현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반대할 것이다. 현
재 좌우익은 악화된 감정과 경제
적 이해에 관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다. 좌우익이 합작해 우리 민족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
일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중외신보, 1946. 6. 12.



여운형

우리는 정권을 위한 투쟁을 전국적 범위
로 전개해야 하니, 해방 후의 새 조
선은 혁명적 민주주의의 조성이 되어
야 한다. 기본적 민주주의적 여러
가지 요구를 내세우고 이것을 철
저히 실천할 수 있는 인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8월 테제, 1945. 9. 25.



박헌영

▲ 비상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241쪽.

김구는 완전한 통일국가를 주장, 이승만은 남조선 과도정권을 주장한 것으로 대비하여
김구는 통일세력으로 이승만은 분단세력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끝-

<발제 2>

이른바 ‘민주화운동’ 의 이면

- 용공조작은 없었다 -

이 강 호(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민주를 훔쳐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해온 28편의 이야기>

1.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혁명	15. 반발에 부딪힌 장면 정권의 반공법 제정 시도
2. 자유와 민주, 자유 빠진 민주는 허상	16. 북한의 기대와 책동은 5·16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3. 자유의 이념이 번영을 예약했다	17. 6.3사태의 이면, ‘민비연’의 성향
4. 해방공간의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	18. ‘민비연’을 만든 황성모의 이력
5. 1980년대 주사파의 팸플릿을 연상케 하는 내용	19. 뿌리인 한민당은 좌익은 아니었는데
6. 해방공간 남북합작의 이면, 우익 ‘민족’ 진영에 침투한 공산주의	20. 반유신 민주화투쟁의 이면
7. 사라진 적대적 타자와 싸움을 부추기는 ‘현혹과 착란’	21. ‘한민통은 反국가단체’라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
8.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 문제가 아니었다	22. 전두환 시대 386운동세력의 내막
9. 4·19 직후 ‘통일운동’ 대두의 배경	23. 운동권 주류세력은 본래 친북이었다
10. 좌익들의 의도적 책동	24. 사회주의권 몰락에도 NL주사파가 북한에 더 매달린 이유는?
11. 혁신계와 대학가, 보조를 맞추다	25. NL주사파의 정치권 진입의 결과
12. ‘식민지·반(半)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이라니!	26. 김대중과 노무현에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13. 김일성, 4·19 직후 북한 주도 통일 노리고 남한 진보 단체 접촉 시도했다	27. 中·北과 더불어, 범죄와 더불어
14. 김일성의 1960년 8·15 경축사	28. 탈취당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인이라면 대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통합적인 긍정적 인식이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한편의 어떤 통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민주화’와 관련한 것인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마침내’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같은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1987년 6월에 ‘비로소’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라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화를 한 나라가 된다. 그런데 산업화의 성취가 민주주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역설적이게도 산업화를 위해선 민주

주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합리화시켜주게도 된다. ‘1987년 6월 이후 민주화’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민주화는 상대적 지위의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1.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혁명

1987년 6월에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한국의 자유민주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 자체다. 그 이전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나마 처음으로 자유민주체제 속에서 살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단순히 잃었던 나라 조선의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왕조체제와는 전혀 다른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탄생이었으며 한국인은 그리하여 오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신민(臣民)이 아닌 국민(國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혁명이었다.

2. 자유와 민주, 자유 빠진 민주는 허상

대한민국 건국의 자유민주혁명으로서의 의의에 대한 물이해와 함께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분리다. 좌파진영은 민주를 신성의 깃발마냥 앞세우지만 자유는 헌신짝 다루듯 한다. 아예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데 혈안이다. 자유 없는 민주가 있기는 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따위들이다. 김가 일족 삼대 지배체제의 북한도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있다. 자유가 떨어져 나간 민주는 결국 그렇게 압제 체제를 포장하는 기만적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의 한국의 민주정치는 선진국, 또는 오늘의 한국인들이 당연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했다 해도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달고 있는 ‘민주’라는 간판의 기만성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아무리 독재라 질타한다 해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등 독재자의 반열에 끼워줄 만큼은 못된다.

3. 자유의 이념이 변명을 예약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자유’를 당연시한다. 온갖 난장(亂場)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정작 ‘자유’의 삭제에는 아무런 긴장을 갖지 않을 만큼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자유

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에만 존재한다. 지금 남쪽 5천만이 누리는 자유의 탄생에는 분명 생일이 있다. 1948년 8월 15일이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한반도에 자유가 강림(降臨)했다. 자유를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구체적 제도와 체제로서의 자유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자유의 탄생일이다.

다른 모든 나라의 자유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해방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3년, 격렬한 정치적 진통이 이어졌다. 해방의 감격에 뒤이은 소박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팽배했던 때였다. 어쨌든 남북 단일의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떤 이념과 체제로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운명을 건 선택이요 양립 불가능한 생사의 선택이었다.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다. 북한은 결국 현존하는 지옥도(地獄道)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번영의 길로 나아갔다. 북한은 ‘공산’을 택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를 택한 결과였다.

4. 해방공간 시절의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

민주주의는 자유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 3년간의 시절 좌익세력은 민주를 앞세웠지만 그 민주주의는 자유 없는 민주였다. 결국 그들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다른 표현이었다.

해방공간 시절인 1946년 출간된 <民主主義 十二講>(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학 개론 서적 같다. 하지만 그런 책이 아니다. 해방 1주년 기념으로 ‘문우인서관(文友印書館)’이라는 출판사가 발간한 책인데 문우인서관은 남로당의 통일전선 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해방연보>(1947)를 발간하기도 한 출판사다. 문우인서관은 남로당의 출판사다. 즉 <민주주의 12강>은 남로당이 펴낸 좌익 이념서적이다.

집필진들을 보면 그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제1강 민주주의와 국제노선’의 필자는 이강국(李康國, 1906~1957)이다. 이강국은 남로당 수뇌부의 한명이었다. 1946년 월북

하여 북한 외무성 차석부상을 지냈다. ‘제3장 민주주의와 경제’의 필자는 박문규인데 그는 이강국이 월북한 뒤 민전사무국장을 이어받았다. ‘제5장 민주주의와 인민’의 필자는 박치우인데 나중에 빨치산이 되었다. 그 외의 필자들도 모두 그런 공산좌익의 인물들이다. 즉 <민주주의 12강>은 당시 남한의 공산좌익 세력들의 주장을 담은 책이다.

엮은이 김계림은 일선에서 분투하는 '인민적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인민적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 국가·민주주의사회 건설' 등이다. '민주주의'가 당시 이미 공산좌익 운동의 슬로건으로 잠식당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4장 민주주의와 문화’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치 않은 시사점이 있다.

5. 1980년대 주사파의 팸플릿을 연상케 하는 내용

“우리 운동은 반제, 반봉건 민족혁명인 것이고 우리 정치노선도 근로대중, 소시민, 지식분자, 진보적인 민족부르조아들을 무산계급 영도 밑에 집결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구성해 일제 잔재 반동파쇼분자와 봉건 잔재를 숙청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다.”

“금후 우리 예술운동의 주요한 행동은 공장에 농촌에 가두에 광범한 씨클, 클럽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 ‘씨클’은 예술운동의 온상인 동시에 우리의 정치노선을 삼투시키는 한 개의 말단기관이다. (...) 마치 조직으로 볼 때에 문어발과 같이 자기의 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 공장에, 농촌에, 가두에 수다한 문학동호자단체, 소인극단, 음악단체, 미술단체 등을 구성해서 혹은 자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인용한 대목은 굳이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마치 1980년대 86세대 운동권의 팸플릿의 내용처럼 느껴질 것이다. 86세대 운동권의 시절은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책자가 나온 지 40여년의 간극이 있다. 하지만 마치 바로 이어진 듯 생생한 동질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착오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만을 기준으로 하는 발상이 갖는 시차 없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공간 시기의 그 같은 기만적 민주론의 위험이 어떤 것인지는 몇 년 뒤 곧바로 확인됐다. 공산좌익세력들은 시종 ‘민주주의’를 떠들어댔지만 기회만 나면 ‘무장반란’을 일으키곤 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6.25라는 전면전의 침략전쟁을 자행했다. 그런데 그 같은 위험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6. 해방공간 남북협작의 이면, 우익‘민족’진영에 침투한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초기부터 국제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이후 특히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후발국들에서는 민족주의가 좌익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상황이 일상화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 건국에 이르기까지 3년간, ‘민족’이라는 구호는 일단은 우익 진영의 것이었다. 그런데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민족’에 서서히 좌익적 관념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앞두고 한때 민족진영의 거두로 자리매김했던 김구, 김규식 등이 민족 단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고 김일성을 만난 것도 그런 경우였다. 김구 등의 ‘이탈’은 단순히 ‘민족적 열망’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1950년 2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북협상파와 임정 계열 일부 출마자들을 지원하던 중 경찰에 검거된 거물급 간첩 성시백이라는 인물의 공작이 있었다.

7. 사라진 적대적 타자와 싸움을 부추기는 ‘현혹과 착란’

적대적 타자로서의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적대적 타자로 삼는 것은 ‘현혹’을 야기하고 새로이 맞게 된 명백한 적대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만든다.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6·25남침과 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전복책동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태세를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사라져버린 일제를 적대적 타자로 되새기는 일이 반복됐다.** 착란 상태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이었던 6·3사태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민족끼리’라는 기만적인 구호에 현혹당하는 착란이 반복되고 있다.

8.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 문제가 아니었다

4·19의 직접적인 원인은 3·15 부정선거였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의 부정기 아니었다. 당시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단일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 분리 선거였다. 그래서 정·부통령 선거였다. 이승만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후보였다.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이 사망했기 때문이었고,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이미 확정된 셈이었다.

3·15 부정선거와 그 결과 발생한 4·19의 유혈 사태 등에 대해 이승만의 포괄적인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승만 단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하자고 할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4·19의 학생 시위에 편승한 야당은 곧바로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선동이였다.

아무리 정당성을 갖는 혁명이라 해도 선동은 늘 경계되어야 한다. 선동의 정치가 절제와 고삐를 풀게 되면 또 다른 후유증을 낳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잠재요인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4·19 이후의 양상은 어떠했는가?

9. 4·19 직후 ‘통일운동’ 대두의 배경

4·19 이후 학생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붐(boom)을 이루기 시작했다. 1960년 11월 1일 서울대학교에서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이 출범했다. 민통련은 1961년 5월 3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내걸고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했다. 그리고 1961년 5월 무렵까지 서울과 지방의 18개 대학에 민통련이 결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4·19 이후 상황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좌익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 좌익 세력은 6·25를 거치며 한국에서는 일단 몰락했었다. 하지만 잔존 세력들은 남아 있었고 대학가를 비롯한 지식계층에는 좌익적 사조에 감염되기 쉬운 풍조가 상존하고 있었다. 잠재되어 있던 ‘요소’가 4·19 이후의 때를 만나 다시 발호하기 시작했다.

통칭 ‘혁신계’라 칭해진 그런 세력들이 정치적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4·19 이후 치러진 7·29 총선에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단일정당이 아니었던 탓에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혁신계**는 이후에도 정치적 움직임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통일운동**이었다.

10. 좌익들의 의도적 책동

당시 학생들이 처음부터 곧바로 통일 논의로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 나타난 움직임은 한국의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는 ‘근대화 연구 활동’이었다. 그 중심에는 1950년대 후반 서울대에 등장했던 ‘이념씨클’들이 있었다. 이들 이념씨클은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는 등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자유민주체제를 전제로 한 근대화론, 후진국 발전론 등이 논의의 주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가에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해 기왕의 그런 움직임 모두를 압도하고 삼켜버렸다. 통일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1960년 7·29 선거 이후 그 같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통일운동의 논리는, 한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외세가 몰고 온 분단이기 때문에 독재정권을 타도한 열정으로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38선 타파**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대를 바로 사는 청년운동의 길이라는 것이었다.¹⁾ 서울대학교 민통련은 그 논리에 입각해 결성된 조직이었는데, 당초 ‘근대화 연구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모임들도 결국 이 통일운동 조직에 참여했다.

4·19세대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이영일 전 의원의 회고가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이영일은 광주일고를 나와 1958년 서울대 문리대에 진학했으며 4·19 혁명 당시에는 정치학과 3학년이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4·19 혁명 56주년을 맞이한 2016년 4월 19일 제62회 이승만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4·19 당시 젊은 학생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박사는 알지만 그분이 독립운동과 건국을 위해, 한국전쟁과 휴전과 한미방위 동맹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바로 이 무지의 공간을 파고든 것이 친북좌파들이었다. 이승만 박사 때문에 적화통일이 안된 것을 몹시 애통해했던 친북공산주의자들이 나서서 4·19 이후의 혼란을 틈타 반 이승만 모략책동을 치밀하게 펼쳤다.”

이영일은 덧붙여 **통일운동을 들고 나온 서울대 민통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4·19 직후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된 후 필자(이영일)는 민통련의 선전위원장으로 활약했는데 이때 한국의 각지에 잠재되어 있던 공산분자들이 제철을 만난 듯 민족통일연맹운동에 날파리 떼처럼 몰려들었다. (...) 이들은 (...) 이승만의 건국노선을 소남한단정(小南韓單政) 노선이라고 맹공하였다. (...) 김구(金九) 선생 중심으로 통일되었어야 할 나라가 이승만이 미국과 짜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매우 그럴듯한 소리였다. 이 주장이 허구였음을 내가 깨닫는 데 반세기가 흘렀다.”

이영일은 4·19세대의 주역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이후 결성된 통일운동 조직 서울대 민통련의 핵심 당사자인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당시의 통일운동에 대해 “무지의 공간

1) 「뉴데일리」, 2016.04.26., “이승만 박사와 4·19와 나.” 이영일

을 파고든 것이 친북좌파들”이었으며 “한국의 각지에 잠재되어 있던 공산분자들이 제철을 만난 듯 민족통일연맹운동에 날파리 떼처럼 몰려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²⁾

11. 혁신계와 대학가, 보조를 맞추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공산분자들이 제철을 만난 듯 몰려들었던’ 통일운동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갔다.

1960년 9월 1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준비위원회 결성

1960년 12월 6일 사회대중당, 민주적 평화적 조국통일촉진방안 발표

1961년 2월 13일 혁신계 신문 「민족일보」 창간

1961년 2월 14일 통일사회당과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 14개 정당 및 사회단체들,
‘한미경제협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1961년 2월 2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결성, 남북협상 주장

「민족일보」 창간 하루 전인 1961년 2월 12일 서울시내 7개 대학 민통련이 ‘한미경제협정 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틀 뒤 2월 14일 혁신계는 7개 대학 민통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한미경제협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서울대 민통련이 1961년 5월 3일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 이틀 뒤인 1961년 5월 5일, 전국 18개 대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혁신계 조직인 민자통은 대학가 민통련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여 1961년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쉼기대회’를 개최했다. 4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는 ‘남북학생회담의 전폭적 지지’, ‘남북 정치협상 준비’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를 했다. 구호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였다.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다. 부산(5월 13일), 광주(14일), 대전(14일) 등으로 시위가 이어졌고 전주 16일, 대구 17일로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위는 열리지 못했다. 1961년 5월 16일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2) 「뉴데일리」, 2016.04.26., “이승만 박사와 4·19와 나.” 이영일

12. ‘식민지·반(半)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이라니!

1961년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사적 현 단계의 기본적 특징은 식민지·반(半)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식민지적·반(半)식민지적 반(半)봉건성의 요소”를 척결하고 “민족·대중 세력은 매관료세력을, 통일세력은 반(反)통일 세력을, 평화세력은 전쟁세력을 압도”하여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대학가와 혁신계의 정치 인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보여준다.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 논리는 의도했던 아니든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스탈린의 민족 전략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북한 공산세력의 대남전략의 핵심이기도 했다. 당시 남한을 식민지·반식민지로 규정짓고 민족해방투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투쟁 대상은 미국이 된다. 따라서 선언의 내용은 반미투쟁을 주창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민족주의 정서’와 ‘통일’이라는 구호에는 비수(匕首)가 숨겨져 있다. 이념을 달리하는, 더욱이 혈전을 치른 두 개의 적대적 체제 사이에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은 감상이나 기만,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남쪽에 낭만적 감상이 있었다면 북한에는 그것을 파괴하는 대남전략이 있었다. 그 실상을 말해주는 자료 하나가 2013년 1월 17일 미국에서 공개되었다. 미국의 공공 싱크탱크의 하나인 우드로 윌슨 센터(이하, 윌슨 센터)³⁾가 밝힌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김일성, 4·19 직후 북한 주도 통일 노리고 남한 진보단체 접촉 시도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60년 4·19 혁명 직후 북한 주도의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 실제로 대남전략 추진에 들어갔다.”

“김일성이 ‘남한 문제에 대한 발 빠른 정책 결정을 위해 남한문제중앙국(CBSKI)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CBSKI 설립은 남한 내 지하조직을 부활시키고 평화통일 선전 작업을 위한 것이다.”

“남한 출신의 인민군 10만 명 가운데 일부를 통일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공산대학을 설립했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4·19 혁명이 진정한 계급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

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https://www.wilsoncenter.org/>

만 학생조직이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고 남한 내 진보단체와 접촉을 시도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도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4·19 혁명 직후 남북통일이 가능성의 단계가 아니고 실제로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월슨 센터는 옛 소련의 평양 주재 대사였던 알렉산더 푸자노프(Aleksandr Mikhailovich Puzanov, 1906~1998)가 1960년 3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한 20건의 저널(개인 기록)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 상기한 내용을 밝혀내었다.⁴⁾

14. 김일성의 1960년 8·15 경축사

4·19 혁명 이후 7·29 총선을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은 하루 앞서 발표한 8·15 경축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남전략 상의 매우 중요한 정책 하나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바로 ‘**연방제통일 방안**’이었다. 북한이 남북연방제통일 방안을 내 건 것은 이때가 최초였는데 이후 이 연방제통일 방안은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확립되었다.

일찍이 레닌은 ‘민족 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강력한 공산국가와 비공산 민족국가가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거쳐 프롤레타리아의 완전 통일국가에 도달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일성의 연방제 방안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구사하고자 한 남한 적화의 실천 수단이었다.

실제로 연방제 방안에는 소련의 ‘조언’이 있었다. 남한의 4·19 혁명 직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1960년 5월 초, 쿠즈네초프 소련 외무성 부상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김일성에게 “남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와 무력남침에 대한 공포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남 정부 당국 간의 연방 형성 제안”을 말했다.

김일성이 당시 소련의 조언에 따라 연방제통일 방안을 제기한 것은 남한에서 4·19 이후 무르익어 가는 혁명적 정세의 성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4·19 이후인 1960년 7월 29일에 행해진 남한의 총선에서 **혁신계의 의석 확보가 꽤 성공한 상태였다**. 민의원에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 참의원에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이 각각 1명

4) North Korean Perspectives on the Overthrow of Syngman Rhee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north-korean-perspectives-the-overthrow-syngman-rhee>

씩, 총 8명이 진출하게 된 것이었다. 6·25를 거치는 동안 사멸한 듯 보였던 좌익 정치세력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교두보를 갖게 된 것이다.

남한에서 좌익 정치세력이 다시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2004년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때 10석을 확보했는데 1960년 혁신계의 의회 진출 이래 실로 44년 만이었다. 어쨌든 1960년 당시 혁신계의 의석수는 비록 2004년의 민노당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그 비율은 높았고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당시 남한의 그 같은 정세 전개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리 없었다. ‘통일’을 외치는 혁신계가 드디어 의회 진출에 성공을 했고 한편으로 학생 사회에서는 통일운동 세력이 결집되고 있었다. 김일성이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경축사에서 **남북연방제통일방안을** 제기한 것은 바로 그 같은 흐름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겨냥은 적중했다. 남한에서는 혁신계와 그에 호응한 학생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1961년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축진 궐기대회’에는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게 된 것이다.

15. 반발에 부딪힌 장면 정권의 반공법 제정 시도

4·19 이후 혁신세력이 대두하며 불을 지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통일론은 **민주당이 이미 거부했던 ‘조봉암-진보당’ 노선의 또 다른 되풀이였다**.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는 그 흐름을 더욱 부추기고자 한 것이었다. 장면 정권이 김일성의 ‘연방제통일 방안’ 제안을 즉각 거부한 것은 당연했다. 장면 정권은 남북학생회담과 남북협상 등 대학가의 통일운동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⁵⁾을 제정해 사태의 혁명적 발전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의 반공법 등의 제정 시도는 거센 반발의 벽에 부딪혔다. 반대하고 나선 것은 혁신계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구과가 떨어져 나가 따로 당을 만든 신민당의 일부와 반공성향을 기본으로 했던 신평회(新風會)까지도 반대대열에 나선 것이다. 이들을 비롯한 30여 개 단체들은 1961년 3월 18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기왕에 존재했던 보안법까지 문제 삼으며 전국적인 ‘악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하여 급기야 1961년 3월 22일에는 학생들과 혁신계는 횃불 데모까지 감행해 경찰과 유혈 충돌마저 발생했다.

5) 5.16 직후인 1961년 7월3일 반공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공법 제정을 최초로 제기한 쪽은 4.19에 뒤이어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2대 악법 성토대회’를 연 혁신계의 시위대는 뒤이어 ‘장 정권 타도’를 외치며 명륜동 장면 총리 집으로 몰려갔다. 당시 시위에서 ‘남북회담’, ‘미군 철수’는 물론 급기야 ‘김일성 만세’라는 외침까지 나왔다.

윤보선 대통령은 비서실장의 지프를 타고 와서 직접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윤보선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월 23일 장면 총리에게 거국일치내각을 구성하고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장면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단지 ‘현 시국이 위기’라는 진단만 있었을 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끝났다.

16. 북한의 기대와 책동은 5·16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 가운데 1961년 5월에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는 움직임은 계속 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적신호(赤信號)는 ‘데모’만이 아니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간첩 침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통일운동’ 인사들이 월북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흐름이 계속 방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 김일성의 ‘희망’이 단지 희망으로만 그쳤을까? 월슨 센터 보고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 당시 4·19 직후의 북한의 대남전략 추진은 “결국 남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17. 6.3사태의 이면, 민비연(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성향

1964년 3월 24일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한 서울대 시위대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 민족반역적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동경 체재 매국정상배는 즉시 귀국하라.
2.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3.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자본가의 앞잡이를 즉시 축출하라.
4. 친일 매국하는 국내 매관자본가를 타살하라.
5.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하지 말라.
6. 제국주의 일본 자민당정권은 너희들의 파렴치를 신의 양화(殃禍)를 입어 속죄하라.
7. 박(朴) 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봉쇄치 말라.
8. 오늘 우리의 쫓겨난 역사를 증언하려니와 우리의 결의와 행동이 ‘신제국주의자’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그런데 시위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23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라는 학생단체 주최로 ‘한일관계 강연회’가 있었다. 민비연은 196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는데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주도한 것은 이 민비연이었다.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좌익 이론 학습과 무관할 수가 없다.

18. ‘민비연’을 만든 황성모의 이력

1964년 8월 14일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도예종, 이재문, 박현채, 김중태, 김정강, 현승일, 김도현 등이 체포되었다. 그중 김중태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주도하던 민비연의 회장이었다. 김중태는 1965년 9월 ‘1차 민비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15개월을 복역하고 출옥한 김중태는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2차 민비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 관련자인 서울대 사회학과 황성모 교수가 민비연을 조직하고 이끈 지도교수였던 것이 문제였다.

황성모는 6·25 당시 북한군에 복무하다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에 잡혀 거제 포로수용소에 갇힌 바 있다. 독일 유학 시절에는 동베를린을 방문했으며, 거기서 서울대 후배인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었다. 이른바 민주진영에선 당시의 이 사건들을 모두 ‘용공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19. 뿌리인 한민당은 좌익은 아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공간 당시의 우익정당인 한국민주당이 뿌리다. 한민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사안에 따라 갈등을 빚기는 했다. 하지만 공산좌익세력에 맞서며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의 위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한민당을 이은 민주당 세력은 박정희 시대 내내 박 정권에 맞섰다. 그러나 그럼에도 민주당 세력은 우파로서의 기본 정체성은 지켰다.

그런데 우익정당인 한민당을 뿌리로 하고 그 맥을 이은 당이 이제는 좌익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오랜 역사적 경과와 굴곡을 거치는 동안 그렇게 되어 갔다. 그 양상을 1971년 대통령 선거전의 모습에서부터 따라가 보겠다. 더 이전부터도 되지만 당시 대선에서부터 좀 두드러져 보이는 대목이 이어진다.

1971년 대선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4대국 안전보장론과 대중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4대국 안전보장론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대중경제론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종속이론이라는 좌파 이론의 아류였다. 그럴 만했다. 김대중 후보 명의의 <대중경제론>의 실제 저자는 소년 빨치산 출신으로 좌파 성향이 여전한 **박현채**였기 때문이다.

1972년 이후 유신시대, 신민당은 박정희 정권에 강하게 맞섰다. 반유신 민주화투쟁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좌경세력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싹의 발호는 이미 그 이전부터였다. 1964년 인혁당 사건, 1968년 통혁당 사건은 명백한 친북좌익공산세력의 사건이 있었다. 1974년의 2차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었다. 용공조작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의 이른바 민주인사들의 상당수는 그 점을 헤아리지 못했다. 민청학련 사건 당사자들 상당수도 그 배후의 인혁당을 모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은 좌익정당이 되지는 않았다. 신민당의 이철승은 해방공간 당시부터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던 만큼 ‘안보와 반공’에 있어선 박정희 정권에 확실히 협조했다. 김영삼도 박정희 정권에 강경하게 맞섰지만 좌익은 전혀 아니었다.

20. 반유신 민주화투쟁의 이면

그러나 이른바 재야민주세력 속에선 좌경화가 만만찮게 퍼져가고 있었다. 학생운동도 그랬다. 공단의 야학운동, 농민회 운동도 그랬다.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침투했다. ‘운동’을 위해 교회 쪽으로 꾸역꾸역 모여드는 이들이 있었다. ‘투쟁’을 위해 종교적 외피를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다. **해방신학**을 베낀 것이었다.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게 등장했다. 의도했던 아니든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反종교적 유물론자들의 ‘목적’에 활용되었다. 베트남공산화와 중공 찬양의 내용을 담은 리영희의 책(전환시대의 논리, 1974; 8억 인과의 대화, 1977)을 비롯한 각종 이념서적들이 줄을 이었다.

1979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은 그런 좌경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공안사건이다. 남민전 관련자들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남민전의 주도 인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81년 옥사한 이재문과 1982년 사형당한 신향식은 제외되었다.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 모두가 친북좌익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으로서도 주동자인 이재문과 신향식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게 할 수 없었다.

21. ‘한민통은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

‘김대중 납치사건’의 원인이 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라는 조직이 있다. 한민통은 1978년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사건 때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민통은 1989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한국 대법원은 1997년 “반국가단체로서 약칭 한민통으로 불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한민통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변경,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통련은 현재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관지로 「민족시보(民族時報)」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시보」는 김대중 정권 때는 물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친북 매체로 공식적으로 규정해 있다. **한민통과 그 후신 한통련** 관련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든 간에 한민통과 그 후신 한통련은 친북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2. 전두환 시대 386운동세력의 내막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뒤 ‘서울의 봄’이 있었다. 민주화의 열망이 들끓었다. 그러나 돌연 찾아온 봄은 폭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마감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었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입장에서는 통한의 좌절이었다.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의 좌경화 흐름이 격화돼 갔다.

전두환 정권 시대 학생운동권은 특히 완연하게 좌익운동이 되었다. 1970년대 반유신 시대만 해도 좌익이론 학습은 나름 은밀했다. 그러나 전두환 시대 386세대 학생운동권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습은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지하씨클’만이 아니라 공개된 학과별 과학회(科學會)와 ‘오픈씨클’에서도 공공연히 좌익이론 학습이 이루어졌다.

서울대의 경우 ‘5대 패밀리’ ‘10대 씨클’로 불리는 학생운동 핵심 지하씨클들은 그렇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각종 좌익이론을 학습함과 아울러 선배로부터 ‘한국의 변혁운동사’를 배웠다. 선배는 이렇게 가르쳤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박정희 시대의 4대 공안사건 인혁당·통혁당·해방전략당·남민전 등은 모두 남한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이다.**” 그렇게 배운 이들은 그다음의 후배들에게 또 그렇게 똑같이 가르쳤다.

그리고 ‘5대 패밀리’로 일컬어진 핵심 씨클들은 각각의 씨클들의 역사 또한 자랑스럽게 학습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전후 시기의 좌익운동에 맥이 닿는다는 것, 그리고 **인혁당이나 통혁당 관련 인사의 맥을 이어받았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빨치산 출신 박헌채와 통혁당의 신영복 등이 떠받들어진 데는 그런 연유가 있었다.

학생운동권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노선투쟁을 벌이고 이론투쟁도 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덧 노선투쟁은 백가쟁명식으로 확장되고 MT(민투) CA(제한의회파) 등 급진적인 흐름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주류세력을 자부한 MC(Main Current)세력은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을 앞세우는 노선을 일단은 고수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MC가 온건파인 것은 아니었다. MC는 본질적으로는 오랜 뿌리를 갖는 민족해방 즉 NL노선을 내면화하고 있는 세력이었다.

23. 운동권 주류세력은 본래 친북이었다

MC(Main Current)의 노선은 말하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선행하자는 것이었다. 먼저 민주화를 앞세워 정권을 타도하고 **이어서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분단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다.** 그게 민족해방이었다. 이것은 사실 북한이 일찍이 제시한 노선과 동일했다. 386운동권의 중북노선은 1980년대 중반 강철서신(김영환 저, 1989, 주체사상을 처음 소개)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대두된 게 아니다. 운동권 주류 세력은 본래가 친북을 내화하고 있었다. 단지 조심스럽게 삼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PD(민중민주)는 MC계열 가운데 한 세력의 재정립이었다. PD는 노동운동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던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했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했다. 직접적인 친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성도 인정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역량 강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주사파가 대두되고 운동권 내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돼 가면서 운동권 내부의 격변이 있었다. MC계열은 주사파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그럴만한 귀결이었다. NL이며 친북이라는 본질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운동권 내 노선 대립은 **NL주사파 대(對) PD로 정리돼 갔다.** PD계열은 노동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반면 NL주사파는 **김일성주의 추종**을 노골화하면서도 ‘민주화’를 당면과제로 하여 대중노선을 내걸고 학생운동을 장악해갔다.

그렇게 하여 학생운동권에서 NL주사파의 주도권이 확립돼 가는 가운데 1987년이 왔다. ‘6월 항쟁’이 있었다. 이어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6.29선언이 있는 뒤인 1987년 8월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인 전대협이 결성됐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발족 선언문에서 ▲외세 배격과 독재 종식을 통한 자주적 민간 정부의 수립,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기여 등을 내걸었다. ‘외세 배격’과 ‘자주’는 북한이 늘 앞세우는 상투적 구호였다. **전대협의 노선은 NL주사파 노선이었다.**

24. 사회주의권 몰락에도 NL주사파가 북한에 더 매달린 이유는?

당시 운동권의 투쟁은 결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 PD와 NL 등 노선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분명한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하지만 87체제가 수립되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프레임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훈장(勳章)’이 되면서 더 이상 그 점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갔다. 때로는 또 다른 훈장의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87체제 시대는 민주화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운동의 흐름이 사회 도처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퍼져간 **좌경화 창궐의 시대**가 됐다. 1987년 대선은 야권분열로 인해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어쨌든 운동권의 핵심분자들은 이념적 확신을 그대로 가진 채 도처의 각 영역으로 퍼져갔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시작된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의 와해가 그 같은 흐름에 동요를 가져오기는 했다. 당시를 계기로 운동권을 떠난 이들도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당 정도는 그대로 ‘운동’을 이어갔다. 굳어진 습관성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이러니한 양상이 있었다. **운동을 떠나거나 전향을 하는 경우가 주사파 계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PD계열의 입장에선 소련을 필두로 한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이념적 직격이었다. 하지만 주사파는 이념적 심리적인 탈출구가 있었다.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김일성주의는 단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을 내걸고 있었다. 그것을 상징화한 기치가 ‘우리민족끼리’다. 주사파는 애초에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심도 깊게 학습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다. 때문에 사회주의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민 자체가 별로 없었다. 민족이 중요했고 감성이 중요했다. 주사파의 입장에선 북한이 존재하는 한 자신이 그간 고수해왔던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었다. 더욱더 북한에 집착하게 되기까지 했다. 어

떨든 결과적으로 운동권 전체적으로 주사파는 더욱더 다수가 돼 버렸다.

25. NL주사파의 정치권 진입의 결과

그런데 이 같은 양상은 운동권 출신의 정치권 진입과 관련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갖게 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은 이른바 “젊은 피 수혈”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시 30대였던 386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다. 물론 그전부터도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권 진입은 계속 있었다.

운동권 출신들이 결국에는 통속적 출세지향을 택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권 주류세력의 오래된 전략적 선택이었다. 제도권 정당에 거점을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다. 그래서 김영삼 쪽으로 향하는 것도 굳이 터부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김대중 쪽으로 간 이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그 상당정도가 학생운동권의 본래 주류인 MC계열에서 NL주사파 성향의 전대협 출신으로 이어지는 부류들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운동권에서는 이미 NL주사파가 다수였다. 그리고 PD계열들은 본래 노동현장 진입을 기본으로 했다. 정치권 진출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당 건설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기존 정당 특히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진입한 것은 결국 NL주사파 성향이 절대 다수였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은 그 귀결이다.

26. 김대중과 노무현에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운동권 시절 가졌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PD든 NL이든 마찬가지다. 변화하고 발전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개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운동권 당시의 사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NL주사파 출신들은 그런 경향이 더했다. 물론 그들도 동요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위축 정도였다.

그런데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까지 연이어 집권에 성공하게 되자 그나마의 조심스러움도 사라지고 자신들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옳았다는 확신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런 경향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별달리 운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이 새삼스레 들뜨고 과격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그러다가 정권을 잃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치게 되자 대결의식이 격화됐다.

그런 와중에 김대중의 민주당을 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28일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주도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었다. 왜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일까?

27. 中·北과 더불어, 범죄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으로 정권을 탈취한 ‘더불어’당은 좌경적 성향을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각종 단체와 민노총 등에 파리를 튼 운동권 출신 및 동조세력들의 중복좌경화 경향은 더욱더 심화되고 만연해 갔다. 북한은 이제 남파간첩을 직파할 필요가 없다. 기회만 닿으면 직접적으로 포섭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발적인 중복세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근래 연속적으로 적발된 간첩단의 창궐은 그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더불어당은 그런 가운데 그들이 무엇과 더불어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더불어’의 대상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지향의 국민들은 배제돼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물론 미국도 ‘더불어’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능멸하는 중공과,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대는 북한과는 더불어 가고자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당은 문재인 시절 통진당과 다를 바 없이 닮아갔다. 그러더니 이재명 때에 이르러선 ‘좌경화’와 ‘범죄적 행태’가 한 덩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좌익세력은 이런 행태가 드물지 않다. 원리주의적인 좌경적 확신이 양심을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좌익은 “양심은 부르주아의 허위의식”이라고 되뇌곤 했다. 그들의 윤리학에는 거짓말과 기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가 드러났다. 예정된 타락이다.

28. 탈취당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민주화운동’이 신성(神聖)의 깃발마냥 행세해왔다. 하지만 그 공로를 아무리 인정해준다고 해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민주화운동’만에 의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바탕은 첫째는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 건국 자체이며, 둘째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성취다. 1987년의 민주화는 그 기반 위에서 이룩된 정치적 성숙으로 간주돼야 한다.

그러나 그 성숙은 지켜지지 못하고 위험과 타락으로 치달아 왔다. 거기에는 소위 ‘민주화운동’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좌경세력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민주’를 앞세웠지만 그

민주 는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이 87년의 민주화를 탈취했다. 그리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위협에 처한 가운데 타락이 만연해 가고 있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 위협과 타락에서 한국을 회복해야 한다. ‘결연한 의지’와 ‘지난한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토론 2〉

결이 달랐던 민주화운동의 국가사회상 갈래 구분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1. 발표문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이면 : 용공조작은 없었다」에 대한 논평

발표자는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반체제 · 반국가 전복운동이 되지 않으려면 그 지켜야할 선이 분명 존재한다는 뜻이겠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권위주의 통치들은 한국현대사와 현대국가 건설사의 사정에 따른 이유 있는 이탈이었다고 이해하는 정치학적·역사학적 감각이 깔려있다고 본다. 또한 용공조작은 없었으며, (반체제)운동권의 주류는 본래 친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운동권’의 역사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발표자의 파악으로 토론자는 신뢰하고 수용한다.

2. 민주주의와 민주화가 현대국가 건설에 가지는 의미

인간이 국가생활을 함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학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뒤죽박죽된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모크라시가 통치방식의 하나(민주정)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데모크라시는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 같은 가치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세계관이 아니다.

순수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의 집회·직접 민주정 - 는 이사이야 별린의 말대로, 본래 다소 좌경적이다. 그것은 문명적인 방향으로 제한되어야 했다. 따라서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민국가가 민주주의의 집(home)이다. 발전된 현대적 국민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도, 지켜질 수도 없다. 이것이 박정희의 문제의식이었고, 두 번에 걸친 혁명(정변)의 이유이자 과제였다. 민주주의는 결코 유아독존적인 지고지상의 존재가 아니고 여러 조건 및 가치와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현대국가를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만연해 왔다. 그러나 국가 건설은 피와 땀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적 사실이다. 국가창건도 한국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루었듯이 ‘민주적 담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현대사는 산업화라는 현대국가건설의 필수적 능력과 민주정치와 능력 배양이라는 두 가지로 엮어봐야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관계는 민주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산업화가 성공해야 자유민주화의 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의 역사적 진실인 것이다.

헌팅턴은 20세기 후반 세계의 민주화 현상을 다룬 『제3의 물결』에서 한국이 제2차대전 후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 시행하다가 권위주의를 겪고 ‘2차 시도’ 유형으로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로 분류했다. 외형적으로 타당한 이런 인식에서는, 북한과 남한 내 좌익세력에 의한 전복전쟁 상태라는 특수한 실존적 상황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정 체제를 나름대로 소중히 운영했지만 민주주의가 현대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항상적 위기정부 상태에 시달렸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위기에 대응으로 성립한 권위주의 정부가 세계의 여타 군부기반 정권이나 권위주의체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국가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충분한 분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이 주장하는 성장한 중산층이 자신의 재산을 독재국가체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설도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관한 설명으로는 태부족이다. 주제 발표에서 보았듯이 탄생 때부터 정규전은 물론이고 전복전쟁에 끊임없이 시달려온 신생국가에서 민주화라는 문제를 어떤 자세로 다루어야 하는지 다방면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전복전쟁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운동의 대상인 한국의 권위주의체제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야 될 것이다. 특히 정치체제론 상에서 권위주의를 분명하게 성격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아래의 표는 토론자가 정치학자 노재봉 전 서울대학교수의 엄정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표] 정치체제(regime) 분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위치

정치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정파	극우 · 극좌	좌파	우파
경제	통제·공산·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자본주의
보안		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합의민주주의 등등	
구분법	과격/진보	liberal	보수

이에서 보듯이 합당한 정치체제 이론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구분이다. 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도 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들이 내놓은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같은 그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현실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거짓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현대에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분업 등 사회의 복잡화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마르크시스트를 비롯한 좌익이 규정하듯이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상부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거쳐 형성된 하나의 문명형태로 봐야한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주의는 공산주의와 나치즘 및 파시즘이며, 특히 공산주의가 핵심이다. 공산주의는 인민주권사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적 요소를 이론적 도구로 이용하고는 바로 폐기하고 일당독재 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떤 민주주의 요소도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사상적 스펙트럼 상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서구 여러 나라는 제2차대전 중 나치스 전체주의와 싸우면서 공산주의세력과 연합했고 전후에 자국 공산주의자들을 체제내화시키기 위해 폭력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에 포용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좀 좌경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건국했기 때문에 좀 우경적이다.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발을 디딘 당연한 현상이며 지금의 구미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한국의 것이 더 건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으로 보면 한국 좌익의 논리는 좌익이 문명을 전복하는 혁명논리이고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적반하장인 것이다.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대결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프레임도 그것의 아류이자 약간 순화된 느낌을 주는 위장이다. 이런 좌익 프레임으로 그 성취가 인류 역사에 우뚝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을 악마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세력 대 통일세력’의 대결 프레임도 사실 전복적이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대 ‘공산주의적 민족주의(communist nationalism)’의 대결이다. 그 프레임은 진보당부터 4·19이후 혁신계를 거쳐 주사파(김일성주의) 좌익에게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술이다.

이 이론에서 보면, 권위주의체제라는 것은 위의 표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속하는 하나의 특수한 변형으로서, 전체주의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적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의 성공은 한국 사회를 다원적 복합사회로 만들어나갔고, 시민사회가 생성되었다. 그 결과 1987년에 이르러 정치와 시민사회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파시즘과 같은 반민주적·반동적 특수사상으로

무장해서 별난 반인도적 목표를 추구하는 세력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추구한 문명적 세력이었다.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세력은 특정 사회계급에 배태되거나 포획되지 않은 ‘국민국가주의’적 세력으로서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적 파위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세력이었다. 그들은 전통적 권위주의(traditional authoritarianism) - 예를 들면,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 - 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스페인의 것은 반공 보수일 뿐이지만, 한국의 권위주의세력은 반공 발전주의 세력으로 현대화의 주체세력이었다. 그들은 국가안보와 현대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자기 절제 - 형용사 ‘liberal’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 - 를 이해하는 당시 유일한, 힘 있는 그룹이었다. 따라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체제 내 권위주의 세력을 적(enemy)로 간주하는 것은 반자유민주체제로 호를 위협성이 있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담론과 학술은 자해적이거나 대한민국의 파괴와 전복에 봉사하는 게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복세력에게 민주주의라는 현대적 신앙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은 그것 자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면 할수록 더 많은 파괴와 전복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는 역설이 작동한다. 철통 방어의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해 행하는 전복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선동정치와 혁명전술에 이용되기 매우 쉽다.

4.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의 의미

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 국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취하는 국가가 확산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민주화 운동은 비민주적인 체제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벌이는 여러 종류의 정치 운동을 말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민주주의는 부의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레닌의 주장, 보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남한의 민주화는 ‘남조선혁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김일성의 얘기가 의미하듯이,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도 자주 접목된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화운동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활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체제유지와 세련화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이 선을 넘어서는 체제변혁을 위한 활동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5·16군사정변은 국가전복위기에 처하여 대한

민국을 수호하고 자립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현대국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혁명이었다. 따라서 박정희정부를 반민주·반민족정부로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반대한민국 전복활동 진영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의 법이 예시한 ‘한일국교정상화 반대투쟁’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의 현대화가 넘어가야 할 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반대투쟁은 무지에서 오는 해프닝이었다. 아니, 그 뒤에는 전복세력과 북한 공작이 어른거렸다. 물론 박정희정부의 실정이 있는 경우에 (자유)민주화운동, 즉 체제수호운동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유신체제 문제는 난해한 듯 보인다. 유신체제는 국가안보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한 ‘헌정적 독재’(constitutional dictatorship)였다. 그리고 선진경제대국을 향한 과감한 중화학공업화 수행을 위한 강력체제였다. 체제론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의 이 ‘임시적 권위주의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대한민국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또한 선을 넘는 것이었다. 물론 남발된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박정희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아끼고 수호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하물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삼고 투쟁하는 것은 반대한민국 전복활동에 다름 아니었다.

과거의 저항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역사 만들기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당시에 반자유민주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쓴 약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반대투쟁을 했던 것은 무지의 소치였음을 자성해야 일이다. 더구나 전복세력의 선전선동과 공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돼야 한다. 자유국가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 정치고 그 정치가 데모크라시이다. 그런데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자신의 이익추구와 정념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하고, 그래야 자유민주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안보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와 결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절제와 한계 알기가 자유민주정치 영위의 필수 전제조건인 것이다.

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에서 펴낸 『한국민주화운동사』는 총론에서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냉전체제·진영논리를 벗어나”나겠다는 것은 反반공주의(anti-anticommunism)를 주장하는 것인바, 그것은 1960년대 말부터 네오마르크시스트를 비롯한 세계의 좌익들이 자유민주주의이념을 전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펼치는 논리이다. 더구나 민족자주운동이나 통일운동까지 민주화운동이라니, 이것은 독립운동 수준의 것으로 승격시킨 관점인 바, 대한민국을 한국민과 대치되는 반민족 기구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

국을 외세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관점과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관점이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공정하게 고려한 관점과는 거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5. 결이 달랐던 ‘민주화운동’의 국가사회상의 갈래들

5-1.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구성 세력들: ‘좌우연합’

‘민주화’라는 말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진전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하는 반면, 좌익과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를 향해 가는 것을 민주화하고 여긴다. ‘민주화운동’에는 그 양자가 모두 들어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는 세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화세력이 아니다. 현대에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A. 자유민주화 세력: 자유민주주의 회복 입장(1987년 직선제 회복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던 입장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좌익운동권과 경험을 공유한 탓으로 노선과 사상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현대국가 건설과 그에 필수적인 산업화에 대한 비전을 결여하고 선거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의식을 가졌다.)

a) 김영삼과 그 추종세력. 신민당. 민주화추진협의회.

b)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 좌-우에 걸친 이중적 성격.

B. 좌익(민주화) 세력: 자유민주주의는 1단계 목표. 통일전선전술 입장.

a)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

b) NL세력(주사파=김일성주의세력)

c) PD세력(마르크스-레닌주의세력)

d) 기타

재야, 학생단체, 노동, 문화운동 그룹들로 진지전을 펼침: 민변, 전교조, 전노협, 전농, 범민련 등 거의 다 친북 내지 중북 좌익세력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12월 중북, 친북좌익, 좌경단체들의 전국적 연합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창립하는 등 분야별 좌익, 좌경세력들을 연대하는 ‘중북, 친북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1995.12. 민노총 결성이 결정적인 사건인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결국 운동들의 ‘사상 실명제’를 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위장막이 아니라, 제 세력과 그 활동들을 정확한 개념으로 정체로 밝혀주는 것이 옳다.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원조 그람시가 “정치에서는 진지전이 한 번 승리하면 아주 결정적”이라고 갈파했듯이, 이들의 진지전은 사회 각 부문에서 성공하여 2017년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혁명’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집권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제도화

하고자 했다.

5-2. 국가사회상의 갈래들

위의 세력들은 모두 집권해 봤다. 그들이 집권해서 추진한 시책들과 활동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향한 국가사회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 김영삼 세력은 ‘선거정치적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선거만 실시되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적 사고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현대국가 건설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국가의 연속성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착근시켜 공고화 성숙시킬 비전도 없었다. 더욱이 한국이 전복전쟁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을 물론, 야당과 재야 투쟁시절에 좌익세력과 연대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전복세력을 요직에 등용하여 전복세력이 제도권에 자리 잡고 국정에 참여하게 하는데 있어서 숙주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나마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법안도 김대중과 좌익세력의 저항에 부딪치자 통과된 법안을 번복하는 등 결국 대경제환란을 불렀다. 결국 이전 발전주의 정부들이 만단을 무릅쓰고 만들어 놓은 한국형 국가혁신체계를 해체함으로써 IMF사태를 초래한 ‘해체 세력’이다, 이와 같이 작용과 반작용, 대안 세력과 인물들의 정치적 됴됨이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분석,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김대중은 일찍부터 명확한 신념 위에서 좌경 행보를 보였다. 한국 정보기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1973년 일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전위대인 조총련 내의 ‘베트콩’파가 주도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오기도 했다. 그는 또 1985년에는 국회의원 이철을 같은 좌익으로 오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계급적 갈등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권력은 군사정권에 독점되어 있고 부는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등 너무나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꼭 필요하다”는 요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대중은 좌익세력을 끌어들이 자기의 세 불리를 보완하면서 전통 보수 야당을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도가 애매한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 평민당부터 시작된 그의 당은 좌익세력의 신분 세탁소 역할을 하여 좌익세력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집권 후 국부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북한 김정일과 연방제 추구를 서약한 ‘야합 세력’이다. 그의 비호 하에 각종 전복세력 조직들이 합법화되고 종북 세력들의 통일전선조직이 우후죽순으로 결성되고, 남북간의 상층통일전선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3) NL세력과 PD세력은 전자가 주도하는 바, 묶어서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듯싶

다. 이들은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한혁명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해 왔다. 좌익 기층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총회’ 창설을 추진하는 등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전체주의 지향 세력이고, 통일운동(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을 중시하여 북한 공산전체주의체제와 합작하여 연방제 통일 지향하며, 대한민국 전복의 마무리에 최고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한다.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기업을 좌익국가 권력의 노예화하여 부림으로써 중공과 유사한 국가통제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한다. 결국 좌익 ‘양반’ 신분제 국가 같은 것을 만들어 정치권력과 사회 문화적 권력 독점에서 비롯되는 모든 자원의 특권적 향유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한 것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에서 산업화-현대국가 건설 주도 세력에 대한 저항투쟁이 지역구도 대결(도전)의 적대감을 하나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오다 보니, 이 투쟁이 승리한 후 그 지역의 정서와 이데올로기가 패권을 행사하게 됐고, 결국 유사 전체주의적 담론 지배와 성역화된 정당성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네오 마르크시즘과 Political Correctness와 Cancer Culture를 수용, 구사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인식을 완전히 전복하는 데 성공했으며 반대한민국적 르상티망을 체계화하고 있다. 미래의 결말은 그들 자신도 확신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75년간 추구해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적 해양문명적 성취를 어떤 식으로든 해체하고자 하는 일념만은 분명한 것 같다.

<발제 3>

남북분단 아래 꿈이 다른 통일운동의 국가상

조 영 기(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차례>

I. 출발선이 다른 통일 생각

II. 건국 공간에서 남쪽 좌파의 활동

1.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2. 남로당(남조선노동당) 3. 남북연석회의

III. 건국 이후 좌파의 통일운동

1. 좌파 <정당>의 통일운동: 1) 인혁당 2) 통혁당 3) 남민전
 2. 좌파 <사회단체>의 통일운동 1) 전민련 2) 범민련 남측본부 3) 통일연대
 3. 좌파 <학생조직>의 통일운동 1) 신진회(新進會) 2) 민청련 3) 전대협 4) 한총련 5) 범청학련 남측본부
 4. 좌파 <노동조직>의 통일운동
 5. 좌파 통일운동의 특성 1) 공산주의국가 설립 2) 통일전선의 형성 3) 북한의 통일(대남전략)과 연계

IV.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논의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2. 장면 정부의 통일론
 3. 박정희 정부의 <선(先)평화 후(後)통일론>
 4.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5.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6.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구조 2) 접근 시각 3) 기본원칙 4) 한계
 7. 한국(정부) 통일논의의 특징

V. 우파통일: '자유에 기반한 통일'

1. 정치체제 선택이 통일
 2. '자유'에 기반한 통일

<참고 문헌>

I. 출발선이 다른 통일 생각

민족국가 이성(ration of national state)의 최고의 가치는 조국과 민족 전체의 보전, 그 질서와 내적 평화 및 복지, 세계 사회 속에서 그 가치의 실현에 대한 책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이치다.¹⁾ 이는 조국과 민족의 분단 현실을 용인하지 않고 통일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의미다. 8.15해방 이전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국가건설에서 정치체제는 뒷전이였다. 8.15해방 이후의 과제는 분단이 극복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역량 부족과 미·소의 대립으로 남북의 체제대립, 이념대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은 민주기지론²⁾에 입각하여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부를 수립하였고,³⁾ 1948년 9월 김일성은 북쪽 지역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반면 한국은 1945년 8월 해방에서 1948년 8월 건국에 이르는 동안 미국은 확고한 대한 정책(對韓政策)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했다. 특히 지도자들 간의 세력 다툼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분열을 조장했다. 즉 1차적으로 여운형(呂運亨) 중심의 건국 준비위원회 세력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민족진영 세력으로 나누어졌고, 2차적으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은 약화되고 민족진영은 다시 남북협상을 추진하는 남북협상파(김구, 김규식 등)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이승만, 김성수 등)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이처럼 남북한 힘의 결집도 측면에서 건국 공간⁴⁾은 북한이 상당한 우위에 있었다. 물론 남한의 좌파들(박헌영 등)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건국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힘을 분산시켰다.

해방과 건국 이후 한국 정치사를 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왔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보수주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사회주의)에 기반한 진보(혁신)주의이다. 물론 지배엘리트 또는 통치이념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승공(勝共)이 주류를 차지했지만 용공(容共)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남북통일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공 세력들이 승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한국에서 자칭 진보주의자는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은 ‘평화적 수단을 통해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상호조정을 통해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늘 평화를 앞세웠지만 투쟁은 폭력적 방법에 의존했다. 반면 보수주의자의 입장은 ‘한국에서 반공투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산진영과의 투쟁에서 비공산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보인다.

1) 안토니 기든스(김성건 옮김), 『막스 베스의 정치 사회학』, 대영사, 1985, p. 35.

2) ‘민주기지론’이란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혁명이 승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이론’이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조선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북조선에 민주기지 건설이 기본적 정치노선’이라 주장했다.(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pp. 493-494.)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의 단독정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양동안, “1948년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33권 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0, p. 10.)

4)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를 ‘해방 공간(정국)’이라고 하고 이때의 역사를 ‘해방 전후사’라고 한다. 이런 명칭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 ‘건국 정국’, ‘건국 전후사’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양동안,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대추나무, 2019)

분단 이후 한국 좌파들은 한국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혁운동⁵⁾을 전개해왔다. 좌파들은 한국의 단독정부 수립을 새로운 식민지배 질서로의 편입을 통한 반(半)봉건적 제반 관계의 온존과 부르주아(bourgeois) 변혁의 좌절로 인식했다. 이들은 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어떻게 순수 부르주아 민주변혁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특히 6.25 전쟁의 결과 한국의 계급관계가 친미·보수 엘리트 중심으로 이동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이 정치의 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분단체제는 ‘민족 구성원 개개인을 어느 한쪽에 분명히 서기를 강요하고, 현실적으로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이들에게 분단체제는 민족사의 부정적 체제이며, 극복해야 할 체제로 규정⁷⁾하고, 분단체제 속에서 통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이들은 주체적 민족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⁸⁾ 좌파의 분단극복 주장은 옳다. 하지만 주체적 민족사관에 기초한 체제가 문제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가 사상적 분열이었고, 그것을 해소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지도원리는 올바른 민족주의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통일의 지도원리로 정립되어야 할 민족주의 이론은 분단체제 안에서의 민족론을 넘어서는 통일지향의 민족론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분단국가체제를 지양하는데 동원되었던 민족주의론이 가진 비민족적 반역사적 속성을 정확하게 철저히 극복하고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론을 수립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좌파는 분단 시대를 극복하는 역사적 방법론으로 첫째,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사실(事實)을 연구개발하고, 둘째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론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⁹⁾ 전체 분단시대를 통하여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실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통일지향 민족주의론의 정립 방향은 어디까지나 역사발전의 바른 노정 위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중세계의 역사주체성이 확립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⁰⁾

II. 건국 공간에서 남쪽 좌파의 활동

1.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5) 변혁이란 ‘한 사회를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좌파권은 ‘낡은 사회인 자본주의사회를 사회주의사회로 바꾸는 혁명(revolution)’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변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저의는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위장된 선전선동용어다. 즉 변혁운동이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이다.(북한연구소(1999), p. 1201.)

6)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8, p. 16.

7) 강만길(1978), “위의 책”, p. 5.

8) 강만길(1978), “위의 책”, p. 19.

9) 강만길(1978), “위의 책”, p. 22.

10) 강만길(1978), “위의 책”, p. 24.

8.15 해방과 함께 조선공산당¹¹⁾은 1945년 11월 5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조직했다. ‘전평’은 해방 이후 남한 지역에서 생긴 최초의 사회(노동)단체로 조선공산당의 전위조직¹²⁾이다. 조선공산당은 노동자와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해 8.15 해방과 동시에 노동자 조직에 착수했다. 공산당의 조직 결성 성과는 11월 초에 금속·철도·교통·토건·어업·전기·통신·섬유·광업·조선 등 16개 산업별노동조합 지부의 수가 총 1,194개에 이르렀고, 이런 조직들은 이후 ‘전평’이 관리·통제되었다. ‘전평’은 결성대회에서 레온 주오(세계노동자회의 대표)·모택동(毛澤東)·김일성(金日成)·박헌영(朴憲永)을 명예 의장으로 추대하고, 허성탁(許成鐸), 부위원장에 박세영(朴世榮)·지한중(池漢鍾)은 위원장으로, 김창환(金昌煥)·김세응(金世應)·김호영(金浩永) 등을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총 81명의 임원을 선출하였다.¹³⁾

막강한 노동자들의 조직을 가지고 출발한 ‘전평’은 건국 공간의 남한 지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격화되고 있던 공산진영과 민족진영의 대결에서 공산진영의 전위대 구실을 수행하였다. ‘전평’의 조직적 위력은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에서 확인되었다. 미군정청이 적자해소와 노동자의 인력관리 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철도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단행을 결정하자 ‘전평’은 총파업으로 저항했다. 총파업은 9월23일 부산철도노조원 7천여 명의 파업을 시발로 전신, 전화, 운수, 섬유, 금속, 화학, 출판 등 40여 개의 노조 단체와 노동자 25만1천여 명이 참여한 해방 후 최대 규모다. 이들의 요구사항에는 ‘구속된 공산주의자 석방, 행정권의 인민위원회 이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⁴⁾

9월 총파업은 대구 폭동사태(10월 폭동)로 이어졌다. 총파업으로 대구 시내에 식량 등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대구 소재 좌파 단체들이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선동해 폭동으로 비화했다. 이 폭동사태로 1천여 명이 사망자(경찰관 2백여 명), 3천6백여 명의 행방불명자, 2만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9월 총파업은 총파업과 폭동은 당내 분규 은폐, 미군정청 압박, 조공(助共?) 세력의 확대 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했고, 10월 폭동을 위한 전초전으로 기획된 것이다.¹⁵⁾ 물론 총파업과 폭동의 배후에는 김일성이 지원·개입과 소련군의 자금지원도 있었다.¹⁶⁾

2. 남로당(남조선노동당)

11) 조선공산당은 일본이 항복한 8월15일 28년 전에 해체된 조선공산당의 복원문제를 논의한 후 다음날 당을 출범시켰다. 따라서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최초로 결성된 정당이 조선공산당이다.

12) ‘전위조직’이란 ‘일정한 사회적 집단이나 계급의 앞에 서서 앞길을 해쳐나가는 선도적·적극적 역할을 하는 집단이나 조직’을 말하며, ‘전위대’, ‘전위대대’ 등으로도 불린다.(북한연구소(1999), p. 816.)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1968>, (검색일: 2023.4.2.)

14)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09, p. 45.

15) 남시욱(2009), “위의 책”, pp. 45-46.

16) 남시욱(2009), “위의 책”, p. 46.

소련의 지시로 조선공산당(조공)과 조선인민당(인민당), 남조선신민당(신민당)은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통합되었다.¹⁷⁾ 그리고 남로당 간부는 혁명좌파세력이 차지했고, 책임부서에는 조선공산당원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남로당이 이름만 바뀐 조선공산당에 지나지 않았다. 남로당은 1949년 6월 북로당에 흡수되어 조선노동당이 되면서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남로당은 창당 전부터 합법·비합법투쟁을 혼합한 혁명투쟁노선을 견지했다. 우선 합법적 활동으로는 남로당 준비위는 10월 폭동과 관련된 성명 발표, 시위 참가자에 대한 탄압 중지 및 투옥된 인사의 무조건적 석방 요구 등이다. 비합법적 방법은 지하공작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우선 국대안(國大案) 반대투쟁이다.¹⁸⁾ 남로당이 반대한 이유는 국대안이 성사되면 학생세포조직과 좌파교수로 구성된 교직원 세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남로당은 산하 조직인 민주청년동맹과 민주학련을 통해 학생을 선동해 투쟁을 계속했다. 그리고 남로당은 3.1절을 우파의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적기로 생각하고, 10월 폭동으로 타격을 입은 조직과 당세를 만회하려고 3.1절을 활용하면서 좌우 학생들의 충돌이 발생했다.¹⁹⁾ 이어서 1948년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의 투쟁방식은 폭력화하였다. 폭력투쟁의 시초는 2.7 구국 투쟁이다. 1947년 10월 미국의 제안으로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가 통과되고 선거 실시를 위해 1948년 1월 유엔 한국위원단이 도착한 후 남로당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남로당은 2월 7일을 기해 동시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다. 남로당 조직원들은 ‘전평’과 함께 생산공장 마비, 전신 전화 교통 파업으로 혼란에 빠뜨렸다. 이들은 ‘유엔 한국위원단 반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동시 철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북조선인민회의가 2월 11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 초안을 지지하는 대목은 남로당이 북한정권 수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각 지방에는 남로당의 무장계열과 소조가 생겨났다. 남로당의 2.7 구국투쟁은 ‘제주 4.3 사태’로 이어졌다.²⁰⁾ ‘제주 4.3사태’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자위대(=유격대)와 여맹원 등 모든 외곽단체 조직에서 3천여 명의 좌파행동대원들이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4.3 사태로 경찰관서 35개소가 피습당하고, 그 중 4개소와 경찰관 사택 9개소와 일반 관공서 4개소가 불탔다. 경찰관 22명, 경찰가족 13명, 공무원 3명이 피살되고 경찰관 3백여 명이 납치됐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경이 출동하자 다수의 무장대원들이 한라산으로 대피해 이듬해 5월까지

17) 북한은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통합해 북조선노동당이 창당되었다.

18) ‘국대안’이란 ‘미군정청이 경성대학을 비롯해 경성고상과 치과, 법학, 의학, 공업, 농림 전문학교와 경성사범을 신설되는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해 단과대학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19) 남시욱(2009), “위의 책”, pp. 57-58.

20) 제주 4.3사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이영훈, 『대한민국역사』, 기과광, 2013)

항전했다.

사태수습 과정에서 사살자 7,895명, 생포 7,061명, 귀순 2천4백명이며, 군인전사자는 186명, 경찰 전사자는 140명, 우익단체 전사자는 639명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그러나 군경과 우익단체원들의 토벌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제주 4.3사태의 와중에도 제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제헌국회를 구성할 5.10총선이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한편 북한 김일성은 북조선민전중앙위원회 제25차 회의(1948.3.9)에서 ‘반동적 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선거》 회극에 참가하지 말며 《선거》를 배격하는 운동을 힘차게 벌립시다.”라고 주장했다.²²⁾ 결국 이 연설은 제주 4.3사태를 선동하고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3. 남북연석회의

미국은 1947년 8월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소공위에 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총회 의제로 채택을 요청하고 유엔총회는 의제 채택(9.23) 후 결의를 채택(11.14)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소련은 1948년 초까지 한반도에서 미·소군이 철수한 다음 ‘한국인 스스로 정부수립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소련 제안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우려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할 것을 견지했다.²³⁾ 이는 남한은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으며, 그 진행은 북한의 ‘민주기지 조선’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다. 그 절차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임시정부 수립,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토대로 ‘북조선임민회의’ 구성, 1947년 5월 인민집단군이라는 정규군 창설, 8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남북한통일인민정권수립’ 캠페인 전개 등이다.²⁴⁾

김일성은 한국문제의 심의를 유엔총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10월 3일 ‘북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소련의 주장을 반복한 후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구국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이는 남북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는 의미다. 이에 남한의 중도 좌경 군소정당들도 남북협상을 제안했다. 이 정당들은 북로당과 남노당의 괴뢰정당으로 북한의 제안에 호응했다.²⁵⁾ 그리고 북한은 1947년 11월과 12월에 남한 내 단선 단정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조직적인 대남 정치투쟁을

21) 남시욱(2009), “위의 책”, pp. 63-66.

2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93-99

23) 이영훈, 『대한민국역사』, 기파랑, 2013, pp. 111-117.

24) 양동안(2019), “위의 책”, pp. 130-132.

25) 양동안(2019), “위의 책”, p. 133.

전개했다. 정치투쟁의 형태는 공작원을 통한 포섭공작과 남한 내 중도좌파 정당과의 제휴·협상 모색이다. 북로당은 서울에서 공작 활동 중인 성시백²⁶⁾의 물밑 요인 포섭 공작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김일성은 1948년 1월 성시백을 통해 김구, 김규식과 사회단체 등에게 남북연석회의를 제안서를 보냈다. 북로당은 남한 인사들의 지지의사를 확인 후 48년 2월 초순 남북연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연석회의를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 분위기가 고조된 4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²⁷⁾ 1948년 4월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평양에서 개최한 정치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남북지도자 연석회의라고 한다.

한편 김구는 소련이 제안한 미·소군 철수론에 반대하고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결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이승만의 우익진영 통합 노력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런 김구의 입장은 북한정권과 남한의 좌파 및 중도좌파의 끈질긴 공작으로 12월 22일 이승만이 추구하는 남한 선거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 변화와 함께 48년 1월 하순 남북협상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²⁸⁾ 이는 우익진영의 분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작이 성공했다는 의미다. 북로당의 공작이 성공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2월 16일 ‘남북정치지도자간의 정치협상’을 위한 공동명의로 편지를 북한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비밀리에 보냈다. 그리고 3월 15일 김일성과 김두봉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를 김구와 김규식에게 회신을 보냈으며, 같은 편지를 남한의 여타 정당·단체들의 지도자들에게도 보냈다.²⁹⁾³⁰⁾ 그리고 북한은 회의 의제와 방식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4월 19일 오후 6시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막되었다. 개막회의에는 북한의 3개 정당과 12개 사회단체, 남한의 31개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추가로 남한의 10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20일 이후 평양에 도착하여 연석회의에 참석했다.³¹⁾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한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총수는 도합 56개(남한 41개, 북한 15개)였다. 4월 26일 남북연석회의가 공식 폐막되고, 27일부터 30일까지는 김구와 김규식이 요구했던 남북요인회담이 연회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한 남측 인사 226명 중 70여 명이 평양에 잔류했다. 이는 연석회의 참석자의 약 3분의 1이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에 참여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주장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³²⁾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남북연석회의는 다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 즉 그

26) 성시백의 간첩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을 참고(인보길, '북한 영웅 1호' 거물 간첩 성시백,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17/2021121700086.html>, 검색일: 2023. 4. 6.)

27) 양동안(2019), “위의 책”, p. 136.

28) 양동안(2010), “위의 글”, pp. 18-19.

29) 정리근,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평양). 1988, pp. 38-39.

30) 남한 측 초청대상자로는 김구, 김규식, 조소앙, 박헌영, 허헌, 홍명희, 백남운, 김원봉, 김봉준 등 개별인사와 민련 한독당 등 17개 정당과 사회단체를 선정했다.(양동안(2010), “위의 글”, p. 21.)

31) 정리근(1988), “위의 책”, pp. 88-89; p. 96.

32) 양동안(2010), “위의 글”, p. 39.

목적은 ‘소련의 미·소 양군 조속철수론 지원, 남한의 우익세력의 분열, 남한의 단선 저지와 이를 통한 정치적 혼란의 조장, 남북의 통일전선체 구축해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부추겨 공산화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³³⁾ 한편 4월30일 ‘남북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서’에 의하면 김구는 북로당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명서에는 김구(김규식 포함)는 북로당의 저의를 간파하지 못하고, 5.10 선거를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이다.³⁴⁾ 4월 30일 김구는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각종 문서들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⁵⁾ 5월 4일 서울로 돌아온 직후인 7월 11일 유어만(劉馭萬, Liu Yu-man) 주한 중국 총영사와 나눈 대화록은 건국을 반대하려고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화록 중 김구 발언의 일부다.

내[김구]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북한군)을 南進(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김구-류 공사의 대화를 읽으면 김구의 행동은 모순된다. 즉 김구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평양에서 발표한 4·30 성명서 중 “외군이 철수해도 내전은 없다”는 대목은 완전한 속임수가 된다. 김구는 북한군이 반드시 남침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남침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김구는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안전판 제거를 요구한 것이 된다. 하지만 임시정부 시절 김구는 반공(反共)주의자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³⁶⁾

Ⅲ. 건국 이후 좌파의 통일운동

1. 좌파 <정당>의 통일운동

1) 인혁당(인민혁명당)

33) 양동안(2010), “위의 글”, pp. 39-43

34) 월간조선, “이화장에 있는 김구-류위안 대화 비망록 전문 공개”, 2009년 9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9100051&ctcd=H&cpge=1> (검색일: 2023.4.6.)

35) 양동안(2010), “위의 글”, p. 38.

36) 월간조선, “위의 글”

1960년대 ~1970년대의 좌파 활동은 ‘민족해방투쟁’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되었다.³⁷⁾ 특히 이때 이들의 활동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회피하기 위해 ‘지하조직’의 형태의 속성을 띠었다. 그 지하조직은 ‘민주화’라는 명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거나 북한 공작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시기 좌파 사건은 인민혁명당(인혁당)과 통일혁명당(통혁당)이다.

우선 인혁당 사건은 1964년의 인혁당 1차 사건과 1974년의 인혁당 2차 사건(인혁당 재건사건)으로 구분된다. 관계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1차 인혁당 사건은 4.19 혁명 직후 조직된 혁신계 청년단체인 통민청, 민민청, 사회대중당과 빨치산 출신들이 남과 간첩의 지도 아래 인혁당을 결성하고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 정부 타도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그리고 인혁당은 학생 담당부서인 중앙학생 지도부로 하여금 서울대의 민비연(民比研: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불꽃회, 민통련 등에게 시위를 선동하고 북한의 위장된 민족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표된 시기가 대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³⁸⁾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박현채(1934-1995)의 역할이 눈에 띈다. 박현채는 중학교 재학 때 남로당 비밀조직인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의 세포조직으로 활동하고, 6.25 전쟁 기간 중에는 약 22개월(1950.10-1952.8) 동안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는 하산 후 1955년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 1961년 대학원을 졸업 후 한국농업문제연구소 간사 업무를 하면서 자본주의와 세계경제, 한국경제 연구에 몰두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자리에 물러난 그는 1971년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100문 100답’을, 1978년 ‘민족경제론’을, 1989년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을 집필했다. 이처럼 그의 저서는 민족경제이론 정립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체 이론³⁹⁾으로 한국 좌파혁명 세력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좌파이론가였다. 또한 박현채는 학생, 노동, 농민, 여성 등 각 분야의 운동책임자들에게 변혁운동의 투쟁방향을 지도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⁴⁰⁾ 그의 투쟁방식은 미국의 간섭으로 정규전 방식이 아니라 유격투쟁에 의한 통일투쟁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제2전선을 한반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1974년 인혁당 재건을 기도하는 인혁당 제2차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 기관의 발표에 의

37) 이때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노선은 무장봉기에 의한 ‘민주기지도선’에서 남한 지하세력이 주도하는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전환했다. 여기서 ‘반제(反帝)’는 ‘민족해방혁명’을, ‘반봉건(半封建)’은 ‘민주주의혁명’을 의미한다.

38)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15-217.

39)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에서 한 사회의 특징과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적 토대와 이에 기반한 정신적 제도적 상부구조에 이루어진 사회’다. 한편 북한은 ‘사회경제구성체’라고 하며, “한 사회경제구성체로부터 다른 사회경제구성체로의 이행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582.)

40)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17-220.

41) 남시욱(2009), “위의 책”, p. 219.

하면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시위를 선동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봉기함으로써 ‘정부를 전복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한 연후에 순수한 노동정권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혁명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청학련 주동자들은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 조총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재건위 피고인들은 평소 공산주의 사상을 품고 북한이 인민혁명 수행을 위한 통일전선에 영합해 공산국가를 수립할 것을 결의, 인혁당을 조직했으며, 학원조직책이 민청학련을 조직해 학생데모와 대중봉기를 유발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이다.⁴²⁾

한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진상조사와 재심 요구가 제기되어오던 끝에 2005년 12월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2006년 1월 23일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도 조작되었다고 인정했다.⁴³⁾ 한편 인혁당 사건은 재심판결로 일단락되었지만 ‘과연 사건의 실체가 없었는가?’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5.16 혁명 후 합법 활동의 한계로 전국규모의 비합법적 전위당을 준비하려다 적발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인혁당’이라는 명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비합법적 민족주의 통일운동의 모임 내지 서클로 추정된다.’⁴⁴⁾

2) 통혁당(통일혁명당)⁴⁵⁾

6.25 전쟁으로 ‘국토완정(領土完整)’을 달성하지 못한 김일성에게는 4.19 혁명은 또 다른 국토완정의 기회였다.⁴⁶⁾ 그러나 김일성은 4.19 혁명을 적화야욕의 기회로 삼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면서, 인민대중의 혁명적 당이 없어 ‘4월 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남한에 혁명적 독자적 당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이로 인해 조선노동당은 대남공작기구를 대폭 강화하고 남한에 지하 혁명당 건설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남한에 조직된 지하혁명당 중 가장 큰 규모가 통일혁명당(통혁당)이다. 공작원 직접 침투시켜 요인 테러 등을 주목적으로 하던 1960년대의 대남정책기조는 1970년대 이후 국내 좌경세력의 포섭활용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정책전환의 중요한 사례가 통혁당 사건이다. 즉 남한 내 추종세력을 활용해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이 기

42)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20-221.

43)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22-223.

44)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23-227.

45)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27-235.

46) 국토완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조영기, “북한 핵전략, ‘억제→사용’ 전환...‘영토완정’ 답아 무력통일 노골화”,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001030630000001>, (검색일: 2023.4.8.)

47)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29.

조는 1980년~1990년대 주사파의 양산과 결집으로 이어졌다. 이런 기조에 따라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는 대남혁명 전위대로서의 임무를 담당할 통혁당을 1969년 8월 위장 결성했다.⁴⁸⁾

통혁당 사건은 전라남도위원회 사건과 서울시위원회 사건으로 구분되지만 상호연관된 사건이다. 관계 기관에 의하면 전남도위 사건은 ‘남한에서 지하당 재건과 무장봉기를 위한 혁명 토대 구축을 목표로 목포 앞 임자도를 거점으로 해남, 영암 강진 등에 지하당을 조직한 북한 간첩단 사건’이며, 이들은 지하당 조직, 사회주의 서클 조직, 혁신계 등 중간과 정당에의 침투, 후비(後備)간부 양성 등의 공작활동과 함께 장차 지하당의 유격대로의 전환, 반미-반정부 사상고취, 변호사 포섭 등의 지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서울시위원회 사건은 김종태가 1965년 4월 평양에서 김일성으로부터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격려와 함께 지하당 건설 지령’을 받고, 11월 서울에서 통일혁명당을 결성해 반정부 반미데모를 전개하는 등 소요를 유발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통혁당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반제, 반봉건, 반식민의 민주사회를 거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지하당 조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혁당은 지하당 지도부로서 산하에 민족해방전선(총책 김진락)과 조국해방전선(총책 이문규)을 두고, 두 전선의 하부조직을 두었다. 두 전선의 총책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혁신적 엘리트들에게 접근 조직원을 포섭했다. 통혁당 상층부는 구 남노당 계열이고 중간의 핵심간부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지식인 그룹이었다. 통혁당은 기관지 ‘청맥’을 발간하면서 지식인과 학생층의 사상적화에 중점을 두고, 전 남노당계 인물을 포섭했다.

통혁당의 특색은 관련자들이 일망타진된 후에도 지하조직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통혁당 재건 비밀공작은 1994년까지 여러 지역에서 10여 차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1969년 이후 등장한 통혁당 재건 주역들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통혁당과 조선노동당은 형제당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창당주역들이 괴멸되자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통혁당은 1985년 7월 한국민주민족전선(한민전)으로 개편했다. 한민전은 산하에 구국의 소리와 민중의 메아리라는 이름으로 대남선전방송을 했다. 한민전은 2005년 3월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으로 개칭되었다.

3)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⁴⁹⁾

1970년대 말 통혁당보다 규모가 더 큰 지하혁명조직이 남민전이다. 1976년 2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학생 교직자 등 74명을 포섭해 남민전 준비위를 조직했다. 남민전은 베트남식 혁명을 당면 목표로 세우면서 한국사회를 미국과 일본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48)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973.

49)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37-241.

‘신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반외세 혁명을 일으켜 ‘민족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식민지’이론은 1980년대 중반 각종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발전했다. 남민전은 도시계급과 방법에 의한 자행하고 민중봉기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했다. 남민전은 서울 경북 호남에 지역책을 두고 산하에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라는 전위조직을 설치했다. 하지만 2006년 3월 정부는 남민전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용공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는 데 의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 좌파 <사회단체>의 통일운동

1)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89년 1월 학생운동권 1세대로 구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발족했다. 전민련은 ‘노동자 농민 등 근로민중이 중심이 되고 양심적 교사 문인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들과 중소기업인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애국적 민족민주역량의 총 집결체’로 규정하고, 당면과제로 ‘반외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운동’을 제시했다. 전민련이 제시한 당면과제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자민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민련의 노선은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⁵⁰⁾ 따라서 북한은 전민련에 바로 호의적 태도를 보였고, 북한의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전민련이 제안한 3월1일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동의했다.⁵¹⁾ 한편 전민련 고문인 문익환이 비밀 방북해 김일성과 면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연방제통일방안 수용, 교차승인·교차접촉의 거부, 범민족대회 개최, 남측 학생들의 세계평양축전 참석, 팀스피릿 훈련 중지’에 양자가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이 성명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하고, 교차승인·교차접촉의 거부는 한국의 북방외교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점이다.⁵²⁾ 문익환의 방북은 국론을 양분되고 관계 당국의 수사와 ‘반외세투쟁’에 치중한 대정부투쟁, 합법정당 결성문제에 대한 갈등 등으로 내부균열이 발생되면서 1991년 전국연합에 흡수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⁵³⁾

1988년 8월 (소위) 재야인사⁵⁴⁾를 중심으로 범민족대회가 추진되었다. 범민족대회는 1980년대 이념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를 제안하고 전대협 등 20여 개의 재야단체가 참석하면서 추진본부가 출범

50)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는 1970년 제5차 노동당 대회 이후 채택되었다. 자주란 미제를 추출하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민주란 남한의 파쇼정권을 타도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1216.)

51) 남시욱(2009), “위의 책”, p. 309.

52) 남시욱(2009), “위의 책”, p. 310.

53) 남시욱(2009), “위의 책”, pp. 311-315.

54) 범민족대회는 문익환, 계훈제, 고은, 오충일, 이효재 등 1,014명의 대표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0년 8월 15일 판문점 북측구역에서 제1차 범민족대회가 열렸지만 남측 공식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 대회가 되고 말았다. 노태우 정부는 범민족대회에 전민련만 대상으로 선별한다고 해도 허용한다는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남북교류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인적교류로 인한 체제 위협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단독으로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민족대회가 끝난 직후 북한은 황석영이 제안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 구체적인 조직 구성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범민련이 출범했다.⁵⁵⁾

2)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990년 8월 15일 북한 및 친북해외동포들이 참가하여 판문점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에서 황석영이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해외동포 측이 기구 명칭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으로 제안하고 북한 대표가 지지하는 형식으로 범민련 결성에 합의했다. 북한이 결성 제안을 직접 하지 않은 이유는 조직 결성의 대외적 대표성과 공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민련의 조직체계는 [그림 1]과 같다. 한편 범민련은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⁵⁶⁾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천명하고, 이 원칙을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고,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2제도, 2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과 민족성원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와 상호군축의 실현과 비핵평화지대화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왕래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민족의 역량을 범민련으로 결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민련의 성격은 북한의 통일전선 차원에서 조직된 단체로 대남통일전선공작의 전위조직이며, 추진 주체는 북한의 해외공작책이거나 친북인사들로 구성됨으로써 북한의 상투적 대남선전선동을 되풀이하는 북한선전의 충실한 대행자이며,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충실한 선전대행자라는 점이다.⁵⁷⁾ 결국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한 친북반한 통일운동 단체에 불과하다.⁵⁸⁾ 그리고 범민련은 북한에서 통일공작을 전담하는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지령하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사업 중심기관으로 대남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북회담, 경제협력, 해외교포·외국인 공작사업, 대

55) 남시욱(2009), “위의 책”, pp. 31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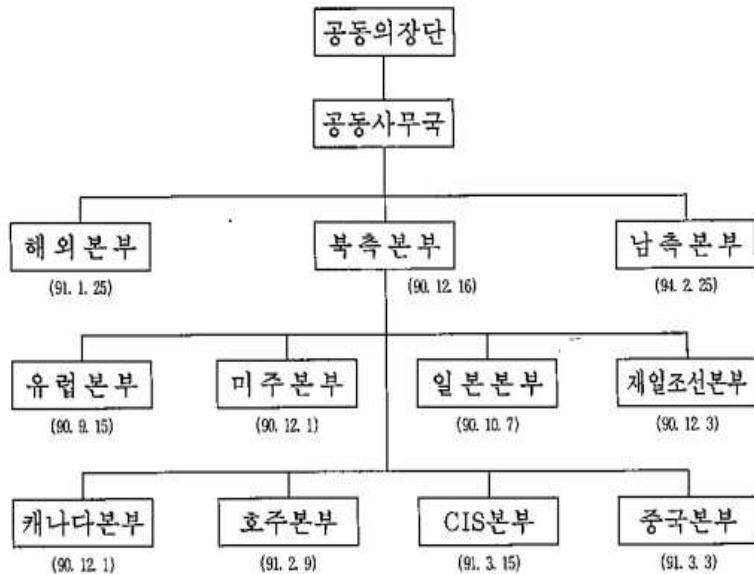
56) 남북은 7.4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원칙들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즉 자주 원칙이란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로 민족 자주화를 위해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의 원칙이란 북한은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지만 남한은 평화적 정세조성을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 합법화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은 대남적화노선을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840.)

57)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p. 842-846.

58)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p. 1200-1201.

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⁵⁹⁾

범민련은 조직 강화 차원에서 1991년 초 남북해외 청년학생단일조직인 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결성을 모색한 끝에 1992년 8월15일 공식 출범했다. 범청학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청년 학생들의 통일운동조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친북반한(親北反韓) 조직이다. 즉 범청학련은 범민련의 청년학생부문의 전위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림 1] 범민련 조직도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p. 843.

3) 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친북단체들은 전열을 가다듬어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선 한총련과 범민련은 ‘이적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방제통일방안 대신 연방제와 연합제를 절충한 6.15 공동선언 2항의 통일노선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연방제통일’을 포기했지만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⁶⁰⁾ 따라서 이 단체들이 통일노선을 일부 변경했지만 관계 당국은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관계 당국의 감시는 지속되고 있었다.⁶¹⁾

59) 통일부,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dicaryId=205>, (검색일: 2023.4.12.)

60) 이 단체들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61) 남시욱(2009), “위의 책”, pp. 454-457.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범민련과 한총련을 대신할 새로운 대남 전위조직이 필요했다.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다. 통일연대는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30여 개 단체가 모여 2001년 3월 결성되었다. 통일연대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사업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실천을 위해 외세간섭 반대와 자주통일 실현,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논의 확산, 평화체제구축과 군비축소, 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강조했다.⁶²⁾ 통일연대는 북한의 노골적 성원으로 결성되었고 결성된 이후에는 남북대화 단일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지속적 개입했다. 그리고 북한은 통일연대가 빠진 민화협을 대화상대로 거부했다.⁶³⁾

2001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 통일연대 등의 단체가 참가해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처럼 북한이 통일연대의 결성과 개입의 저의는 한총련과 범민련의 대체 전위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8월15일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통일대축전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서울 행사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아 서울 행사는 통일연대와 한총련이 주최로 반미행사로 전락한 반면 남측은 평양대축전에 민화협, 7대 종단 대표,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된 311명이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⁶⁴⁾ 기념탑 앞에서 공동행사에 참석하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해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행동도 연출했다.⁶⁵⁾ 이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2002년 설날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에 통일연대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⁶⁶⁾ 한편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와 직결되는 한총련 합법화와 좌파세력을 비호에도 적극적이었다.⁶⁷⁾

3. 좌파 <학생조직>의 통일운동

1) 신진회(新進會)

이승만은 해방 이전에도 공산주의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비판하고 반공(反共)을 실천해 왔다.⁶⁸⁾ 특히 6.25 전쟁은 이승만 정권이 공산국가와의 통일에 대해 더욱 거부하고 통일

62) 남시욱(2009), “위의 책”, p. 457.

63) 2001년 6월 초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북한은 민화협에 통일연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남측이 통일연대 참여 불가 입장이었다. 그러나 남측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실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

64)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1974), 고려연방제창립방안(1980),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으로 김정일이 1996년 판문점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840.)

65) 남시욱(2009), “위의 책”, p. 460.

66) 남시욱(2009), “위의 책”, pp. 462-463.

67) 남시욱(2009), “위의 책”, p. 505.

68) 이승만의 공산주의 비판은 1923년 3월 <태평양잡지>에 ‘공산당의 당(黨) 부당(不當)’이라는 논설이며, 이 논설은 한국 최초의 글이라는 점에서 근대사상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용삼, 『이승만의 네이션빌딩』, 북앤피플, 2015, p. 200.)

논의도 터부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4.19혁명을 계기로 대학가는 학내 신문을 통해 통일문제와 통일논의를 주도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규탄’에서 출발했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혁명 세력의 의연한 존속, 보수 야당의 무능력, 사회의 만연한 부정과 부패 등의 현실에 직면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구태는 민족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고 4.19 혁명의 의미를 재인식했다. 즉 새로운 정치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분단이 해소되어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민족통일문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통일문제로 선회한 배경은 모순의 뿌리가 분단국가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 선회는 4.19 이전 1950년대 말부터 존재하였던 비교적 선진적 인식⁶⁹⁾을 가진 신진회(新進會) 회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신진회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비밀조직이다.⁷⁰⁾⁷¹⁾ 회원들은 비밀리에 사회(공산)주의 서적에 접근 탐독하면서 사회(공산)주의에 우호적 인식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려고 하였다. 신진회 회원들은 4.19 발발 직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학생운동이 벽에 부딪치자 전면에 나섰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자 신진회의 대학 내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특히 신진회 내부의 진보파의 세력은 크게 신장했다. 신진회는 학내의 진보를 넘어 학생운동 진보로 발전하면서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신진회는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출범(1960.8.18.),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결성대회(1960.11.18.) 이후 각 대학의 통일세력을 규합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 대회를 개최(1961.5.6.)하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으로 발전되었다.⁷²⁾ 그리고 시민운동단체인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마산), 경북 민족통일연맹(대구), 민족자주통일촉진회(중앙)가 이때 발족하였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혁신정당들이 통일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0년 9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를 결성키로 하고, 좌파 청년단체인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과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각 대학의 민족통일학생연맹(민통학련) 등 청년 학생조직도 동참했다. 민자통에 합류한 청년조직에는 급진적 인물이 다수 참여했는데 이들은 1, 2차 인혁당 사건과 남민전 사건의 주역들로서 급진 좌파세력의 맥을 이었다.⁷³⁾

대학가의 통일운동은 1961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급진화했다. 좌경학생들은 3월 22일 장

69) 선진적 인식이란 ‘사회(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70) ‘신진회’는 1950년대 중반 태동 된 서울대 문리대의 진보적 학생서클이다. 신진회는 1957년 류근일 전조선일보 주필이 ‘모색-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필화(筆禍)사건으로 ‘신진회’는 표면적으로는 해체됐지만 이후 반(半)합법적으로 재건됐고 1959년 합법적으로 활동했다. 대표적 회원은 이영일 전 의원, 박범진 전 의원, 류근일 전 주필, 유세희 교수 등이다. (출처: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6463/1>, 검색일: 2023.4.3.)

71) ‘신진회’와 쌍벽을 이루던 또 하나의 진보적 학생 동아리는 ‘정문회(政文會)’이다. 진보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념은 신진회와 같았지만 ‘정치문학’의 장르를 개발하기 위한 ‘진보적 문학애호가’이 만든 모임이다. 노재봉 전총리, 송복 전 교수 등이 이 모임 회원이었다.

72) 김동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 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88, p. 38.

73) 남시욱(2009), “위의 책”, pp. 195-196.

면 정권이 추진하려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 저지법’ 폐기를 명분으로 야간에 횃불 시위를 하고 통일을 외쳤다.⁷⁴⁾ 횃불 시위에서 이들은 ‘미군철수, 김일성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의 구호를 외쳤다.⁷⁵⁾ 이 법은 불법 시위가 계속되자 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혁신계는 반민주악법반대공동추쟁위원회를 결성해 법 제정 반대투쟁을 벌였다.⁷⁶⁾ 혁신세력은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에 편승하고 배후에서 지원했다. 한편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은 3월 5일 북한 학생들에게 판문점 회의를 제안하고 이틀 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민통학련) 준비 회의 후 남북학생회담을 북한에 다시 제안했다. 민통학련은 유엔감시 하에 남북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이 비자주적이고 소극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직접 대화에 의한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북한은 급조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단체 명의로 이 제안을 환영했다.⁷⁷⁾ 한편 4.19 이후 통일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의견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자유로운 통일방식의 거론이 억압되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학생들은 ‘소수 특권층의 생존권 유지 때문에 통일론을 백안시하는 야비한 권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은 UN에 일임한다는 무사안일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식과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강조했다.⁷⁸⁾

학생들의 통일논의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으나 정치행동화를 금했다. 그러나 학원 일각에서는 민족통일연맹이 결성⁷⁹⁾되면서 각 대학에 파급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혁명적 주장으로 평가되었다.⁸⁰⁾ 특히 이들에게 남북교류는 자명한 요구이며, 이들은 서신 왕래 등의 실현을 위해 반공법 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⁸¹⁾ 이어서 이들은 1961년 5월4일 남북 학도회담을 제안하고, 다음날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 대회를 통해 5월 중 판문점에서 남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⁸²⁾ 이처럼 대학생들의 낭만적 통일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가정인 반공(反共)이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민족이라는 상징의 정립에도 부단히 논의하였다. 즉 ‘피는 더 고귀하고 통일은 피로써 지켜야 할 과제이며,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며, 통일은 하나의 신앙이 되었다.⁸³⁾

74) “운동권 전설적 이론가 김정강의 ‘4.19에서 6.3까지’”, 신동아 573호, 2007.6.(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6463/1>. 검색일: 2023.4.3.)

75)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기파랑, 2013, p. 281.

76) 남시욱(2009), “위의 책”, p. 198.

77) 남시욱(2009), “위의 책”, pp. 199-200.

78) 고영복, “4월 혁명의 의식구조”, 『4월 혁명론』, 한길사, 1983, p. 120.

79) ‘민족통일연맹’은 1960년 11월1일 서울대학교에서 발기하여 18일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연맹의 기본방침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자세에서 민족 주도이념을 모색하고 잠들고 있던 민족혼을 일깨워 민족통일의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었다. 이들에게 통일은 절대적 희망이었고 낭만에 가까운 신앙이었다고 평가된다.(고영복(1983, “위의 글”, p. 122)

80) 고영복(1983), “위의 글”, p. 121.

81) 고영복(1983), “위의 글”, p. 123.

82) 학도회담의 내용에는 학술토론회의, 체육대회, 기자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우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낭만어린 통일의 의지를 보였다.

“한국인은 종교를 상실했다. 그 신앙 없는 폐허 위에 우리는 통일의 종교를 맞이한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비폭력 현장을 교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교적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⁸⁴⁾

한편 신민회주도로 결성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통일문제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신민회는 처음부터 정치 지향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진보좌파가 장악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정치제도상의 부분적 개량,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체제 변혁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제기한 민족통일 문제는 사회구성체 전반의 변혁의 계기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에서 한 사회의 특징과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적 토대와 이에 기반한 정신적 제도적 상부구조에 이루어진 사회’다.⁸⁵⁾

이들이 주장하는 변혁운동이란 ‘사회주의 지향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의 좌파들은 통일문제를 계급(투쟁)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이들에게 사회구성체 전체 수준에서의 변혁적 과제는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민족통일운동을 완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해방 직후부터 민족부르조아지는 민주주의 변혁 세력의 담당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좌파만이 민족통일 전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민회의 좌파들은 이런 인식하에서 4.19 혁명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도구였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도 서구식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변혁(=공산주의)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4.19 혁명을 분단에 의해 단절된 변혁운동을 다시 복원하고 그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완전한 민족해방을 성취하지 못한 민족통일문제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조직하는 과정인 1961년 2월 한미행정협정 반대 투쟁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4.19 혁명 1주기에 4.19 제2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4.19의 성격을 변혁운동이라 규정하고, 향후 과학적 이론의 지표를 세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4.19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좌파가 장악해 갔고, 정계와 사회계에도 좌파가 역량을 발휘했다.

2) 민청련(민주화청년운동연합)

민청련은 1970년대 학생운동 출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983년 9월 창립되었다. 이는 1978년 5월에 결성된 민주청년인권협의회(민청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민주통일민중운

83) 고영복(1983), “위의 글”, p. 119.

84) 고대신문(1961.4.29.)(고영복(1983), “위의 글”에서 재인용.)

85)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582. 한편 북한은 ‘사회경제구성태’라고 하며, “한 사회경제구성태로부터 다른 사회경제구성태로의 이행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동연합(민통련)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그 시발점이다.⁸⁶⁾ 민청련의 이론적 기반은 ‘민족민주주의 혁명(NDR: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다. ‘민족민주주의 혁명’이란 레닌의 연속 2단계 혁명론을 수용한다. 여기서 민족은 반외세, 민주는 반독재를 의미한다. NDR전략의 1단계는 노동자 계급만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고 반동 부르조아지와 자유 부르조아지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여 먼저 현정권(파쇼)을 타도하고 다음에 미제를 축출하여 임시 민주혁명정부를 수립하며, 용공정권인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고, 2단계는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한 다음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⁸⁷⁾ 이들은 NDR은 기관지(민주화의 길)에서 ‘한국 사회는 제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적 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 세력과 민중 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다’고 규정하고 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1950년대 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은 사회주의 ‘민주기지 노선’에 입각한 ‘무력해방 노선’이었다. 그러나 6.25 남침에 실패한 이후 대남전략은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수정한 후 1971년 4차노동당 당대회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과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다.⁸⁸⁾ 따라서 민청련이 주장하는 반미는 반(反)제국주의를, 반독재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처럼 민청련의 민족민주주의 혁명의 논리는 1960년대부터 북한이 주장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일맥상통한다. 민청련의 NDR 노선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노선은 이후 좌파(학생)운동세력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고,⁸⁹⁾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⁹⁰⁾

3)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87년 8월 전대협이 결성되고, 이인영을 초대의장으로 선출했다. 전대협은 1985년 전학련과 그의 하부조직인 삼민투, 1986년 민민투, 자민투, 애학투의 활동을 계승한 학생운동조직이다.⁹¹⁾ 이처럼 전대협은 형식상으로는 전국 대학생 대표들의 협의체로 전국적 학생단체였다. 그러나 전대협은 좌파 학생운동권 특히 주체사상파(NL: National Liberation) 계열이 장악해 1980년대 후반 강력한 좌파 운동단체로서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미래의 좌파 정치세력을 양성하는 훈련원 역할도 수행하였다.⁹²⁾ 주사파의 문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한국을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86)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51-254.

87) 북한연구소(1999), p. 1197.

88) 김일성,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제9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89)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51-254.

90)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유동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세력 실체와 대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응』, 자유통일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정책자료집, 2023.)

91) 북한연구소(1999), p. 1217.

92)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66-267.

즉 이들은 북한이 제시한 남한혁명의 성격 및 그 혁명의 실천을 위한 전략·전술론을 수용하여 민족해방투쟁 우선론의 입장을 취해왔다.⁹³⁾ 따라서 전대협은 출범 당시 ‘외세의 배격’,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등의 이념적 급진성을 보여주었다. 전대협의 급진성은 ‘자주 민주 통일(자민통)’의 슬로건이 입증한다. 자민통은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이며, 국내 NL 주사파의 3대 투쟁 강령이다.

한편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 전대협은 내부의 NL파와 PD파(People's Democracy)가 연합전선을 구축해 반(反)보수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을 하고, 북측의 학생단체와 손잡고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방안을 주장했다. 그리고 전대협은 1988년 6월 4일 ‘6.10 남북학생청년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원천봉쇄로 6.10 회담이 성사되지 않아 7월에 다시 8.15 남북학생 회담을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올림픽 공동개최, 핵무기철거, 평화협정 체결 등이다. 특히 이들은 서울 올림픽 단독 개최가 민족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서울올림픽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1988년 12월 이듬해 7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⁹⁴⁾에 전대협을 초청하고 3월 초순에 실무협의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가 참가 불허방침을 결정하자 전대협은 불허방침에 반발해 임수경을 평양축전에 파견했다.

전대협은 출범 초부터 전국의 주요대학이 참여한 거대한 조직체로 NL 주사파가 장악했다. 실제로 전대협은 공식기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파 지하 세력이 장악한 방계조직인 정책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졌다. 즉 북한의 선전기구인 한민전의 전위조직인 반미청년회, 주사파 지하조직인 자민통(자주민주통일) 그룹과 조통 그룹, 반제청년회 등이 전대협을 조종했다. 정책위원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인물 중에서 선발되며, 정책위원들이 전대협 의장의 투쟁노선수정 방법 등을 배후에서 지시·조종했다.⁹⁵⁾

4) 한총련(한국전국대학총학생회)

전대협은 1993년 4월 강력한 연합조직인 한총련을 결성하기로 하고 해체되었다. 한총련과 전대협은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대협이 전국 180여개 대학(교) 학생대표자(총학생회장)들의 협의체인데 비해, <한총련>은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까지를 포함한 1600여 명을 대의원으로 하는 연합체이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

93) 주사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144&cid=46626&categoryId=46626>, (검색일: 2023.4.10.)

94)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소련공산당 전위조직인 세계민주청년연맹과 국제학생동맹이 공동주관하는 반제투쟁 행사로 1947년 이후 공산권국가에서 3~7년 주기로 개최되었다.

95) 남시욱(2009), “위의 책”, pp. 323-328.

한 것이다.

한총련은 전대협·통일운동 등의 성과를 계승하되 종전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한총련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합법적 운동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내부의 주사파들은 창립대회 때부터 과격 시위를 했다. 한총련은 발족 직후부터 미군기지 안으로 쳐들어가 주한미군철수와 반전반핵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철회 등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총련의 본격적인 친북활동은 1995년 이후다. 이때부터 한총련은 외세반대 민족자주권 회복, 사회민주화 실현, 연방제 통일, 학원민주화 추진 등의 내용을 강령에 포함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다. 이때 한총련의 구호는 ‘생활도, 학문도, 투쟁도, 주체의 요구대로 밝혀 나가자’는 것이었다.⁹⁶⁾ 한편 북한은 한총련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사 자체를 무산시켰다.⁹⁷⁾

한총련의 이적 행위는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한총련의 폭력성, 친북반한 정서 등을 학생들에게 반감을 사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한총련을 탈퇴하고 비운동권 총학생회연합단체가 발족됐다.⁹⁸⁾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한총련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이 역풍을 맞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행사 자체를 불허했다. 그러나 한총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⁹⁹⁾ 그리고 한총련은 북한의 노골적인 비호를 받으면서 강경 투쟁을 계속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전 제8기 출범식은 경찰의 허가 아래 평화롭게 개최되었다.¹⁰⁰⁾ 정부는 1998년 판문점에서 8.15 통일대축전을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기 위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민화협)’를 발족시키고, 협의회 참여 단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거나 불법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통일대축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¹⁰¹⁾ 그러나 북한은 범민련과 한총련의 중심적 역할과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통일대축전은 결국 무산되었다.¹⁰²⁾ 한편 북한은 한총련이 참가하는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이어야 한다는 고집하고, 정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1999년 범민족대회는 남북이 따로따로 개최하게 되었다.¹⁰³⁾ 북한의 한총련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범민족대회는 김정일의 지시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¹⁰⁴⁾

96) 남시욱(2009), “위의 책”, pp. 382-386.

97) 남시욱(2009), “위의 책”, pp. 449-451.

98) 남시욱(2009), “위의 책”, pp. 398-400.

99) 남시욱(2009), “위의 책”, pp. 443-444.

100) 남시욱(2009), “위의 책”, p. 446.

101) 남시욱(2009), “위의 책”, p. 447.

102) 남시욱(2009), “위의 책”, pp. 447-448.

103) 남시욱(2009), “위의 책”, p. 449.

104) 남시욱(2009), “위의 책”, p. 450.

5)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학련은 북한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한국 북한 해외동포 학생을 연계하여 1992년 8월 15일 결성되었다. 범청학련은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전선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청년 학생조직이다. 범청학련은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강령으로 간주하고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며,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길은 연방제통일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범청학련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했다. 이는 범청학련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전위대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리고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추종하는 한총련 의장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¹⁰⁵⁾은 이들의 활동이 북한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은 쉽게 확인된다. 즉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범민족대회 개최에 앞장서고, 북측 본부와 해외본부 공동명의로 연방제통일 방안에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1996년 8월 범민족대회가 열릴 때 한총련 간부 30여 명이 북한 김정일에게 ‘주체사상 중심으로 투쟁’하겠다는 충성 편지를 한총련 지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총련과 범청학련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단체다. 즉 한총련의 간부가 범청학련 남측본부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좌파 <노동조직>의 통일운동

노동조합이 대체로 좌파적 속성을 가진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성은 사회변혁의 정도에 따라 노사합의를 중시하는 협조적 노사관계의 유형도 있고, 노사대립을 중시하는 전투적 노사관계의 유형도 있다. 특히 전투적 노사관계의 유형의 일반적 속성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강령을 가지거나 최소한 노동해방과 노동자가 대우받는 사회로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결성된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이하게도 정치적 변혁 즉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1980년 5월 ‘민주화의 봄’을 계기로 사회변혁을 목표로 한 노동자 조직이 탄생했다. 바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이 창립대회에서 결성되었다. 그 결성목적은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제2노총 결성을 통한 기층 노동자 조직화’이었다. 노동운동을 변혁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동운동가들의 투쟁경험과 학생운동가 출신 지식인 활동가의 직접적 결합을 모색했다. 이때 학생조직은 혁명의 보조수단이었으며 1981년 좌파 학생 지하조직인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이 만들어졌다. 전민학련은 1980년대 대학생시위를 주도했으며, 관계당국은 전민학련 사건을 ‘학림(學林) 사건’이라고 칭했다. 대학생의 노동현장 참여는 ‘위장취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전민노련의 투쟁노선은 노동운동을 정치투쟁의

105)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p. 846-847.

도구로 삼아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전민노련의 출현은 건국 정국에서 사라진 ‘전평’의 전통을 잇는 좌파 노동운동이 30여 년 만에 좌파 노동세력이 부활했다는 점이다.¹⁰⁶⁾

다음 1995년 11월에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진보적 정치세력화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1987년 6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4개 지역별 제조업 노조가 결성한 지역별 노조협의회와 1990년 1월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결성되었다. 19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듬해 11월 민주노총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창립대회에서 권영길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 정치세력화 실현’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상근직원 대부분이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의식화된 운동권 출신이었다. 1996년 2월 민주노총이 복수노조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합법화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합법성을 인정받은 민주노총은 한미FTA 반대, 평택투쟁(=경기도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주한미군철수, 광우병 투쟁 등의 반미친북(反美親北) 투쟁에 몰두했다.

5. 좌파 통일운동의 특성

1) 마음의 고향은 공산주의 국가 설립

1945년 8월 해방 이전 일제 식민시대에도 공산주의는 선진(?)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은 해방과 건국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건국 이전과 이후 좌파의 통일운동은 한반도 전역에서 공산주의국가를 설립하는 것이다. 해방 직후 가장 먼저 생긴 정당이 조선공산>이었고, 사회단체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었다. 한국 좌파는 공산주의 정부수립을 위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제주 4.3 투쟁’을 했고, 국토완정(=무력적화통일)을 위한 6.25 남침전쟁이 실패하자 남한에 지하당 조직 건설로 투쟁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좌파들은 지하당, 사회단체, 학생조직, 노동조직 등을 결성해 남한에서 1단계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2단계로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과정에서 ‘민주(화)’, ‘민족자주 또는 민족자주’, ‘평화통일’ 등의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좌파 조직의 실체를 은폐하는 선전·선동 전술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특히 이들은 민족을 전면에 내세워 민족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민족통일만 강조하면서 ‘어떤 정치체제로의 통일인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칫 국민들이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온당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치체제인가는 통일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런 성과를 호도하면서 공산주의가 평등한

106) 남시욱(2009), “위의 책”, pp. 273-275.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치고 독재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고 국민들은 독재 치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같은 반한친북(反韓親北)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지원하는 위한 것과 같다.

2) 통일전선의 형성

레닌(Vladimir Lenin)은 “기본 목표 수행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이면 동맹군으로 삼고 주적을 압박하는 우회공격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레닌은 우회 공격 수법을 통일전선으로 규정하고 권력탈취를 위해 통일전선 형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¹⁰⁷⁾ 즉 통일전선은 공산당의 힘이 부족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해서 투쟁하는 전술이다.¹⁰⁸⁾ 따라서 한국의 좌파가 남한 땅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김일성은 국토완정(=전조선혁명)을 위해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민족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¹⁰⁹⁾ 북한은 이를 체계화시켜왔다.¹¹⁰⁾ 북한은 남한혁명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승리의 필수적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제국주의자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데 남한 내 공산좌익세력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공산세력이 아닐지라도 미국과 현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나 세력을 규합하여 이들의 힘을 빌려 현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으로 자주 민주 통일(=자민통)을 채택하고 있다.¹¹¹⁾ 이런 북한의 통일전선에 따라 한국 내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있다. 즉 이들은 ‘북한노선 찬양, 한국비방 중상협박, 반미의식 고취, 자본주의 비방’ 등과 같은 반한반미친북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통일대추전, 범민족대회’ 등을 개최하고, 민족통일을 내세워 ‘연방제통일’을 피력하고,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부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107) 박정기, “북한의 통일전선전략과 정치심리전 수행실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실태와 우리의 대응』,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2023, p. 46.

108)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967.

109) 김일성,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 전선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1권, p. 212.

110) 통일전선 체계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1975),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1981), 『통일전선에 대하여』(1982) 등)

111) 북한연구소(1999), “위의 책”, p. 96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등 외곽단체를 두고 있으며, 외곽단체를 통해 각종 통일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3) 북한의 통일(대남전략)과 연계

북한 정권의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분단 이후 대남전략을 추진해 왔다. 대남전략이란 북한이 한반도공산화통일을 위해 남한을 향해 전개하는 실천적 행동지침으로 북한의 전조선혁명 전략과 같은 의미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1950년대 초까지는 사회주의 민주기지 노선에 입각한 ‘무력해방노선’이었다. 그러나 6.25 남침에 실패한 이후 남한 혁명을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수정했다.¹¹²⁾ 그리고 4차 노동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혔다.¹¹³⁾ 따라서 종전의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혼용해 왔다. 이후 남조선혁명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으로 규정¹¹⁴⁾하고 이를 당 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했다. 이후 북한은 제5차 당대표자회 이를 견지해오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과업수행’이라는 문구를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대체했다. 여기서 ‘사회적 자주’라는 의미는 외세를 축출해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는 의미로 ‘민족해방’의 다른 표현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은 파쇼독재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자는 의미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2021년의 대남전략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의미한다.¹¹⁵⁾

IV.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논의

정부의 통일논의는 우파의 통일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통일논의는 역대 정부에 따라 변화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정치적으로 자유민

112) 김일성,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제9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113) 김일성, “노동당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저작집』 1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114)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저작집』 2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3.

115) 유동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세력 실체와 대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응』, 자유통일국가대개조 네트워크 정책자료집, 2023, pp. 45-46.

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화를 추구한다. 이런 통일의 미래상이 통일 이전보다 통일 이후의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정체(民主政體)를 세워가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었다.¹¹⁶⁾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은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로부터 48 대 6의 압도적 다수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성립한 유일한 합법적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Korea)’라는 점을 결의했다.¹¹⁷⁾¹¹⁸⁾ 그리고 유엔총회는 회원 각국이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을 때 유엔 결의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미국 정부가 맨 처음 대한민국을 승인하였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국교를 수립하였다.¹¹⁹⁾ 유엔총회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으며, 모든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는 한국의 그 부분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인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¹²⁰⁾

건국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선언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통일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명기한 것이며, 통일관련 영토조항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주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즉 남북한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의 북진통일론과 북한의 국토완정론(=남진통일론)으로 이어졌다.¹²¹⁾ 이는 자기 주도의 통일을 완

116)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기파랑, 2013, pp. 140-141

117) 이영훈(2013), “위의 책”, pp. 142-144.

118) 좌파 역사학자들은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의 합법적 정부’를 승인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전체에서 절대다수가 살고 있으며,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해서 성립된 정부가 합법적 정부이며, 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외면한 것에서 비롯된다.

119) 이영훈(2013), “위의 책”, pp. 140-144.

120) Se-Jin Kim,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70.(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4, p. 75에서 재인용)

121) 김일성저작집에 의하면 1949년 김일성은 ‘국토완정’과 관련해 14번 언급했다. 그의 ‘국토완정’의 아욕은 이듬해 6.25 남침전쟁을 감행했다.(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성하겠다는 점에서 양자는 기능적 등가물로 작용했다.¹²²⁾ 그러나 두 노선 간에는 확연한 차별성이 드러난다. 즉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은 6.25 남침전쟁이라는 남진통일을 현실화시키려 했다는 점이다.¹²³⁾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체제전복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의미다. 즉 북진으로 북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정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승만의 반공노선은 청년시절, 미국 유학시절, 망명생활 동안 체화된 사상이며, 1945년 귀국 후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의 반공사상은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기독교와 자유주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¹²⁴⁾ 따라서 건국 이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반공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래서 건국 직후부터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표방하고 통일방안으로 유엔 감시 하에 북한지역에 대한 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가 계속 억압될 경우 “무력으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진통일을 위해 한국군의 증강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에게 필요한 군수장비의 지원을 요청했다.¹²⁵⁾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현실성이 결여된 명분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¹²⁶⁾ 즉 당시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북진통일은 허황되고 공허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과 6.25 전쟁 직전까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주장에는 국내 정치적 목적과 대미 외교적 목적이 담겨졌다. 북진통일은 부족한 정당성을 메워주고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였으며, 미군철수가 강행되는 시점에서 철군의 지연 또는 철군에 따른 보장과 보상을 위한 것이었다.¹²⁷⁾ 그러나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기대와 달리 이 정책의 호전성과 무모성에 대해 미국은 직접적 거부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극동방위선인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이 선포되고 1월 19일 미 하원의 대한(對韓)원조 삭감 조치가 있었다.¹²⁸⁾

1950년 11월말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명분으로 중공군의 개입하면서 미국은 ‘확전인가, 봉합인가, 철수인가’의 선택지에 직면했다. 미국은 ‘봉합’을 선택했다. 봉합은 정전(停戰)을 의미한다.¹²⁹⁾ 미국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정전회담이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6.25 전쟁을 북진통일의 호기로 여겼던 이승만은 미국이 선택한 정전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¹³⁰⁾ 정전은 6.25 전쟁을 통일의 기회(=북진

122) 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4, pp. 81-82.

123) 김일영(2004), “위의 책”, p. 82.

124) 김용삼(2015), 『이승만의 네이션빌딩』, 북앤피플, p.196.

125) 김일영(2004), “위의 책”, p. 98.

126) 유석열,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0, p. 7.

127) 김일영(2004), “위의 책”, pp. 98-99.

128) 김일영(2004), “위의 책”, p. 99.

129) 김일영(2004), “위의 책”, p. 147.

130)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 pp. 33-34.

통일)로 여긴 이승만과 정전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미국 간에는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승만은 긴장 관계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와 한국의 이익유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따라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지렛대로 연결되고,¹³¹⁾ 한국 안보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허황된 정책이라고 폄하할 수만 없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통일 논의는 제네바 정치회담¹³²⁾으로 시작되었다. 제네바 회담은 전쟁 직후 적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제안하면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이후 고조된 반공반북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거부한 채 북진통일 이외에는 어떠한 통일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 모든 통일논의는 터부시했다.¹³³⁾

2. 장면 정부의 통일론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정부의 붕괴와 함께 북진통일론은 사라지고 7.29 총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당 정부의 출범은 정전 협정 이후 터부시되었던 통일은 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북한의 연방제통일의 제시와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미 상원의원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방안 등은 혁신정당과 사회단체의 통일은 의를 가열시켰다.¹³⁴⁾ 특히 중립화 통일방안에 해외 교포와 국내 혁신계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장면정부는 오스트리아식 중립화안에 지경학적 이유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¹³⁵⁾ 한편 북한은 1961년 4월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및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통일논의를 더욱 자극했다.¹³⁶⁾

장면정부의 통일방안은 이승만정부의 통일방안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차이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국내 경제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이런 점에서 장면 정부의 통일론은 ‘선(先)건설, 후(後)통일’이라 할 수 있다.¹³⁷⁾ 장면 정부는 1960년 8월 27일 ‘유엔 감시 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주장했다. 즉 장면 정부는 유엔

13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차상철(2004), “위의 책”)

132) 제네바 정치회담은 정전협정 제4조 10항의 “정전협정이 서명 발효된 이후 3개월 이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외국군 철수를 협의하기 위해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33) 강인덕 외, 『평화와 통일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2019, p. 45.

134) 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 46.

135) 장면정부는 5개항의 중립화통일방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공보부, 『한국의 중립화 통일은 이래서 불가능하다』, 공보부, 1964)

136) 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 50.

137) 김학준,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논총』 제15권, 국제정치학회, 1975, p. 85.(신영석, 『통일정책 변천사』, 평화문제연구소, 2008, p. 95에서 재인용)

결의안을 통일원칙으로 제안한 것이다.¹³⁸⁾

그러나 민주당이 7.29 총선 이후 통일논의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급진적 통일단체가 속출하여 통일운동을 주도했다. 1961년 1월 4개의 혁신정당을 비롯한 16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를 결성하고, 이들은 반세외 민족주의, 극각적인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다. 민자통 활동의 주역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했던 공산주의자들이었다.¹³⁹⁾ 북한은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로 규정하고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독려하고,¹⁴⁰⁾ 북한의 대남평화통일공세 수위는 높아졌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국내의 각종 통일론으로 인한 혼란을 조정 통제할 능력은 부족했고, 1960년 11월부터 전개된 북한 공산주의자의 대남 평화통일 선전공세에 대처할 능력도 결여되었다. 결국 급진적 통일논의의 붓물과 장면 정부의 능력부족이 야기한 사회불안정이 군의 개입을 자초했다.

3. 박정희 정부의 <선(先)평화 후(後)통일론>

1961년 5월 군사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한 혁명정부는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혁명공약의 통일방안은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는 반공체제의 강화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이다. 물론 혁명정부의 통일방안은 제네바 정치협상의 기초를 견지하지만 먼저 실력배양 후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 차이가 난다.¹⁴¹⁾ 이런 통일정책 기초는 제3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방법론은 이전 정부와는 차이가 있었다. 즉 국가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은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에 국가사회의 능력을 신장한 후 통일하자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 1963년 12월 ‘선(先)실력배양 후(後)통일’방안을 제시한 후 자립경제의 확립이 승공(勝共)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¹⁴²⁾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1월 “조국 근대화가 남북통일의 대전제이며, 자립이 통일의 첫 단계”라는 점을, 1967년 1월에도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이며 민주 역량의 배양”을 강조했다.¹⁴³⁾ ‘선 건설 (=선실력배양) 후 통일’론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승리를 통한 통일이며, 북한을 제압할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하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의 통일관은 통일논의로부터 야기되는 국론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철저한 반공정책을 기반으로 통일을 위한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¹⁴⁴⁾

138) 임현진 외,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 34.

139) 이영훈(2013), “위의 책”, p. 281.

140)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 1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p. 133.

141) 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p. 53-54.

142)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1963, pp. 241-242.(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 56에서 재인용)

143)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2』, 대통령비서실, 1973, p.592.(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 56에서 재인용)

박정희 정부의 통일론은 1970년 8월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이하 8.15선언)’이 발표되면서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8.15선언의 핵심은 ‘동족 간 전쟁을 막고 인내와 양식을 발휘해서 통일을 평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긴장상태의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무력도발 행위의 중지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포기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간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를 북한에 제안한 것이다. 8.15선언은 남북이 대결의 관계에서 대화의 관계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⁴⁵⁾ 이처럼 정책기조 전환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북한을 선의의 체제경쟁 대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¹⁴⁶⁾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점이다.¹⁴⁷⁾ 8.15선언은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남북 교류협력과 각종 선언의 논리적 기반이 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의 여건이 조성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가동했다. 하지만 북한이 반공정책 포기와 공산주의 허용,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통일에 의세계입 반대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1973년 8월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통일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1975년 대화는 전면 중단되었다.¹⁴⁸⁾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1973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6.23선언’¹⁴⁹⁾을 발표한 데 이어 1974년 1월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어서 1974년 8월 남북 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밝혔다.¹⁵⁰⁾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기조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 통일정책 기조의 기본이 되고 있다.¹⁵¹⁾

4.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0년 9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북·통일정책에 서는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144) 황인태, 『통일정책론』, 조명문화사, 1995, p. 185.(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 57에서 재인용)

145) 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 68.

146) 신영석, 『통일정책 변천사』, 평화문제연구소, 2008, p. 127.

147) 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p. 69-70.

148) 강인덕 외(2019), “위의 책”, pp. 130-135.

149) ‘6.23 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으로 규정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필요성, 남북한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위해 지속 노력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남북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모든 국가와의 상호 문호개방 ●평화선언에 입각한 대외정책 및 우방국들과의 유대관계 공고화 재천명(국립통일교육원, 『2022 통일문제이해』, 2022, p. 156.)

150) ‘평화통일 3대 원칙’은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 조성 및 동질화의 촉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자유 총선거 실시 등이다(국립통일교육원(2022), “위의 책”, p. 156.)

151) 국립통일교육원(2022), “위의 책”, p. 156.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했다.¹⁵²⁾ 이 통일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해 거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¹⁵³⁾ 이 방안은 새로운 통일철학이나 방안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통일정책의 맥락을 유지하고,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체계화한 것이다.¹⁵⁴⁾

1982년 2월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민족화합 촉진 조치의 하나로 20개 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을 북한에 제의했다. 구체적 시범사업에는 서울-평양 도로 연결 및 개통, 설악산-금강산 관광지 개방, 공동어로구역 설정, 각계 인사의 상호 친선방문, 자원 공동개발 등이다.¹⁵⁵⁾ 따라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 ‘선 평화 후 통일’의 기본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며, 이 방안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¹⁵⁶⁾ 이런 정책 제안들은 당시 냉전 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 대북정책이라 평가되며, 이 제안들은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4월 남북 국회 회담을 제의하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2차례의 예비 접촉이 있었다. 우리 국회는 1차 예비회담(1985.7.23.)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 통일조국의 청사진과 통일조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족의 진로를 제시할 것을 북한에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불가침 선언의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 있는 남북당국 간의 협의·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서 2차 예비접촉(1985.9.25.)에서도 북한의 불가침 선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북한은 팀 스피릿 훈련을 이유로 모든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본격적인 국회 회담이 열리지도 않은 채 중단되었다.¹⁵⁷⁾

5.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국민의 직접 선거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는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웠다. 특히 개정 헌법에 ‘통일 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을 처음으로 명기함으로써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¹⁵⁸⁾ 또한 동구권의 개혁과 구소련의 붕괴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통일정책을 더욱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유리한 여건이 ‘북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 북방정책의 시발점은 ‘민족

152) 신영석(2008), “위의 책”, p. 153.

153) 국립통일교육원, 『2022 통일문제이해』, 2023, p. 147.

154) 신영석(2008), “위의 책”, p. 154.

155) 신영석(2008), “위의 책”, pp. 155-156.

156) 유석열(2000), “위의 책” p. 23.

157) 신영석(2008), “위의 책”, pp. 169-170.

158)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선언)'이다. 7.7선언은 북한과의 관계를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며,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¹⁵⁹⁾ 7.7선언은 남북의 대결구도를 화해구도로 전환하면서 앞선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7.7선언의 논리적 기반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기능주의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¹⁶⁰⁾ 7.7선언은 이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토대가 되었다.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그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미래 국가상을 자유, 인권, 복지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은 정상회담을 통한 민족공동체 현장의 제정 → 과도적 체제인 남북연합체제 형성 → 남북연합체제에서 통일헌법과 절차와 방법 마련 → 총선거 → 통일국가의 완성의 단계를 거친다.¹⁶¹⁾ 이 방안에는 '남북연합단계'가 제안되면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분단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과정 및 방식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통일방안이라고 평가된다.¹⁶²⁾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의 연방제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상정해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이라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민족통합을 통한 통일국가'의 완성이다.¹⁶³⁾

이런 한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통일방안 공표에 대해 북한의 대내외 상황은 매우 곤혹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 10월 독일통일을 목격한 북한은 체제위협(붕괴)에 직면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진의를 확인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 보장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북한은 1988년 8월 이후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¹⁶⁴⁾ 남북대화의 대표적 결과물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이며,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서 합의서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6.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조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 우위'의 진보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은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기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접촉을 통한 변화'로 점진

159) 네이버 지식백과, "7.7 선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951&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3. 4. 17.)

160) 신영석(2008), "위의 책", p. 182.

161) 임현진 외(2005), "위의 책",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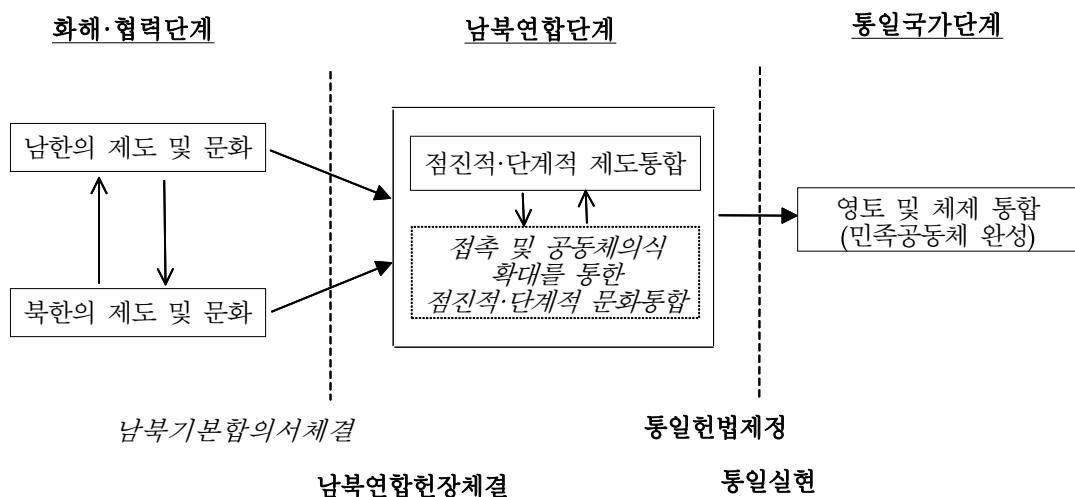
162) 신영석(2008), "위의 책", p. 195.

163) 신영석(2008), "위의 책", p. 197.

164) 유호열, "전략과 일관성 부재로 변죽만 울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신동아』, 2007년7월

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1994년 8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의 점진적·단계적 실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구조다.([그림 2] 참조) 각 단계는 남북 간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정치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진전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 단계가 완성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전이 가능한 방안이라는 특징이 있다.¹⁶⁵⁾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각 단계별 특성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화해·협력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규범으로 해서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2체제와 2정부는 유지된다. 다음 남북연합단계의 남북연합은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합의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고 양측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며, 남북정상회의와 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통일을 위한 법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통일국가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2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1민족 1체제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다.¹⁶⁶⁾



[그림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단계

165) 조영기,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통일전략”, 『국가재창조 3대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p. 501.

166) 신영석(2008), “위의 책”, pp. 236-237.

자료: 김학송(2015),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원칙과 방안”,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청년세대의 역할』,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p.23.

2) 통일철학과 접근 시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철학은 자유민주주의다. 통일철학의 근원은 헌법이며 헌법이 통일방안 수립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접근 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공동선(共同善)이라는 관점에서 공유된 정치원리와 공론에 기초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부조를 중심 가치로 하는 공동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를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의 안정과 정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에의 접근방법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¹⁶⁷⁾

3) 통일의 기본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다. 첫째,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예멘 사례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

16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0, pp. 73-74.

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은 물론 통일된 조국 또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함을 의미한다.¹⁶⁸⁾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한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연착륙(soft landing)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를 추동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당장 개혁과 개방을 의미하는 북한의 정상화도 요원한 실정이다. 북한독재체제는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무력 개발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현실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선군사상을 고집하고 있고, 기득권 세력들이 3대 세습 과정에서 획득한 기득권적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혁·개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이 지배 사상인 주체사상·선군사상을 고집하는 한 북한 내부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런 과도적 단계적 접근법의 논리적 근거는 ‘접촉을 통한 변화’에 중점을 둔 기능주의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접근이 동일한 체제(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에 이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 비정치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주로 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⁶⁹⁾

7. 한국(정부) 통일논의의 특징

이승만 정부 이후 한국 정부의 통일론은 정부교체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통일론은 일관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 통일론의 철학적 기반은 자유민주주의다.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평등을 더 신장하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결합이다. 우리 인간이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유는 자유만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를 전제로 한 행동은 내 생명, 내 자유, 내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유는 법 앞에서의 만인 평등, 1인 1표의 민주주의선거,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남녀평등, 교육과 직업에서의 기회 평등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와 민주가 황금률(golden rule)의 기초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따라서 분단 이후 남북한이 체제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철학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도

168)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위의 책”, pp. 74-75.

169) 조영기(2022), “위의 글”, pp. 11-12.

당연한 귀결이다.

둘째, 통일 접근방식은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박정희정부 이후 지금까지 통일논의의 핵심 기조다.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높여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동일한 가치 이념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은 정치체제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아주 다른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결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 평화공존의 기회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이다.

셋째, 기능주의에 근간을 둔 통일구조는 선후의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을 제외하면 순차적 구조다. 박정희 정부의 ‘선(先)실력배양(건설, 평화), 후(後)통일’의 구조는 순차적 구조가 잘 반영된 것이며, 이후 정부에서 그 기조가 계승 유지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선(先)통합 후(後)통일’의 순차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순차적 구조의 문제는 북한의 급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급변 → 동독의 민주화 → 동독의회의 서독정부로의 편입 → 독일통일’의 과정을 거친 후 경제·사회통합의 과정을 밟았다.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 통일 후 통합’의 과정이었으며, 이런 상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비도 필요하지만 ‘한반도통일 플랜 B’의 상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¹⁷⁰⁾

넷째, 한국의 통일논의는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6.23 선언 이후 ‘선평화 후통일’의 기조가 통일논의를 주도해 왔다. 이 기조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평화의 가치를 고양시켜 주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이나 김일성의 남진통일(=국토완정)이 무력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선평화 후통일’의 기조는 큰 진전이다. 또한 평화가 중요한 것은 통일 과정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독의 민주화가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다.

V. 우파통일: ‘자유에 기반한 통일’¹⁷¹⁾

1. 정치체제 선택이 통일

통일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인해 “나누어진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다시 합치는 정치적 행

170) 통일의 이분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조영기 외, 『한반도통일 플랜 B』,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171) 조영기, “공동체자유주의와 통일철학”, 『지금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2022, pp. 33-35.

위”이다. ‘통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나누어진 상태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는 ‘분단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는 통일은 끝이 아니라 통일국가가 지속되어야 하는 ‘현실의 지속’을 의미한다. 바로 통일이란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통일은 우선적으로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정치행위로 귀결된다. 정치체제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정치체제가 경제 및 사회체제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통일도 정치체제 선택의 문제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70여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도 정치체제 선택의 문제다. 통일과정에서 ‘어떤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어떤 정치체제를 지속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는 부정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체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이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때 ‘부정되어야 할 체제’와 ‘지속되어야 할 체제’의 기준은 ‘자유’다.

2. ‘자유’에 기반한 통일

왜 ‘자유’인가? ‘자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삶과 온갖 결정을 좌우하기를 열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자유’는 내가 타인의 도구처럼 작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이고자 하는 힘의 원천이다. 또한 ‘자유’가 민주, 평등, 법치, 인권, 풍요, 평화의 기반이다. 이처럼 ‘자유’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자주적으로 지배하고, 독립적 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가치다. 그래서 한반도통일은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한다.

자유주의의 기본원칙은 모든 시민(국민)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국가)에서 시민(국민)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자유주의가 구상하는 모든 사회제도는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국민)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존엄하게 살게 할 것인가를 중심축으로 한다. 따라서 신체, 신앙, 사상, 집회결사, 광범위한 공공사무에 참여, 인권 등의 기본권 보장이 요구된다. 신체의 자유가 없으면 공포 속에 살게 되고,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의 지적 능력이 발전할 수 없으며, 정치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시민생활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통일은 흩어진 정치공동체를 하나의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복원·창조는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정치공동체에 귀속된다는 의미다. 또한 정치공동체에 귀속은 그 공동체 안에 각인의 몫(=의무와 권리)이 있다는 뜻이다. 즉 내가 어떤 정치공동체에 귀속은 내가 타인과 함께 평등한 권리 아래 우리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귀속의 조건은 자기실현의 갈망과 함께 평등하게 존중 받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공동체를 위한 귀속의 고리가 (한)민족이었다. 1994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같은 맥락의 산물이다. 문제는 분단 70여년의 세월이 남북은 민족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민족은 역사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한민족’이고, 북한의 민족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김일성민족’이다. 민족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어떤 형태의 ‘민족’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통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한)민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 보장되지만 ‘김일성민족’은 주권부재(主權不在)다. 이처럼 70여년의 분단이 ‘민족’을 심히 오염·훼손시켰다. 따라서 ‘민족’을 앞세운 정치공동체로의 복원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갈등과 퇴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민족’에 의존한 민족공동체 복원은 통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은 다분히 감성적 속성이 있다. 이런 감성적 ‘민족’에 매달린 통일지상주의는 환상이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공동체 복원의 고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고리는 ‘자유’다. ‘자유’가 더 나은 통일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바로 ‘자유’에 기반한 자유 공동체의 통일이어야 한다.

<발표문 요약>

한국 좌파는 일제 식민시대에도 공산주의는 선진(?)사상으로 인식하였고, 해방과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민족자주 또는 민족자주’, ‘평화통일’ 등의 미사여구로 좌파 조직의 실체를 은폐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으로 일관해왔다. 해방 직후부터 남쪽 좌파는 공산주의국가 설립을 목표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건국 공간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제주 4.3투쟁’을 했고, 북한이 국토완정을 위한 6.25 남침전쟁이 실패하자 남한에 지하당 조직 건설로 투쟁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남쪽 좌파들은 지하당, 사회단체, 학생조직, 노동조직 등을 결성해 남한에서 1단계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2단계로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민족통일만 강조했다. 어떤 정치체제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지원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반한친북(反韓親北) 정책을 선동해왔다. 남쪽 좌파들은 김일성의 국토완정을 위한 북한의 통일전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적극 협조하고 기본강령인 자주 민주 통일을 채택하고 반(反)체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인혁당과 통혁당도 같은 맥락의 결성단체이며, 통일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통일대축전, 범민족대회’ 개최, 민족통일을 내세워 ‘연방제통일’을 주장했다. 그리고 남쪽 좌파는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연계하고 추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통일논의는 우파의 통일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화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통일논의의 특징은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고, 선후의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통일논의는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을 제외하면 모두 순차적 구조이다. 박정희 정부의 ‘선(先)실력배양(건설, 평화), 후(後)통일’의 구조는 순차적 구조가 잘 반영된 것이며, 이후 정부에서 그 기초가 계승 유지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선(先)통합 후(後)통일’의 순차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공식적 통일방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기능주의에 의한 통일방안은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남북한처럼 체제가 너무 달라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다.

통일은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정치행위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은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치체제가 경제 및 사회체제도 결정하고 통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공동체를 위한 귀속의 고리가 (한)민족이었다. 1994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같은 맥락의 산물이다. 그러나 장기간 분단으로 남북은 서로 다른 민족이 됐다. 즉 우리의 민족은 역사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한민족’이고,

북한의 민족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김일성 민족’이다. 즉 ‘(한)민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 보장되지만 ‘김일성민족’은 주권부재(主權不在)다. 이처럼 70여년의 분단이 ‘민족’을 심히 오염·훼손시켰다. 따라서 ‘민족’을 앞세운 정치공동체로의 복원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갈등과 퇴행을 초래할 수기 때문에 심히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 복원의 고리는 ‘자유’이어야 하며, ‘자유’가 더 나은 통일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통일은 ‘자유’에 기반한 ‘자유 공동체의 통일’이어야 한다.

<참고 문헌>

1. 한국문헌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8.
- 강인덕 외, 『평화와 통일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2019, p. 45.
- 고영복, “4월 혁명의 의식구조”, 『4월 혁명론』, 한길사, 1983.
- 국립통일교육원, 『2022 통일문제이해』, 2022.
- 김동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 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88.
- 김용삼, 『이승만의 네이션빌딩』, 북앤피플, 2015.
- 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4.
- 김학준,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논총』 제15권, 국제정치학회, 1975.
-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09.
-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2』, 대통령비서실, 1973.
- 박정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과 정치심리전 수행실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실상과 우리의 대응』,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2023.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 신동아, “운동권 전설적 이론가 김정강의 ‘4.19에서 6.3까지’”, 신동아 573호, 2007.6.
- 신영석, 『통일정책 변천사』, 평화문제연구소, 2008.
- 안토니 기든스(김성건 옮김), 『막스 베스의 정치 사회학』, 대영사, 1985.
- 양동안, “1948년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33권 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0.
- ,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대추나무, 2019.
- 월간조선, “이화장에 있는 김구-류위안 대화 비망록 전문 공개”, 2009년 9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
- 유동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세력 실체와 대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응』, 자유통일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정책자료집, 2023.
- 유석열,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0.
- 유호열, “전략과 일관성 부재로 변죽만 울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신동아』, 2007년7월
- 이영훈, 『대한민국역사』, 기파랑, 2013.
- 인보길, “북한 영웅 1호’ 거물 간첩 성시백”, 뉴데일리(2021. 12. 17.)
- 임현진 외,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조영기, “공동체자유주의와 통일철학”, 『지금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2022.

-----, “북한 핵전략, ‘억제→사용’ 전환...‘영토완정’ 담아 무력통일 노골화”, 문화일보 (2022.10.20.)

-----,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통일전략”, 『국가재창조 3대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조영기 외, 『한반도통일 플랜 B』,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0.

2. 북한문헌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저작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저작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저작집』 제9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저작집』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저작집』 제2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3.

정리근,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평양). 1988.

〈토론 3〉

발제문 3에 관한 토론

서 명 구(전 대통령비서관)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린다. 발표자의 핵심 논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엿보이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보충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I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체(body politic)로서, 이는 그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정당한 강제적 질서를 부여한다. 근대국가(modern state) 특히 후기 근대국가인 민족국가(nation-state)는 nation(민족, 국민)을 단위로 성립되며, 그 구성원인 인간(개인)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국민주권 체제를 기본 원리로 한다. 대한민국은 후기 근대국가로서 탄생하였다. 따라서 민족(국민)을 단위로 그 구성원인 인간(개인) 권리를 존중하는 국민주권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남북한 분단은 1945년 38선 획정으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단순한 분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분단이라는 것은 status quo ante 즉 돌아갈 곳이라는 점에서의 <원래의 것>을 상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민족(nation) 문제를 살펴보자. 여기서 왕왕 혼란이 초래된다. 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번역어이지만, 이 용어가 탄생한 유럽에서도 혼란이 크다. 혈연, 문화 등을 토대로 한 집단을 가리키는 Volk, ethnies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는 정치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 즉 국민이라는 의미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후자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혈연, 문화를 토대로 한 한민족 집단은 통일신라시대 늦어도 고려시대 이래 성립되어왔지만, 개인의 권리 특히 주권재민의 원리를 토대로 한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족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은 겨레, 동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대 민족국가라는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국민(na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체제 문제와 관련, 더욱 잘 드러난다. 조선조의 양반체제도 대한제국의 전제정치 체제도 일제의 식민지 체제도 우리가 돌아갈 기준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뿐이었다.

그리고 이후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대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공산 전체주의 체제는 근대 민주주의의 사생아일 뿐이다. 통일이란 국가 정치체의 통일로서, 이는 질서 즉 바로 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선택의 대상은 개인의 권리 보호, 국민주권 차원의 정치체제뿐이다. 종족으로서의 민족은 남북한 통일의 준거가 될 수 없다. 국민으로서의 민족만이 통일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II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지향해온 통일의 像 즉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발제자도 지적하였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우파의 통일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지 않은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다. 먼저 용어 문제로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장기적, 대북정책은 단기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토론자는 오히려 대북정책 속에 통일정책이 포함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통일정책은 단기적 대북정책의 명분 논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헌정질서의 확대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그것은 38선 이북에서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한 <북한지역 의석 추가>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6•25 이후 반격 국면에서 38선 돌파로 실현될 기회를 맞기도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말았으며, 이후 휴전과 한미 방위조약 그리고 제네바 회담 이후 미세 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북한지역 의석 추가>는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변화하였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소극적 표현인 승공•반공정책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2, 제3공화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경제 우선> 즉 대한민국 체제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장면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선 경제 후 통일>이 그것이다.

통일정책의 1차 수정•보완은 1960년대 경제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70년대 데탕트 움직임에 대응하여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통일정책을 기조로 하되, 점차 장기화 되는 <중간 과도기>를 어떻게 이해,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여기에서 <반공과 대결> 일변도에서 공존을 위해 상호 교류를 지향하는 방향이 정립되었고, 이는 원론적 차원의 <구상> 혹은 <원칙>으로 표명되었다. 인구비례 총선거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과도기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제안한 1970년 8.15 구상, 그리고 이를 외교정책 부문에 적용한 6.23 선언, 그리고 인구비례 총선거와 함께 불가침과 문화개방을 천명한 1974년 8.15 평화통일 3대 원칙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7.4 공동성명을 채택,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통일정책의 2차 수정●보완은 경제개발의 성공이 가시화되면서 남북한 국력 차이가 역전되었을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자신감 회복을 바탕으로 두 체제의 노선과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교류와 화합을 기하기 위한 명분으로 <민족(공동체)>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82년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해서 통일정책이 형성된 것이다. 전체적 요지는 화해 협력 단계를 거친 후 남북 연합현장을 통해 과도기적 남북 연합을 이루고, 이후 여기서 단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기적 남북 연합 단계로서, 현존 남북의 정부 위에 민족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89년 말 국제공산권 붕괴는 남북한 관계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모험적 선택을 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례없는 대성공에 자만한 나머지, 핵을 통해 안보●정치 상황이 북한 우위로 역전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의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특히 민족(공동체) 개념 자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공산권의 동요가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면적 붕괴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민족공동체 개념 자체는 공존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고립,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합을 통해 실패한 체제를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핵 위기가 본격 시작된 이후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핵을 개발하는 북한을 같은 민족,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설정한 결과,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에게서 敵의 의미를 완전히 증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동시에 핵 개발 저지라는 초미의 과제를 국제문제, 미●북 문제로 미루어 버린 것이다. 정치적 의지와 용기를 갖고 결단과 선택을 하기는커녕 북한 붕괴론, “시간은 우리 편이다”는 안이한 인식, 그리고 여전히 “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안주한 채 현실 외면의 <도망가는 피칭>을 정당화 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안보, 정치의 실패로 인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기존 통일●대북정책은 형해화 된 채 왜곡●전도된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교류●협력이라는 미명 하의 <북핵 달래기>용 대북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된 굴종적 통일정책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외면한 채 뜬금없이 통일정책을 주제로 한 6●15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 측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의 공통성이 있다고 언급, 연합제와 연방제를 공식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

녕 남북 교류·협력을 동북아로까지 확대하는 등 문제를 오도해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강경해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연장선에서 <상생공영>, <민생인프라>, <신뢰 구축> 등 이른바 <투 트랙 정책>이라는 미명 하의 유화적, 굴종적 정책의 기조를 버리지 못하였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을 등에 업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내걸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노골적인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갔다.

북한의 핵 개발 이후 전개된 특히 좌파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두드러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종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IAEA의 문제 혹은 미·북 문제로 미루었고, 또한 <6자 회담>과 같이 주변 열강을 불러들이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쟁이나 평화냐>를 이분법적 배타적 선택지로 제시한 후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평화>를 강요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를 교류와 협력으로 환원시켜 일방적인 경제지원에 매달렸고 그 결과는 핵 개발의 방치였고 가혹하게 평가하면 조장, 지원이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주로 한국 정부 특히 보수 정부와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과 북한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 문제를 국민 여론에 맡긴다고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이를 능수능란하게 조정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방안을 그대로 유지,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합리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합제, 연방제 등으로 전도, 대체해 왔다는 점이다.

민족(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정책은 '80년대 초반 국제적 신냉전 상황에서 시작하여 '80년대 말 국제공산권이 붕괴하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본격 등장하였고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확정되었다. 그것은 원래 냉전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도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민족>을 호명한 것이다. 이때 민족은 혈연, 문화적 의미의 민족 즉 겨레, 동포의 의미다. 당시 <민족>은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공산권의 몰락으로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더구나 북한이 핵 개발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민족>은 우리의 올바른 대응을 가로막고 나아가 우리 체제를 무화, 해체시키는 <逆 트로이의 목마>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III

발제자가 정확히 지적한 대로 우리 사회 내 정당, 사회단체, 학생조직 등 각종 좌파 조직들의 통일관과 제안들은 민족, 민주, 자주를 매개로 북한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포섭되어 움직인 것이다. 다만 토론자는 우리 사회 내에는 그때 그때 시사적 주제에 대해 북한에 호응, 동조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일종의 체계적인 통일 담론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때 좌파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이종석의 대북관과 남북관계관을 살펴보자. 북한은 실패한 체제로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현저한 남북간 국력 차이로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G2로 부상한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기 때문에 대북 압박 카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설령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어도 북한 체제는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으로서도 핵 사용은 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 보상을 핵 포기과 동시에 교환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대북 포용 정책으로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증진되었으나, 보수 정부에서 그 계승을 거부한 결과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강변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의 국제적 역학관계가 일변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동맹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를 가동함으로써 균형외교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석은 통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통일이 폭력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경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범위 내 모종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통일인가에 대해서는 지역통일, 사회통합, 삶의 양식 통합은 궁극적 통일모형일 뿐이며 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통합력을 가진 남북 결합체가 형성되어도 역시 통일국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연합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김정일도 납득하고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자신이 선호하는 체제는 숨긴 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불가피한 대세라고 하면서 마치 좌파 세력들이 이를 추구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인 핵 개발이라는 최대의 폭력을 마치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사고 자체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대표적 재야인사로 활동해오면서 <분단체제론>을 주장해온 백낙청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60년대 후반 이래 민중문학,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민족민중운동>을 해오다가 모든 <모순의 근원>으로서 <분단체제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기대어 근대를 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이는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라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났으며 한반도에서는 그 하위체제로서 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냉전체제는 자본주의 <착취체제>로서, 남북대결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발전국가, 안보기구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

가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 그리고 남북한의 지배 세력의 상호의존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단체제는 다시 하위체제로서 '87년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분단체제의 하위체제이면서 동시에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서 분단체제 자체를 흔들었지만 허물지는 못했다고 보았다. 2016-17년 촛불은 바로 이러한 '87년 체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명으로서, 이를 계기로 분단체제 자체를 전복시키고 나아가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동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촛불 시대> 1기 정부에 해당되며, 다만 문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역사의 우여곡절에 불과할 뿐, 다시 한 번 촛불혁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전술방안이다. 그것은 <아무런 형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중이 실질적 참여로 창의적인 국가구조를 이루는 것을 포함하는 통일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변혁적 중도주의>로서, 그 구체적 대안으로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을 주장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핵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6·15 공동선언 이후 김정일은 틀림없이 핵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잘못 대응한 결과 북핵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여기서 북한이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현재 김정일은 자신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핵과 미사일의 포기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북한으로서는 전쟁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닌 만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제재는 국제공조가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 북한은 바로 핵실험과 한미훈련 중단 요구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한 길은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고 이에 따른 비핵화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 2항에 따른 연합제인 것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남북 연합을 진전시켜 민중적 기반을 구축하면 미일의 강경론을 물리치고 미국과의 대화 실현, 핵미사일 실험·발사를 중단시키고 평화협정과 남북연합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높은 수준의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가 목표인 만큼, 장기적 목표인 적화통일은 가망성 없는 현실에서 낮은 단계나마 연방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래 들어와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을 근대, 탈근대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 분단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근대성 자체를 성취하면서도 근대를 넘어 전세계 특히 제3세계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대 가로지르기(trans-modernity)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운동에서 비롯된 우리의 전통은 최근 촛불시위까지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

에 있다. 특히 6•15를 통해 정상적인 국민국가 건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대 적응의 길 열렸다고 보고 있다. 통일의 像과 관련해서는 분단체제가 해소되면서 등장하는 것은 단일형 국민국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한 뿌리를 근거로 하는 단일국가론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통일은 민족적이지만 민족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남은 것은 연합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뿐인 것이다.

IV

'80년대 말 공산권 붕괴와 북핵 개발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통일의 상은 비교적 뚜렷하였다. 물론 북한에 동조하는 사회세력과 정당들이 있었지만, 이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래 백화제방식 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도기 관리 차원에서 '민족(공동체)'를 기본으로 하는 '남북 연합정부' 수립이라는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엄존했던 냉전체제 속에서 승리한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을 대상으로 체제 선택으로서의 통일을 은폐하면서 강요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졌다. 그러나 공산권 멸망 이후 북한이 선택한 북핵 국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불리한 카드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민족개념은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북한에 호응하는 국내 좌파의 담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무대를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